

ISKS Research Series 3

國際高麗學會學術叢書

통일을 지향하는 언어와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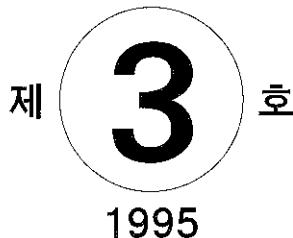
김 김 진 철 우 앙 編

국제고려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ISKS)

國際高麗學會學術叢書

통일을 지향하는 언어와 철학



김 진 우 양
철 編

국제고려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ISKS)

「통일을 지향하는 언어와 철학」

차 례

서문

언어 분과 : 민족과 언어	김진우	5
철학 분과 : 민족과 철학	김철양	8

언어분과 : 민족과 언어

민족통일과 남북의 언어격차	김민수	9
남북한의 언어정책	최기호	30
남북맞춤법의 차이와 그 통일문제	박갑수	42
조선어 규범화를 위한 리론과 실천	김동찬	58
남북규범문법의 이질화문제	고영근	69
남북한 어휘의 이질성 문제	심재기	82
우리의 어휘정리사업과 거기서 얻은 경험과 교훈	심병호	93
남북언어학자들의 국어사연구에 보이는 문제점	정 광	105

철학분과 : 민족과 철학

한국사상맥락에서 본 통일·평화관	김영두	119
미륵사상에서 본 통일방향과 통일한국의 의의	김삼용	129
주체적견지에서 본 민족통일의 철학	박승덕	139
민족적주체에 대한 철학적고찰	최상현	161
통일교육의 실천철학적 의의	김도종	175
민족자주의 원칙과 조국통일	김현철	187
통일의 철학과 철학의 통일	이삼열	199

언어분과 : 민족과 언어

내가 처음 북한의 언어에 관심을 갖게된 것은 1966년 UCLA에서 학위를 마치고 67년 Illinois대학으로 부임하기 직전 MIT에서 Postdoctoral Fellow로 일년을 지내고 있을 때였다. 어느날 Harvard대학의 Yenching 도서관에 들렀다가 북한의 간행물을 보게되었다. 책갈피를 열어보았을 때 맨 먼저 받은 인상은 국어가 마치 채나 키로 걸러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바닷가의 모래를 채로 치면 굵은 모래, 조개껍질, 및 해초들이 걸려져서 남은 것은 가는 모래뿐이듯. 이것이 남북언어의 차이를 조사해보게된 계기가 되었다. 지금은 북한의 언어연구가 거의 유행처럼 되어있지만, 70년대에는 자료도 드물었고 북한간행물의 열람이 금지되어 있었던 때라, 여러가지 애로가 많았다.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아 종로 4가에 있던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북한자료를 열람했으며, 동경의 학우서방에서 북한서적을 구입했고, 이 방면의 선구자인 김민수교수, 홍연숙교수들의 논문에서 도움을 받았다.

국어학자가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국토통일을 지향한 언어의 통일일 것이다. 철자법에서 자모순, 표준어휘에서 규범문법, 컴퓨터자판에서 로마자화 표기법에 이르기까지 통일안이 절대적으로 또 시급히 필요하다. 현재상태로선 공통교파서나 공동사전 하나를 편찬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제 한국어가 “국제어”가 되어 한반도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호주, 유럽, 남미 등지에서 국어를 쓰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마당에, 이들 해외의 선생과 학생들에게 공통된 철자법과 규범집, 및 어휘사전 한권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한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반세기의 정치, 지리적인 분단과 독자적인 언어정책, 그리고 광복후 국토가 분단될 당시 국어가 서구의 영어나 불어처럼 엄격히 규범화되어있지 않았다는 점, 또한 남의 “표준어”的 토대가 이른바 중산층의 “양반어”였음에 비하여 “문화어”的 토대는 노동계급의 “서민어”였다는

점등에서, 국어는 국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었던 독일이나 중국어의 경우와는 달리, 50년이라는 세월만에 인한 언어변화 이상의 변화와 차이를 초래하게 되었다. 나는 이를 일찌기, 두 조각가가, 같은 테마의 작품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세목이 분명치 않고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두 다른 조각품을 새기게 된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한 바 있다.

국제고려학회가 1990년 창설된 이래 그 언어부회위원장은 역임하면서, 나의 유일한 사업계획은, 남북의 국어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어의 통일을 모색하게 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국제정세에서의 냉전의 종식, 이념적으로 중립적인 국제고려학회의 성격, 그리고 내 근무처가 제삼국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가능할 것 같았다. 그 첫 시도가 1993년 1월말 오오사까에서 열린 한국이중언어학회의 제 4차 국제학술회의였다. 이 회의에 남북언어비교의 패널을 마련하고 북한학자들을 초청하였으나 아무도 참석치 않았다. 두번째의 시도가 그해 8월말 북경에서 열린 “통일을 지향하는 언어와 철학”이라는 주제의 회의였는데, 여기 언어분과에 실린 여덟편의 논문들이 바로 그 때 발표되었던 것들이다.

남한학자들의 논문들은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으나, 그 주제는 매우 고르다. 김민수교수는 남북언어격차의 총괄적상황, 고영근 교수는 규범문법, 심재기교수는 어휘, 박갑수교수는 맞춤법, 정광교수는 국어계통론, 그리고 최기호교수는 언어정책에 있어서의 남북의 차이를 각각 비교검토하고 있다. 이와 대조해서 두 북한학자는 북한언어정책의 타당성을 서술하고 있는데, 김동찬교수는 규범화의 이론과 실천문제를, 심병호교수는 사전편찬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서술하고 있다.

북경회의의 마지막날 종합토론이 있었는데 그때의 내 기록을 보니, 다음 합의사항이 이루어졌다고 적혀있다.

1. 우리가 서로를 잘 몰랐다. 더 알도록 노력하자.
2. 표준어와 문화어 사이에는 이질성보다 동질성이 훨씬 더 많다.
3. 상대방을 의식한 언어정책을 쓰도록 하자.

4. 다시 만나자.

이것은 기대보다 더 좋은 성과였다. 왜냐하면, 나는 첫날의 인사말에서, 이번 회의에서 아무런 합의를 못보더라도 다시 만나자는 합의만 본다면 만족하겠다고 말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날 저녁에 만찬을 같이 하고, 담배갑과 술병을 교환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아리랑을 비롯한 민요를 한 목소리로 부르던 감격이 자못 새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2월 중순으로 예정되었던 제 2차 모임이 마지막 순간에 연기된 것은 매우 섭섭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년 전, 1월로 예정되었던 모임이 8월에 실현되었던 것처럼, 금년 2월의 모임도 지금 연기되었을 망정 여름이나 가을엔 기필코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 글을 맺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하자. 북경회의에서 깨닫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작한 것처럼, 남북의 언어격차가 경종을 옮려야 할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다. 문자와 문법이 같고, 가장 이질화되었다는 어휘도, 다름보다는 같음이 더 많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의 말다듬기운동, 즉 북의 문화어운동과 남의 국어순화운동이 독자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추는 비슷했다는, 김민수교수의 이른바 “회귀작용”은 국어통일의 전망에 대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태도”이다. 우리는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독선적인 입장을 버리고, 타협적이고 융화적인 태도와 이해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모임에 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북경회의의 성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국제고려학회의 송남선 사무국장과 김성수사무차장, 그리고 전 이중언어학회회장 심재기교수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1995년 3월 19일

국제고려학회 언어부회 위원장 김진우

철학분과 : 민족과 철학

이 른문집은 제 1 차 《통일을 지향하는 언어와 철학》(철학분과 : < 민족과 철학 >)에 제출된 연구론문을 묶은것이다.

<국제고려학회>와 <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는 1980년대 후반부터 계속하여 조선반도의 통일을 위하여 남북과 세계 각지의 조선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분야와 연구방법, 그리고 입장은 다르다하여도 상호간의 협조와 신뢰, 단결의 분위기 속에서 조선민족의 자주와 번영,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 노력하며 조선학연구를 통하여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것을 공통의 목적으로 삼아왔던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이 른문들은 철학과 사상사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제각기 이제까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며 연구해온 무게있는 른문을 제기하고 진지하게 토론한것이며 그 때의 분위기는 지금도 생생하게 상기할수 있다. 북에서 오신 3명의 보고자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제문제를 룬하였으며, 특히 박승덕선생은 북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제기하였으며, 최상현선생은 민족적주체에 대하여, 김현철선생은 민족자주의 원칙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남에서 오신 4명의 보고자는 제각기 자기가 텁각하고있는 종교적립장에 충실히 서면서 협조와 신뢰, 단결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고 조국통일에 이바지하자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그 속에서도 기독교의 텁장에서 룬한 이삼열선생의 <통일의 철학과 철학의 통일>은 인상적인 성과작이라고 느꼈다. 김영두선생은 민족적종교의 텁장에서 김삼용선생은 미륵사상에서 통일을 룬하며 김도종 선생은 민족공통성의 텁장에서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룬하고 있다. 독자 여러분의 숙독을 바라는바이다.

국제고려학회 철학부회 위원장 김 철 앙

민족통일과 남북의 언어격차

김 민 수

I. 서론 : 남북의 언어문제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단일민족이다. 그래서 남북의 언어가 방언의 차이는 있어도 같은 민족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조성된 언어의 격차는 날로 도를 더하여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단 48년의 상황은 단순한 言語의 隔差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분열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늘날 이처럼 우려의 소리가 높은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언어의 異質化는 즉 민족의 이질화이기 때문이다.

언어의 격차는 서로 다른 정치제도만으로도 조성되지만, 남북의 격차가 심한 요인은 넘나들 수 없는 남북의 장벽에 있었다. 이 격차가 얼마나 큰가 하는 문제는 이미 많은 지적이 있었고, 필자도 몇번 언급한 적이 있다. 당장은 물론 이러한 실상을 파헤칠 필요가 있으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통일의 방안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일후에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온갖 갈등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하는 장기적이고 면밀한 대책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또한 남북의 격차를 부각시킨 나머지, 남북에서 따로따로 다듬은 말이 묘하게 같아지는 현상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거나 기존의 同質性도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¹⁾. 그러나 이 기존의 동질성은 언어통일의 가능성을 담보하는 토대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결과적으로 같아진 사실은 우연이 아닌 필연적 回歸作用으로서 言語統一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저력이라는 점에서 역시 중요하다. 남북의 격차를

흥미위주로 비교하거나 신기하게 느끼고 있을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우선 남북언어의 격차가 얼마나 큰가를 종합하되 감상에 사로 잡히기보다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전통적 혈연에 더 주목하려고 한다. 다음으로, 이 격차에 대한 통일방안을 모색하되 기술적 방법보다 사안의 성격을 밝혀 질서를 가리려고 한다. 또한 남북이 통일된 후를 예상할 때 언어의 격차로 인하여 부상할 것으로 가상되는 民族的 葛藤을 중시하되, 외형적 통일보다 의식적 統合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 장기적 방안이 무엇인가를 힘써 규명해 보려고 한다.

Ⅱ. 남북언어의 이질화와 격차

남북분단 48년의 격차가 큰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언어는 해방후에 일제하 朝鮮語學會의 규정을 가지고 국어회복을 위한 운동을 거족적으로 전개하여 초기에 남북공통시대가 수년간 지속되었다. 이 운동이 공통분모가 되어 언어의 이질화를 제어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지만, 언어의 격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분단에 비하여 심한 편이다. 그런데 그 격차가 다행히도 초기단계인 語彙차원이기 때문에²⁾, 오늘날 그 이질화의 극복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 전문적인 시각이다.

1. 남북 언어의 비교

우선 남북의 언어가 얼마나 다른가를 밝힐 차례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보고가 나와 있다. 여기서는 편의상 金敏洙(1991a), 기타의 종합정도로 대신하려고 한다. 그 대상은 언어상 표준어와 외래어, 문자상 철자법과 로마자 표기법으로 양분되고, 외래어는 그 표기와 말다듬기로 나뉜다. 그 철자법에는 한글 맞춤법에 외래어 표기법이 있고, 로마자 표기법에는 따로 기계화를 위한 국제표준규격의 로마자 轉字法이 있다. 따라서 말다듬기는 국어순화의 차원에서 따로 다루는 것이 편하겠다.

첫째, 남북의 표준어는 그 명칭과 규정부터 전혀 다르다. 표준어는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³⁾, 북측의 표준어는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지로 하고 평양말을 토대로 하여 이룩된 文化語라고 규정하고 있다⁴⁾. 이에 따라 문화어는 북부의 방언, 특이한 제도, 새로운 말다듬기, 독특한 개념 등으로 남측과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다. 국어연구소의《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1989~1990)》에 다수 기록되어 있으나, 대략 다음과 같은 5종으로 종합된다.

- 1)방언 : 야채(남새), 달걀(닭알), 부루(상추), 마구(망탕), 곤(인차), 떠들다(고다), 부수다(마스다), 가르치다(배워주다) 등.
- 2)제도 : 량권, 밥공장, 분조장, 사로청, 사양공, 양생원, 위생실, 자강도, 지도원, 초대소, 통신원, 합영기관, 행표, 협동농장 등.
- 3)다듬은 말 : 가볍(더하기), 가봉(시침), 가스테라(설기빵), 마멸제(닳음감), 빈대떡(녹두지짐), 샤크카라(제낀것), 턴넬(굴간), 헬리콥터(직승기) 등.
- 4)개념 상반 : 민족주의(불화와 반복을 조성하는 반동적 사상), 동지(혁명 전우의 고귀한 칭호), 종교(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아편) 등.
- 5)발음 : 려관, 선렬, 순리익, 녀자, 니탄, 안팎일[안파질], 넓다[넙다], 넓고[널꼬], 넓기[널기], 얇다[얇다], 짧다[짧다], 밟고[발꼬] 등.

둘째, 남북의 맞춤법은 다행히 그 원칙만은 같다. 周時經을 계승한 일제하의 <통일안>을 다 같이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도 세칙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발견된다. 그 차이를 지적할 것은 남측의 1988년《한글 맞춤법》과 북측의 1987년《조선말규범집》으로서 각각 협행 규정이다. 외래어는 특히 말다듬기의 대상이나, 북측에서 외래어와 외국말을 구분하고 있다. 또 급진하는 국제화시대에 부응

하지 못하고 있는 로마자의 표기문제도 있으나, 국제표준기구의 轉字法은 통일되었다.

- 6)자모 : 24자모(40자모), 그거느드띠르…포흐ㅏ ㅑ …느나페니뇨…
—ㅓㅓ (ㄱㄴㄷㄹㄹ…ㅎㅎㅎ…ㅏㅏㅏㅏㅏㅏ), 그기역(기윽), ㄷ디귿(디을), ㅅ시읃(시웃), ㅋ 쌩기역(된기윽) 등.
- 7)형태표기 : 되어(되어), 이오(이요), 이었다(이였다), 가까워(가까와), 숫양(수양), 할까?(할가?), 일꾼(일군), 일찌이(일찌기), 살살이(살사리), 싸라기(싸래기), 미장이(미챙이), 호르라기(호르래기) 등.
- 8)사이 ㅅ : 사잇소리 제 한적 표기(표기하지 않는 원칙), 넛가(내가), 잇몸(이몸), 나뭇잎(나무잎), 뱃병(배병), 뱃마루(퇴마루), 가윗일(가외일), 곳간(고간), 셋방(세방), 숫자(수자), 찻간(차간) 등.
- 9)외래어 : 러시아(로씨야), 그리스(회랍), 유럽(구라파), 게임(겜), 달러(딸라), 댄스(딴스), 버스(빠스), 시멘트(세멘트, 세멘), 센터(센타), 와이셔츠(와이샤쓰), 초콜릿(초콜레트), 펑프(뽕프), 탱크(땅크) 등.
- 10)로마자 표기 : ㄱㅋㄲ k(g)k' kk(k(g) k gg), ㅈㅊㅉ ch(j)ch' tch(ch(j)ch jj), ㅑㅓㅓ ya ö ü(ya o u), ㅕㅕ ae oe wo(ae oe wo), 이순신 Yi Sun Shin(Ri Sun Sin), 다보탑 Tabot'ap(Tabotap) 등.

셋째, 문체도 남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다. 문체의 종류나 구성과 같은 기본적 원리는 별로 다를 것이 없겠지만, 가령 글의 종자와 주제사상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제목구성, 代用보다 같은 표현의 반복, 수령에 대한 독특한 존대 등이 북측의 차이로 꼽힌다. 특히 구어체에서는 수령에 대한 존경과 흡모, 적에 대한 경멸과 증오 등의 표현과 음색을 규격화하고 있다. 다음에 약간의 예를 들어 그 전형을 보이는 정도로 그치고자 한다. 원문대로 옮기되 밑줄은 필자가 표시했다.

- 11) 제목 : “우리 시대 연극예술 건설과 창조의 참된 길을 밝힌 불멸의 총서” 《조선어문》 77(1990. 1), “언어학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언어연구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자” 위 책 78(1990. 4), “기계 번역에서 제기되는 출입구언어의 구조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문제” 위 책 79(1990. 7),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형상한 단편소설들에서의 감정선의 특징” 위 책 80(1990. 10) 등.
- 12) 표현의 반복 : 우리 인민들의 오랜 언어생활과정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입말체는 고유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입말체에서 고유어를 기본으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입말체의 형성발전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입말체는 인민들의 입말에 토대하여 이루어졌다. 입말체에 의한 우리 인민의 언어생활은 우리 민족의 형성과 함께 시작되었다. 강상호, 《조선어입말체연구》(1989. 5), 49면 등.
- 13) 수령에 대한 존칭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히신 우리 말의 우수성과 풍부성은 입말체에서도 전면적으로 나타난다. 위 책, 머리말 3~4면.
- 14) 音色 : 우리 말에서 소리빛 같은 물론 사람들에 따라 다 다르기는 하나 이와 함께 그것은 우리 근로자들이 갖추고 있는 고상한 정신 도덕적 풍모를 반영하여 다 씩씩하고 건전하고 부드러운 소리빛 같 이라는 데서는 공통적이다. 간드러지고 연약한 소리빛 같, 우악스럽고 거칠른 소리빛 같은 착취사회에 전형적인 소리빛 같로서 문화 어와는 인연이 없다. 《문화어문법규범》(초고)(1972. 12), 102면.

지금까지 남북언어의 차이를 유형별로 광범하게 비교해 보았다. 细部에 걸쳐 전반을 비교하면 더 많은 차이가 지적되겠지만, 이 정도로 도 남북의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가를 느끼기에 충할 것이다. 남북분

단 반세기 미만의 이 격차가 정치적 제도의 차이와 넘나들지 못하는 장벽에 가장 큰 원인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에 덧붙여 놓쳐서 안될 것은 말다듬기를 지칭하는 이른바 어학혁명이다. 국어순화에 해당하는 다듬은 말은 확실히 남북의 격차를 벌리는 또 하나의 요인이고, 과격한 사건이었다.

2. 어학혁명과 다듬은 말

말다듬기, 즉 국어순화는 해방직후부터 일제잔재의 일소와 국어회복의 차원에서 남북을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 민족적 운동의 하나였다. 그 맥이 남측의 국어순화, 북측의 말다듬기로 이어졌지만, 특히 북측의 말다듬기는 1964년 김일성의 1·3교시를 계기로 적극화하기 시작했다. 15년에 걸쳐 5만개 어휘를 다듬었으니 과연 혁명이었다. 그러나 지나친 급진정책에 제동이 걸려, 반으로 후퇴하면서 다듬은 그 말은 얼마만큼 보급된 느낌이다. 우선 이에 직결된 글을 인용해 보기로 한다.

15) 1964년 교시 : 단어는 우리 고유어에 근거하여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외래어도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 고유명사는 그 나라 발음을 그대로 따르는것이 좋습니다. 계속 써야 할 한자어가 얼마나 되고, 버릴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하여 버려야 할것은 대담하게 사전에서도 빼버리는것이 좋습니다.
(초록)

16) 1966년 교시 : 우리는 한자말과 외래어를 고유한 우리 말로 고치고 우리 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방언에서도 좋은것들을 찾아내여 써야 합니다. 고유어를 적극 찾아 고장이름도 우리 말로 부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의 이름은 될수록 고유어로 짓는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있는 고유어를 찾아쓸뿐 아니라 고유어로 새말을 만들어쓰기도 하여야 합니다. (초록)

17) 1974년 교시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학혁명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1974년 11월 13일 어학혁명을 갑자기 다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현재 쓰이고 있는 한문투의 말도 우리 말 사전에 넣을데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 『현대조선말사전』(제2판)은 주체의 언어리론이 밝혀주고 있는 우리 말 사전의 올림말수록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 있다. 정순기, 리기원『사전편찬리론연구』(1984. 8), 17, 23면.

- 18)다듬은 말 : 1964년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말로 고쳐쓰게 된 한자어와 외래어만 하여도 약 5만개에 이른다. 약 5만개의 어휘를 다듬어 사회에 내보냄으로써 우리 말 어휘구성에서 민족적특성이 높이 발양되게 되고 인민들의 언어생활에서는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게 되었다. 최정후, 『조선어학개론』(1983. 6), 178면.

새로 나온 책 『다듬은 말』국판 404페지, 『다듬은 말』(국어사정위원회 편찬)은 지금까지 쓰이여오던 다듬은 말가운데서 인민들의 언어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파악성있는 용어 25,000여개를 살고있다. 책에 실려있는 용어들은 이미 써오는 과정에 광범한 대중적토의와 심의를 거쳐 고른것이다. 『조선어문』루계 65호(1987. 1), 49면 예고⁵⁾.

이상으로써 북쪽의 말다듬기가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짐작할 것이다. 우선 그 대상은 한자어와 외래어이며, 그 명목은 국어학에서도 주체를 세워 우리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사람들이 그것을 쓰으로써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도록 함에 있다고 했다. 이른바 主體性 확립의 한 가닥이다. 모든 사람이 한자말이나 외래어를 쓰는 사람은 민족적 긍지가 없는 사람이고 자기 나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유식하고 민족적 자부심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서는 말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조사연구와 강한 통제를 병행해 갔다. 사상적으로 동원하고 사회적 운동을 벌이며 신문 지상토론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지혜도 동원했다고 한다. 사회과학원에서 통제하다가 내각직속 국어사정위원회를 두어

널리 통제를 강화하며 黨的으로 널리 선전했다. 연구는 이 하나의 목적에 따라 집중시켰다. 1968년 5월에 창간한 계간 교양지《문화어학습》지는 지금도 계속하며 말다듬기, 즉 어휘정리를 주도하며 널리 선전하고 있다.

그 결과, 이미 언급한 대로 5만개 어휘에 이르는 다듬은 말을 재검토하여 줄인 절반을 확정했다. 이 양의 축소는 그 사업이 순조롭지 못했음을 뜻한다. 확정해 놓았다는 25,000개의 다듬은 말도 특수한 경우에 본래 말을 쓸 수 있거나 새로 다듬은 말 뒤에 본래 말을 괄호 속에 넣어 쓸 수 있게 하고 있다⁶⁾. 言語改造란 원래 성공시키기 어려운 사업이다. 북쪽의 말다듬기가 거의 성공한 것처럼 널리 평가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짐짓 혼선을 빚고 있는 예가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III. 남북 언어와 통일의 기저

이러한 큰 격차가 있는 반면에, 전통적 同質性과 回歸性도 있다. 그런데 남북의 이질화와 그 격차에 주목하는 것은 통일을 모색하기 위하여 당연하고 절실하지만, 기존의 동질성이나 결과적인 회귀 작용에 대하여 소홀히 했던 것은 큰 잘못이었다. 이것이야말로 통일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천명할 기본이다. 이것은 즉 이미 이루어 놓은 남북의 統一案인 까닭이다⁷⁾. 특히 언어는 통일 후에 야기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 갈등과 관련하여 가장 난제를 안고 있는 점을 짚어 우려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1. 동질성과 회귀성

이미 金敏洙(1989)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북의 맞춤법은 기본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남북의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우선 전체로 보아 일치하는 것은 1) 글을 가로 쓰되 내려 쓸 수 있다는 것, 즉 내려쓰기를 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한글을 모아쓰기로 한다는 것, 즉 가로 풀어쓰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⁸⁾. 3) 한글을 띠어쓰며 문장부호를 쓴다는 것, 즉 붙여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4) 새받침을 써서 形態主義

철자법을 취한다는 것, 즉 表音主義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척에도 다른 점보다 같은 점이 더 많지 않겠는가? 남쪽 사람이 북측 신문을 보거나 북쪽 사람이 남측 신문을 보았을 때에 부분적인 차이를 빼고는 대체로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점을 실증하고 있다. 즉 아직도 많은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남측의 국어문화 바꿈말과 북측의 다듬은 말을 비교하면, 의외로 일치하는 예가 적지 않다. 좀 장황하지만, 이은정(1991)에서 같은 예를 뽑아 보기로 한다. 표기나 띄어쓰기는 남측의 차이를 밝히지 않았다.

19) 바꿈말과 다듬은 말이 같은 것

價格 欲, 假橋 림시다리, 甘味 단맛, 鋼素 쇠바(줄), 牽引車 끌차, 揭示板 알림판, 結果枝 열매가지, 結實 열매맺이, 硬水 센물, 耕土 갈이흙, 繼走 이어달리기, 高價 비싼값, 括弧 묶음표, 塊莖 둉이줄기, 球莖 알줄기, 丘陵 언덕, 口味 입맛, 屈折 꺾임, 弓術 활쏘기, 根耕 그루갈이, 根毛 뿌리털, 根接 뿌리접, 氣孔 숨구멍, 氣管 숨통, 奇數 홀수, 氣泡 거품, 桔梗 도라지, 落水 물떼기, 烙印 불도장, 卵形 알모양, 耐病性 병견딜성, 內皮 속껍질, 冷却 식힘, 淚管 눈물관, dial 글자판, 圖表 금립표, 腸體 몸통, 豆科作物 콩과작물, dribble 물기, 賣買 팔고사기, 賣票所 표파는곳, menu(요리)차림표, 名稱 이름, 母樹 어미나무, 蜜腺 꿀샘, 密植 배게심기, 薄紙 얕은종이, 剝皮 껌질벗기기, 斑點 얼룩점, 反芻 새김질, 半夏 끼무릇, 發芽 쪽트기, 酸酵 띄우기, 放飼 놓아기르기, 防風林 바람막이숲, 排水 물빼기, 伐根 그루터기, 伐期齡 벨나이, 凡例 일러두기, 步幅 걸음너비, 複芽 겹눈, 服裝 옷차림, 覆土 흙덮기, 本名 본이름, 附箋紙 붙임쪽지, 敷地 터, 負債 빚, 附表 붙임표, 分娩 새끼낳이, 鼻孔 코구멍, 沸騰 끓음, pipe 물부리, 관, 砂囊 모래주머니, 飼料作物 먹이작물, 四捨五入 반올림, 飼育 기르기, 치기, 捅木 꺾꽂이, 常綠樹 늘푸

른나무, 霜害 서리피해, 生繭 생고치, 盛土 壤쌓기, 洗毛 毛털씻기, 洗滌 씻기, 樹幹 나무줄기, 受紛 (奚)가루받이, 受信人 받는 사람, 水深 물깊이, 收葉量 뽕(잎)거듭량, 水溫 물온도, 樹脂 나무진, 驅化 길들이기, switch 여닫이, 乘車券 차표, 施肥 거름주기, 植樹 나무심기, 填土 질흙, 甚大하다 매우 크다, ice cake 얼음파자, 芽接 눈접, 萼 꽂받침, 液肥 물거름, 揚錨 닻올림, 養蜂 벌치기, 羊舍 양우리, 揚水 물푸기, 羊齒植物 고사리식물, 漁油 물고기기름, 瘦病 들립병, 染料作物 물감작물, 葉序 잎차례, 葉芽 잎눈, 誤字 틀린(글)자, 屋外 바깥, wire rope 쇠바줄, 料金 献, 溶着 녹여붙임, 乳糖 젖당, 油劑 기름약, 肉汁 고기즙, 輸讀 돌려읽기, 隱蔽하다 숨기다, 감추다, 耳殼 귀바퀴, 移積 옮겨쌓기, 耳下腺 귀밑샘, 益蟲 리로운벌레, 鱗莖 비늘줄기, 引上 올림, 引受證 받음표, 一年生 한해살이, 日附印 날자도장, 妊娠 새끼배기, 雌雄同體 암수한몸, 作文 글짓기, 栽植 심기, 適期 제철, 재매, 轉卵 알굴리기, 全無하다 전혀 없다, 接木 접(붙이기), 正誤表 고침표, 整地 땅고루기, gesture 몸짓, 繼絲 실커기, 粗飼料 거친먹이, 縱線 세로줄, 廚房 부엌, 枝枯病 가지마름병, 持參하다 가지고 오／가다, 振動 흔들림, 遮蔽 가림, 摧乳 젖짜기, 採炭 탄캐기, 背推 등때, 窄孔 (구멍)뚫기, 體鏡 몸거울, 體長 몸길이, 推移 움직임, 側溝 옆도랑, 側茅 결눈, 層高 층높이, 值 献, 沈漬 담금, 沈下 내려앉음, cover 씌루개, 덮개, 막기, cold cream 기름크림, climax 절정, 脫脂綿 약솜, 脫脂乳 기름뺀 젖, tunnel 굴, thema 주제, 土工 壤일, 土層 壤층, 透水性 물스밈성, pipe(기계)관, 編上靴 목구두, pin 못, 汗腺 땀샘, 合接 맞접, 顯花植物 꽃식물, 血統 피줄, 狹義 香은뜻, holding 머물기, 擴散 퍼짐, 獲得하다 얻다 등(187여 종).

20) 바꿈말(괄호)과 비슷한 다듬은 말

假名 가짜(거짓)이름, 假植 림시(한때)심기, 可溶性 풀림성(녹는성질), 干潮 감(썰)물, 感光紙 빛느낌(해받이)종이, 嵌合 맞춤(끼워맞춤), 鋼塊 강(강철)덩이, 强剪定 센자르기(된다듬질), 開

梳 열린도랑(도랑), 皆伐 다(전부)베기, 開花期 꽃피는(꽃필)때,
 乾髮器 머리말리개(모발건조기), 乾燥機 말림기(말림틀), 結水 얼
 음얼이(얼어붙음), 傾動 기울임(기울어움직임), 骨軟病 뼈 무름증
 (병), 骨折 뼈부러지기(짐), 公示 알림(널리알림), 過熱 지내익기
 (농익음), 掛圖 걸그림(거는도표), 蕎木 키(큰키)나무, 咬合 맞물
 기(맞물림), 拘禁 가두기(가둠), 挖鑿 파기(팜), 歸還 되돌이(돌아
 음), 根瘤菌 뿌리(뿌리혹)균, 寄生 더붙어(더부)살이, knife 밥상
 칼, 상칼(칼), 卵管 알관(알길), 耐鹽性 소금(소금기)견딜성, 耐
 火性 불견딜성(불에 견디는 성질), net over 손(그물)넘기, net
 touch 그물다치기(그물닿기), 路肩 길섶(갓길, 길어깨), 老化 낡
 기, 鈍기(늙음), 肋木 살대틀(틀사다리), 單眼 한(홀)눈, 短日性
 植物 짧은낮(짧은별)식물, 待合室 기다림칸(기다리는곳, 대기
 실), 倒伏 넘어짐(쓰러짐), 導水路 끌물길(물댈도랑), 徒長 헛자
 라기(웃자람), 塗擦 문질러바르기(바르기), 動脈瘤 동맥불루기(동
 맥혹), 凍害 얼굼(언)피해, 燈火管制 불가림(불빛가리기), 磨碎
 갈아바수기(갈부수기, 갈아부수기), 蔓延 퍼지기(퍼짐), 埋沒 매
 우기(파묻음), 埋設工 묻힌구조물(묻치기), 眼鱉 자는(잠)누에,
 牧草 먹이풀(풀), 霧中信號 안개(안개중)신호, 密播 배게뿌리기
 (배게뿌림), 反訴 맞(되)소송, 瘢痕 흠집(딱지자국), 發根 뿌리내
 리기(뿌리내림), 發熱 열나기(열남), 發育不全 제대로 못자라기
 (자람), 防濕 누기막기(습기방지), 排尿 오줌누(빼)기, 倍數 곱질
 수(두배), 胚乳 눈젖(씨젖), 白癆 흰곱리질(흰설사), 變態 모습같
 이(바뀐모습), 別項 판대목(판항목), 保菌者 균가진(병균지닌)사
 람, 腹痛 배아픔(앓이), 不定根 막난뿌리(막뿌리), 乳腫 봇기(봇
 는병), 孵化 알까기(알깨기), 分根 뿌리가르(나누)기, 分蘖 아지
 (새끼)치기, 不燃性 불안탈(타지않는)성, 砂壤土 모래메(참)흙,
 產卵 알낳이(기), 散播 흩어뿌리기(흩뿌림), 撒水 물뿌리기(물뿌
 릴), 償還 갚아주기(갚음), 生絲 생명주실(생실), 石築 돌쌓기(돌
 측대), 楔形 쇄기모양(꼴), 世帶 살림(가구), 摩庠症 가렵증(가려
 움증), 小株密植 적은대수배재심기(적게 잡아 배재 심기), 燒土

구운 훑(흙태우기), 受檢 검사받기(음), 受精 정자(정)받이, 受胎 태았기(새끼배기), 热蠶 다자란(익은)누에, scrap 오려붙이기(오려붙임), spoon 오목술갈(숟가락, 양숟가락), 昇降 오르(타고)내림, 乘下車 타고내리기(타고내림), 實綿 송이목화(목화), 野積 한데쌓기(들가리), 陽乾 별말림(별에말리기), 養苗 나무모기르기(모기르기), 洋服地 양복천(양복감), 羊水 모래집(새끼집)물, 魚群 물고기떼(고기떼), 漁肥 물고기(생선)거름, 役(用)牛 부림소(일소), 連帶債務 함께물림(함께 갚은 채무), 年輪 해돌이(나이테), 軟水 연한물(단물), 軟化病 물령병(무름병), 裂果 터진열매, 터지는열매(열매터짐), 鹽臧 절임, 소금절임(소금저장), 葉捲蟲 잎말이벌레(나방), 葉脈 잎줄(잎줄기), 豫察 미리살피기(미리살핌), 完熟 다익기(다익음), 外傷 다친상처(곁상처), 右舷 오른배전(우측뱃전), 越冬 겨울나이(겨울나기), 婆黃病 누렁시듬병(누른오갈병), 流產 애지기, 애지우기(새끼지우기, 아이지우기), 幼兒 유치원어린이, 나이어린이(어린아이), 幼葉 어린눈(어린싹), 誘引劑 벌레꼬임약(찜약), 流刺網 흐름(흘림)걸그물, 乳劑 젖약(젖빛약), 幼蟲 새끼(애)벌레, 輸番 돌림차례(차례돌림), 陰乾 그늘말림(그늘말리기), 移送 보내기(간데보내기), 移秧機 모내는기계(모심개), 引入線 끈선(끌어들임줄), 鱗片 비늘쪽(쪽), 貸借 세내기(세냅), 立枯病 마름병(잘록병), 粒度 알굵기(알크기), 入墨 먹물넣(뜨)기, 入荷 들어오기(들어옴, 들여옴), 作條 이랑짓기, 골치기(골타기), 蠶室 누에칸(누엣간), 貯水沓 물잡(받)이논, 摘芯 순치(따)기, 積置 쌓기(쌓아놓음), 剪定 가지자르(치)기, 剪枝 가지자르(다듬)기, 切開 가르기(가름), 切土 훑따(깎)기, 點播 띄어심기(점뿌림), 照度 비침도(조명도), 早熟 올익기(음), 種根 씨앗(씨)뿌리, 種卵 종자(씨)알, 種附 쌍붙이기(접붙이기), 縱書 내려(세로)쓰기, 主根 염지(원)뿌리, 柱頭 꽂술(암술)머리, 主芽 원(으뜸)눈, 駐車場 차마당(차두는곳), 紙袋 종이자루(종이부대), 脂肪기름, 둉이기름(굼기름), 支承 받치개(받침), 遷延 늦어지기(늦음), 地表 땅겉(땅표면), 着色 색칠, 색들이(색깔내기), 採光 빛

받이(빛 받아들임), 菜豆 나물당콩(강낭콩), 採卵 알받(걸)이, 採蜜 꿀뜨(따)기, 菜田 남새(채소)밭, 採種 씨앗받기(씨받이), 씨밭기), 初產 첫배(첫배낳기), 草地 풀판(풀밭, 꿀밭), 觸角 더듬뿔(더듬이), 催青 알깨우(깨)기, 縮葉病 잎줄음(잎오갈)병, 築造 쌓기(음), 側板 옆판(옆판자), collar 깃받이(깃), catalogue 상품목록(목록), corner 구석모서리(구석, 꼭), cross bar 가름대(가로대), 脫毛 털뽑기(털빠짐), 播種 씨뿌리기(씨뿌림), 被履 쪘움, 덮임(덮기, 덮개), 被寫體 쪽을대상(쪽하는것), 荷造 짐꾸리기(포장), 下車場 짐부림터(내리는곳), 寒波 추위파(추위), 舷燈 배전등(배옆등), 血球 피알(피톨), hoch 맞단추, 결단추(걸이단추), 混作 섞음그루(섞같이, 섞어심기), 花冠 꽃갓(꽃부리), 化膿 끓기(음), 後產 태낳이(기), 後熟 뒤익기(마익히기, 마익힘), 燻煙 내굴쏘임(연기쐬기), 休眠期 잠자는시기(잠잘때), 吸盤 빨반(빨판) 등(196여 종).

이것은 남측의 국어순화와 북측의 말다듬기가 결과적으로 같거나 비슷한 것이 많다는 실증이다. 이렇게 많다면 누구나 놀랄 것이다. 서로 비슷한 것을 검토해 보면, 대부분 표현의 차이로 달라졌으나 거의 같은 말이다. 협의도 없이 따로 전개한 운동의 결과가 이처럼 같아졌다는 것은 물론 回歸作用의 토이며, 그 원인은 같은 전통을 가진 同質性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도 많은 기왕의 동질성에 더 많은 주목을 들리며, 이 사실을 言語統一을 쉽게 접근시키는 기초로 삼자는 것이다.

21) 남북 비슷한 말의 유형

同義語 선택의 차이 : 가짜—거짓(이름), 림시—한때(심기), 다—전부(배기), 꽃피는—꽃필(때), 머리말리개—모발건조기, (말림)기—틀, 걸그림—거는도표, 한—흘(눈), 얼굼—언(피해), (알)까기—깨기, 물고기—생선(거름), 오른—우측(벳전), 누에칸—누엣간, 원—으뜸(눈), (꾀)알—틀 등.

名詞形, 派生形의 차이 : (뼈)부러지기—부러짐, (맞)물리기—

물림, 되돌이—돌아옴, (배)아픔—앓이, (알)낳이—낳기, 별말림—별에 말리기, 물렁병—무름병, (겨울)나이—나기, (그늘)말림—말리기, 받치개—받침, (빛)받이—받아들임, (씨)뿌리기—뿌림, 덮임—덮개, (태)낳이—낳기 등.

類似語 선택의 차이 : 풀림—녹는(성), 감—썰(풀), 빛느낌—해받이(종이), 센자르기—된다듬질, 열음열이—열어붙음, (뼈무름)증—병, 지내—농(익음), 붙어—더부(살이), (알)긁기—크기, (그물)다치기—닳기, (길)섶—어깨, 넘어짐—쓰러짐, 끌물길—물댈도랑, 헛자라기—웃자람, 곱절수—두배 등.

意味 細密化의 차이 : 맞춤—끼워맞춤, 기울임—기울어움직임, 알림—널리알림, 키—큰키(나무), (뿌리)균—혹균, 밥상칼—칼, 소금—소금기(견딜성), 문질러바르기—바르기, 물고기—고기(떼), 비늘쪽—쪽, 첫배—첫배낳기, 깃받이—깃, 구석모서리—구석 등.

略語 사용의 차이 : 강—강철(덩이), 생명주실—생실, 가렵—가려움(증), 정자—정(받이), 나무모—모(기르기), 씨앗—씨(뿌리), (옆)판—판자 등.

複合 순서의 차이 : 살대틀—틀사다리, 모습같이—바뀐모습, 구운흙—흙태우기, 터지는열매—열매터짐, 돌림차례—차례돌림 등.

말다듬기는 매우 적극적이고 거의 강제적인데, 국어순화는 소극적이고 선택적인 성격이다⁹. 즉 정부차원의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다른 점은 방법상의 차이다. 이 차이는 남북이 같은 말이라는 일반의 인식과 관련된다. 즉 남측의 바꿈말이 사장되어 있는 상태라면, 위에서 지적한 回歸作用의 양이 그만큼 감소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이 사업의 남북합작일 것이다. 이 합작을 가능케 하는 근거도 바로 이들 같은 말이고, 그 인식을 바뀌게 하는 것도 이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2. 언어격차와 지역감정

남북 통일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통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도 대단히 높아졌다. 그런데 이 통일은 民族統一이기 때문에, 진정한 통일은 言語統一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전제가 매우 중요한 까닭은 특히 통일 후에 야기될 남북간의 갈등을 분석해 보면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어떻게든지 남북이 통일된다면,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내왕하며 접촉하게 될 것은 물론이다. 이때에 남북출신이 구별되는 점은 여럿이겠지만, 가장 뚜렷이 나타날 것은 출신지역의 특이한 언어다.

言語는 원래 민족을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인 동시에 그 방언은 생장한 그 지역을 식별해 주고 있다. 방언은 이론상 어느 언어에나 존재한다. 그러나 이 구별이 어떤 이익의 차별에 악용된다면 그 民族和合을 위해서 여간 불행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차별하면 자연히 지역적 갈등이 생기고, 지역적 갈등은 지역적 감정으로 번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는 호남과 영남과의 정치적 차별이 선거에서 지역감정을 유발시키고도 지역분단으로까지 번진 가슴 아픈 경험을 이미 겪고 있다.

이 湖嶺南의 분단은 지난 시절 정치가의 씻지 못할 죄악이다. 어쨌든, 이 지역감정의 해소는 무엇보다 우리가 당면한 최대 과업이다. 물론 정치적 분단은 정치에 원인이 있는 만큼 당연히 정치적으로 해소해야 하지만, 접촉에 임해서 야기되는 지역감정은 언어로 해소할 소관이다. 그런데 통일후에 남북이 접촉하면서 갈등이나 감정이 유발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남북화합은 요원하고, 그렇게 갈망하던 통일을 혹시나 실망하거나 후회한다고까지 말할 사람이 전혀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역차별을 없애는 방법으로 본적이나 출신지를 서류에서 삭제했다고 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것도 문서상으로는 필요한 방언이나, 대면해서 방언으로 구별되는 차별은 해소되지 않는다. 이 문제에서는 방언에 대한 재인식이 중요시된다. 방언이란 항상 있는 것, 방언으로 인한 지역분단보다 민족화합이 더 중요하고 높은 차원이란 것, 분열한 민족은 국제적으로 당당한 성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 등과 같은 새로운 인식을 말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단시일에 완성 되기는 어렵다.

IV. 결론 : 언어통일의 전망

남북통일을 긍정적으로 볼 때, 그 기본적인 성격은 남북의 민족통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시각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남북의 言語隔差로 천명되었다.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은 물론이나, 그 해결방법은 이보다 전통적인 同質性과 回歸性에 더 주목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북의 다듬은 말과 남의 바꿈말과의 비교와 분석을 시도했다. 물론 양자의 성격은 차이가 있으나 많은 回歸作用이 은연히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이르렀다.

다듬은 말과 바꿈말 약 5백여개의 비교에서 같은 말이 약 37%, 비슷한 말이 약 39%이며, 양자를 합하면 무릇 76%나 된다. 이 비교는 비록 한정된 자료로 인하여 부정확한 집계이기는 하나, 그 경향을 읽기에는 부족하지 않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 분석의 결과는 言語上의 回歸率이 겉보기보다 매우 높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완전회귀율이 약 37%, 부분회귀율이 약 39%이기 때문이다¹⁰⁾. 그리고 이 경향은 언어통일을 위한 합의의 가능성성을 강하게 시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남북의 언어통일은 이처럼 같은 말을 토대로 해서 비슷한 말을 협의하는 순서가 바람직하다. 합의되지 않는 말은 1988년《표준말 규정》에서 도입했듯이 양자를 복수로 수용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복수표준어는 어느 시기에 가서 택일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 안이 새로 인식되고 합리적으로 운용된다면, 그 어려운 통일문제에도 하나의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다. 그래서 난제의 해결에는 그 성격파악이 중요하고, 더 모색할 것은 그 순서와 과정이다.

이것은 외형적인 언어통일을 위한 방안이다. 서두에서 이미 강조했

듯이, 이러한 형식보다 더 필요한 것은 의식의 統合이다. 서로 접촉하면서 남북차별을 유발하지 않는 의식,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간직할 정신활동이다. 통일후에 더욱 절실한 과업이다. 한 세기가 걸려서 완성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면밀한 계획과 장구한 대책이 시급하다. 새로 생긴 속담에 ‘버스 떠난 후에 손들기’란 말이 있다. 중요한 시간을 허송하다가 사태에 직면한 다음에 대책을 서두르는 격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

- 1) 이 현상을 金敏洙(1991a)에서 回歸作用이라고 논하고, 또 남북의 공통점 5개항은 金敏洙(1989)에서 지적한 바가 있었다.
- 2) 方言間 어휘의 차이와 비슷하다. 가령, 누렁지(中部), 깜밥(전라), 누런밥(경상), 가마치(함경), 가매티(육진), 바꽈이(평안), 누랭이(제주) 혹은 부추(중부), 솔(충청), 정구지(경상), 염지(함경, 육진), 부초(평안), 쉐우리(제주) 등과 같고, 으(중부)→어(경상), 어(중부)→오(평안), 애(중부)→애(전라, 경상) 등과 같은 일부 음운의 차이도 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차이가 심하면 소통되기 어렵고, 분화된 시기가 오래면 오델수록 외국어처럼 거의 통하지 않게 될 것이다.
- 3) 이것은 1933년《통일안》부터 “표준말은 大體로 現在 中流 社會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라고 규정해 써 오던 것을 1988년 개정한《표준어 규정》에서 개정한 협행규정이다.
- 4) 북측에서는 1947년《통일안 해설》에도 인민위원회 겸열과 심사로 남측과 같았으나, 1948년《조선어 신철자법》에서 “現代 朝鮮 人民의 言語意識 가운데에 共通의으로 把握할 수 있는 것”이라는 식으로 수정했다가, 1966년 金日成 5·14 교시를 계기로 그러한 文化語가 확립되었다. 이것은 7·4 共同聲名에 이은 1972년 북측의 새 헌법과도 관련된다. 즉 首都가 종전의 서울에서 평양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아래 예에서 대조한 것은 괄호 속이 북측의 말.
- 5) 예고된 이 책은 中國에서 나온 복사판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

다. 이 복사판은 판권이 삭제된 관계로 그 출판 시기와 출판사를 알 수 없는 것이 흠이다. 원책에 접하기 전에는 부득이 1987년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에서 출판한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 이 복사판에 의하면, 책 내용은 머리글 1면, 일러두기 2~3면, 차례 4면, 1. 학술 용어와 일반어 5~378면, 2.동식물 이름 379~398면, 3.벼, 과일 이름 399~401면, 4.광물, 암석 및 고생물 이름 402~406면이다. 406면을 예고에서 404면으로, 실제 402면을 차례에서 401로 착오가 생긴 까닭은 3번과 4번에서 각각 1면씩 후에 중보했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이 책은 후일 1987. 8. 20. 외국문도서출판사 발행으로 밝혀졌다.

- 6) 《다듬은 말》(1987)일러두기 12개 항에서 4.본래말을 쓰기로 한경우, 5.본래말을 쓸 수 있는 경우와 다듬은 말을 팔호 안에 넣을 경우, 6. 본래말을 팔호 속에 넣어 쓸 수 있는 경우, 7.본래말과 다듬은 말을 배합하여 쓸 수 있는 경우, 12.새로 다듬은 말은 국어사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 등을 규정했다.
- 7) 남북의 언어통일은 당연히 그 격차를 해소시킴에 있으나, 방법상으로 보면 이 보다는 그 同質性과 回歸作用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순서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 8)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남북 모두 있으나, 북에서는 1964년 교시에서 이러한 文字改革을 하더라도 남북이 통일된 다음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9) 북측에서는 국어사정위원회의 《다듬은 말》(1987)머리글에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이번에 내보내는 다듬은 말을 집필활동과 교육사업, 국가문건들과 언어생활에 반드시 받아들여 쓰도록 할것이다.”라 하고, 남측에서는 문교부의 《국어순화자료》제1집(1977) 머리말에서 “바꾼 용어 중에는 약간 어색한 것도 있겠지만, 국어 순화 운동의 중요성에 비추어 많은 전문가와 관계 인사들이 성의를 다하여 심의 결정한 것이므로 각 기관과 단체,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이를 아껴 활용해 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했다.
- 10) 위의 남북비교는 편의상 현행규정으로 한정했으나, 그 규정의 변천을 비교해서 얻은 回歸作用은 더욱 믿음직하다. 가령, 사이스은 남측의 축소와 북측의 확대로, ㅋ頭音은 북측의 확대로, 빼어쓰기는 남측의 축소와 북측의 확대로, 외래어 표기는 原音主義의 북측 확대

와 남측 축소로 각각 종전보다 훨씬 더 접근된 양상이 그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回歸作用의 좋은 예로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제표준 기구(ISO)에서 요구한 국제표준규격인 로마자의 轉字法은 서로 절충한 남북단일안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남북 언어통일을 위한 합의의 한 선례로서 가치가 있다. 金敏洙(1991a)참조.

〈참고문헌〉

- 김용진(1947). 《1946년 9월 8일에 개정한 한글 맞춤법 해설》 평양 : 조선출판사.
- 조선어문연구회(1948). 《조선어 신철자법》 1950. 4. 평양 : 조선어문연구회.
- 과학원(1954). 《조선어 철자법》 평양 : 과학원.
- 김일성(1964).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 《문화어학습》 1968년 2호, 1~7.
- 김일성(1966).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려나갈데 대하여> 《문화어학습》 1968년 3호, 1~9.
- 문교부(1977). 《국어순화자료》 제1집, 서울 : 공판책자.
- 박용순(1978). 《조선어문체론연구》 1978. 6. 평양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국어사정위원회(1981). 《외국말적기법》 1982. 10.22. 평양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사회과학원(1981). 《현대조선말사전》 제2판, 평양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최정후(1983). 《조선어학개론》 평양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문교부(1984). <국어 로마자 표기법> 정부《관보》 9648(1984. 1. 21.), 4~5.
- 국어사정위원회(1984). <고친 외래어 표기> 《문화어학습》 1984년 3호 (1984. 7. 11.), 25~26.
- 정순기 · 리기원(1984). 《사전편찬관리론연구》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 金敏洙(1985). 《北韓의 國語研究》 서울 : 高大出版部.
- 문교부(1986). <외래어 표기법> 정부《관보》 10232(1986. 1. 7.), 4~17.

- 국어사정위원회(1987). 《조선말규범집》수정판, 1988. 2.16.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 국어사정위원회(1987). 《다듬은 말》, 평양 : 외국문도서출판사.
- 문교부(1988). <한글 맞춤법> 정부《관보》10837(1988. 1. 19.), 3 ~31.
- 문교부(1988). <표준어 규정> 정부《관보》10837(1988. 1. 19.), 32~64.
- 송기중(1988). <북한의 로마자 표기법> 《국어생활》15(1988. 12. 24.), 107~124.
- 북한언어연구회(1989). 《북한의 어학혁명》 서울 : 도서출판白衣.
- 전수태 · 최호철(1989). 《남북한 언어비교》 서울 : 도서출판 녹진.
- 국어연구소(1989~90).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 I. 발음 · 맞춤법편, 1989. 5. II. 고유어편, 1989. 5. III. 한자어 · 외래어편, 1990. 6. 서울 : 국어연구소.
- 高永根(1989). <북한의 말과 글> <북한의 인식7> 서울 : 을유문화사.
- 金敏洙(1989). <南北韓의 현행 맞춤법, 표준어 문제> 《세국어 교육》45(1989. 12.), 10~17.
- 金敏洙(1990). <言語와 民族의 問題> 《二重言語學會誌》6(1990. 6.), 5~17.
- 이은정(1991). 《남한에서 순화한 말/북한에서 다듬은 말 국어 순화 자료집》 1991. 5. 서울 : 국어문화사, 이은정, (1992), 《남북한 어문 규범 어떻게 다른가》 (1992. 1. 서울 : 국어문화사), 137~626 재록.
- 金敏洙(1991a). <解放後 國語規範의 變遷> 《제2차 연변대학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록문집》(延吉 : 동조직위원회, 1992. 8. 출판), 9~23.
- 金敏洙(1991b). <北韓의 口語體言語에 대한 考察> 《한국어논문집》30(1991. 10.) 서울 : KBS 한국어연구회), 3~34.
- 金敏洙(1991c). <國語規範의 變遷> 《二重言語學會誌》8(1991. 10.), 421~431.
- 金敏洙(1991d).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1945~1990)》4권(편),

1991. 10. 서울 : 도서출판 늑진.
金敏洙(1991e).
<북한의 國語研究 動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6회 국제학술회의 논문집《韓國學의 世界化》
I (1991. 12. 城南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99~
602.

남북한의 언어정책

최 기 호

1. 머리말

1945년 민족이 왜정의 사슬에서 풀려나자마자 불행하게도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지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따라서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다른 정치 생활을 해왔고,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모든 분야에도 서로 이질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형성되었다.

한편, 제2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으로 분단되었던 독일도 이미 통독되었고, 국제가 화해국면으로 전환되었는데도 우리 조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상태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형편이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은 탈냉전 시대의 금세기 안에 반드시 통일을 이뤄야 하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지고 각계 각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준비는 남한과 북한의 정치가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서로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교역량도 점차 늘어갈 것으로 생각되며, 문화면에서도 교류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작은 노력으로 1992년에는 남북한 공동으로 「로마자 표기법」을 통일한 성과도 이루하였다.

이런 면에서 국어학계에서도 남북한 국어통일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서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1983년 9월에 일본 동경에서 “제1회 코리아학국제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몇 차례 비공개 학술회의가 있었으며, 1993년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오오사카에서 국제고려학회와 한국이중언어학회 공동주최로 ‘남북한 언어통일’을 주제로 하여 학술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제 국제고려학회가 주최하여 중국 북경에서 남북한의 정부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최초의 학술회의를 가지게 된은 뜻깊은 일이 아

닐 수 없다. 필자는 북한의 맞춤법을 중심으로 한 언어정책과 남한의 언어정책의 차이점을 고찰하고 남북한 언어통일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1933년 「학술맞춤법 통일안」의 의의

1933년 10월 29일 조선어학회에서 「한글맞춤법통일안」이 통과되었다. 이 통일안이 완성되기까지의 경과를 '한글맞춤법통일안(朝鮮語 緡字法 統一案)' 머리 말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본회는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제정하여 이에 일반 사회에 발표한다. 이 통일안이 이루어짐에 대하여 그 경과 개략을 말하면 1930년 12월 13일 본회 총회의 결의로 한글맞춤법의 통일안을 제정하기로 되어 처음에 위원 12인(권덕규, 김윤경, 박현식, 신명균, 이극로, 이병기, 이윤재, 이희승, 장지영, 정열모, 정인섭, 최현배)으로서 2개년 간 심의를 거듭하여 1932년 12월에 이르러 맞춤법원안의 작성을 마쳤다."

"이 통일안이 완성되기까지에 3개년의 시일을 걸치어 125회의 회의가 있었으며 그 소요의 시간수로는 실로 433시간이란 적지 아니한 시간에 미치었으나, 과연 문자정리란 그리 용의한 일이 아님을 알겠다. 우리는 이렇듯 가장 엄정한 태도와 가장 신중한 처리로써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이제 이 통일안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의 앞에 내여 놓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바이다…(1933. 조선어학회)"

이로서 우리 국어의 맞춤법 규정이 현대적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한글맞춤법통일안」이 1945년까지 남북한에서 공통으로 사용되었고 해방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남북한 맞춤법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해방이후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사상 등이 모두 혼란에 빠졌지만 말의 규범만은 남북한이 같은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언어생활의 안정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말과 겨레와 나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주시경(1876—1914) 선생은 말은 나라의 독립의 바탕이며 흥망을 같이 한다고 주장하였다¹⁾.

이렇게 생각할 때에 왜 정시대에 그 어려운 예전 속에서 우리「한글맞춤법통일안」을 마련한 조선어학회의 공적은 매우 큰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바로 현시점에서 남북한의 조국통일의 밑바탕될 것이라는 점에서 다시 음미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3. 북한의 주요 언어정책과 출판 현황

- | | |
|----------------|--------------------------------------|
| 1948년 : | 「조선 어문 연구회에 관한 결정서」채택 |
| 1948년 : | 「조선어 신철자법」공포 |
| 1949년 9월 : | 한자사용 폐지 |
| 1954년 : | 초, 중교과서「조선어 문법」(김수경서)간행 |
| 1954년 9월 : | 「조선어 철자법」제정공포 |
| 1955년 : | 「조선어 소사전」출판 |
| 1956년 1월 10일 : |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제정, (212쪽) |
| 1956년 : | 「향가해석」홍기문 |
| 1956년 : | 한글가로쓰기 시행 |
| 1957년 : | 「리두연구」홍기문 |
| 1958년 : | 「외래어 표기법(수정보충)」 |
| 1958년 : | 「조선어 철자법 해설」(교원용) 장장명 |
| 1959년 : | 「조선 방언학 개요」김병재 |
| 1960년 7월 20일 : | 「조선언 문법 1」(479쪽) |
| 1960년 : | 「조선말사전」전 6권 출판 |
| 1960년 2월 10일 : | 「조선어학」학술지 간행 |
| 1961년 : | 「조선어사연구」홍기문, 과학원출판사 |
| 1963년 9월 5일 : | 「조선어문법 2」(311쪽) |
| 1964년 : | 「향가연구」정열모 |
| 1964년 1월 3일 : |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 ²⁾ |

김일성교시발표

- 1964년 : 「조선어사연구」홍기문, 박종태
- 1966년 5월 14일 :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려나갈데 대하여」³⁾
- 김일성교시발표로 '문화어운동' 전개
- 1966년 : 「조선어력사문법」홍기문
- 1966년 7월 : 「조선말규범집」
- 1967년 : 「조선어 방언학」한영순
- 1968년 : 「문화어 학습」계간지 창간
- 1968년 : 「한문교육」부활
- 1968년 9월 : 「현대조선말사전」출판
- 1971년 10월 10일 : 「조선말규범집」해설
- 1971년 12월 25일 : 「문화어문법규범」
- 1973년 5월 : 「조선문화어사전」
- 1974년 : 「백과사전」1권 발행 (전 30권 가운데)
- 1978년 9월 9일 : 「조선민족어발전력사연구」, 김영황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 1979년 5월 10일 : 「조선문화어 문법」출판
- 1979년 : 「조선전사」
- 1980년 : 「글쓰기 참고자료」(936쪽)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 1980년 : 「조선어어휘론연구」(176쪽)최완호, 문영호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 1980년 : 「방언사전」김병제
- 1981년 : 「방언에서 찾아내어 쓴 좋은말」, 석문광『문화어
학습』4호
- 1982년 : 「다듬은 말(재검토한 용어)」(약 4만 단어의 한자
말과 외래어 용어들)
- 1983년 6월 25일 : 「조선어학개론」최정후 (407쪽)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 1983년 : 「조선 말례절집」 김동수 (200쪽)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 1983년 9월 8일 : 「세나라 시기의 리두에 대한 연구」 사람, 벼슬,
고장이름의 표기를 통하여 유별지음.
홍기문 심사, (619쪽),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 1983년 : 「외국말적기표」 국어사전위원회 편찬 (240쪽)
- 1984년 : 「고려시가유산연구」 정홍교 (216쪽)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 1984년 4월 25일 : 「백과사전」 6권 (903쪽)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 1984년 : 「조선어사연구론문집」 박정문
- 1984년 2월 25일 : 「조선어학사」 김병제, (276쪽)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 1985년 : 「언어학론문집」 (296쪽)
- 1985년 : 「조선어리론문법」 (형태론) 리근영, (304쪽)
- 1989년 5월 25일 : 「세나라시기 언어력사에 관한 남조선학계의 견해
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수경 (228쪽)
- 1990년 3월 1일 : 「조선말력사」 김수경 (408쪽)

이상에서 해방이후 북한의 주요 언어정책과 출판현황을 넌도별로 살펴보았다. 해방이후 초기에 북한은 새로운 언어정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1948년에 「조선어 신철자법」이 공포되면서 북한의 언어정책은 변화를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⁴⁾. 1949년 9월에는 「한자사용폐지」을 공포하여 한글전용을 실시하면서 북한은 커다란 정책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므로 1948년에 공포한 「조선신철자법」은 북한에서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된 뒤에 북한은 1954년 9월에 「조선어신철자법」을 다시 제정공포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1948년에 제정했던 「조선신철자법」을 손질하여 공포한 것으로 생각되어 북한의 언어 정책은 이

때에 비로소 새로운 맞춤법 시기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리하여 김민수(1985)도 북한의 맞춤법 개혁을 3기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

제1기 (1945—1954) —— 「통일안」시대

제2기 (1954—1966) —— 「철자법」시대

제3기 (1966—현재) —— 「규범집」시대

결국 북한은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을 1954년까지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남북한이 모두 같은 맞춤법으로 20여년간 문자생활을 해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1964년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라는 김일성 교시를 비롯하여 1966년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려나갈 데 대하여」라는 교시가 원인이 되어 1966년 7월에는 <조선말규범집>이 나오는데 이것이 북한의 맞춤법의 「철자법시대」와 「규범집」시대로 대별되는 기점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의 언어정책은 다음 3기로 나눠서 진행되었다고 본다.

①한글맞춤법통일안 시대 : (1933—1954)

②조선어철자법 시대 : (1954—1966)

③조선말규법 시대 : (1966—1993 현재)

4. 남한의 언어정책과 맞춤법 개정

한편 남한의 맞춤법 개정은 1945년에 「개정한 한글맞춤법 통일안」이 확정되었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88년 1월 14일 문교부 고시 제 88-1호로 <한글맞춤법>이 제정되고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남한의 맞춤법개정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한의 맞춤법 개정

1933년 : 「한글맞춤법통일안」

1937년 :	「한글맞춤법통일안」 수정(일부 삭제 및 용어변경)
1940년 :	「한글맞춤법통일안」 원안 일부 개정
1946년 :	「한글맞춤법통일안」 다시 일부 개정
1946년 9월 :	「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 확정
1948년 :	「개정한 한글맞춤법통일안」 한글판 출판
1958년 :	「개정한 한글맞춤법통일안」 용어수정판
1988년 1월 14일 :	「한글 맞춤법」 문교부 고시 제 88-1호
1989년 3월 1일 :	「한글맞춤법」 시행 ⁵⁾

5. 북한의 언어정책의 특성

이렇게 북한 언어 정책의 흐름을 볼 때 몇 가지로 나눠서 그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의 언어철학이 바탕이 되어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소련의 스타лин과 북한의 김일성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1964년과 1966년에 교시형식으로 북한의 언어정책은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되었다.

둘째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 독립 투쟁 시기의 민족어 수호 발전을 위하여 창시하였다고 하는 주체 언어사상을 실천하기 위하여 8가지 정책을 수립하였다.

(1)민족어 교육

조선로동당 정책사 언어부문에서는 민족어 교육을 상세히 표현하고 있다. 북한의 인민들이 우리의 말과 글을 배우지 못하고 그것을 능숙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완전한 자주독립도, 자립적인 민족경제도, 찬란한 민족문화도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없다고 하여 민족어 교육을 강조하였다.

(2)한자폐지

한자는 지난날 봉건통치자들이 사대주의를 하여 들여온 필요없는 외

래적 요소이므로 이것을 폐지하여 사대주의를 타파하고 인민들의 글자 생활을 올바로 한다는 것이다. 1949년 9월에 한자폐지를 시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1947년부터 〈로동신문〉 〈근로자〉 같은 출판물이 순한 글로 나오기 시작하다가 1949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한자를 폐지하게 되었다.

(3)근로자의 문맹퇴치 운동

해방직후 북한에서는 약 230만명의 문맹자가 있었다고 한다⁶⁾. “언어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힘있는 무기”라는 언어 사상을 생각할 때 문맹퇴치는 필수적인 과업이다.

1946년 11월 북조선인민위원회 제3차 확대위원회에서 문맹퇴치사업을 인민위원회의 당면과업으로 선정하여 1947년 12월부터 1948년 3월까지 넉달동안 농한기를 이용하여 문맹퇴치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렸다.

(4)민족어의 주체적 발전과 어휘정리 사업

1964년의 김일성 교시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와 1966년의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펴 나갈데 대하여”가 어휘 정리 사업의 기본 방침이 된다.

어려운 한자를 고유어로 정리하고 외래어도 우리말로 다듬게 된다. 보기리를 들면 다음과 같이 한자말, 일본말, 서양말 들을 우리 토박이 말로 약 5만 낱말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잠 → 누에치기 즈봉 → 양복바지

돈사 → 돼지우리 템포 → 속도

쓰리빠 → 끌신 노크 → 손기척

이러한 어휘정리 사업은 후에 ‘문화어운동’으로 발전하여 북한 언어 정책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5) 언어생활의 기풍확립운동

언어생활에서 외래적 요소나 사대주의적 요소를 타파하고 민족적 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고유어를 살려 쓰고 쉬운 말을 쓰며 규범에 맞는 말을 쓰도록 하였다.

(6) 말과 글의 규범 정리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서 언어를 발전시키고 사회적 기능을 높이는 길은 인민의 언어규범을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 차례에 걸쳐서 맞춤법을 정리한 맥락에서 이뤄진 사업이다.

(7) 문자개혁

글자개혁은 민족문제와 결부되었다고 보고있다. 언어와 민족, 언어와 글자등의 관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언어철학이 바탕에 깔려있다. 글자개혁의 요체는 가로풀어쓰기이며 단어를 형태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람은 김두봉이다. 그가 1950년대에 숙청되면서 글자개혁운동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것을 김일성 1964년 교시에서 지적하고 있다.

1964년 김일성 교시에서 “어떤 사람은 문자개혁을 곧 하자고 하였으나……”에서 ‘어떤 사람’은 ‘김두봉’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김일성의 이런 결정은 남북한 언어장래를 볼 때 잘한 것으로 생각한다.

(8) 남한의 언어문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 말살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말을 한자말, 왜말, 서양말의 잡탕말로 만든다고 보았다. 우리말의 순수성을 지키고 민족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6. 맷음말

남북한이 갈라진지 40여년의 세월 속에서 서로 다른 정치 문화 영향

으로 다른 언어정책이 시행되었고, 따라서 표준말, 맞춤법을 비롯한 문법체계의 이질화가 나타나고, 국어사전에서는 어휘의 의미체계까지 이질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 이것을 방치할 경우 남북한 통일의 장애 요인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남한의 말은 한자말, 서양말, 일본말이 뒤섞이어 심히 오염된 상태이며, 북한말은 정치적으로 물들어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남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해외동포들이 모두 알아듣고 공통으로 쓸 수 있도록 '통일맞춤법'과 '통일국어사전'을 공동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타자기나 컴퓨터의 자판도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남북한의 언어소통은 물론 장차 조국통일의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기에 조국통일의 선결작업으로 학술적으로 남북한 학자들과 해외동포 학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한민족언어공동회의'를 개최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표준말, 맞춤법, 국어사전, 한글의 기계화, 외래어, 표기법 등을 공동연구하여 민족통일의 대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어순화운동의 일환으로 '말다듬기'가 남북한에서 각기 달리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유사성이 많으므로 서로 협력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기를 몇 개만 들면 다음과 같다.

한자말	한글학회	북한
가해자(加害者)	해친이	해친자
간벌(間伐),	속아베기	속음베기
간지(間紙)	사잇종이, 샛종이	끼움종이
결빙(結冰)	얼어붙음	얼음얼이
고어(古語)	옛말	옛날말
공전(空轉)	헛돌기, 겉돌기	헛돌이
단안(單眼)	흘눈	낱눈
연륜(年輪)	나이테	해돌이

이상의 보기같은 것은 공동회의를 통하여 충분히 합의할 수 있으리

라고 본다. 1933년에 ‘한글맞춤법통일안’이 마련되었고 이것을 1945년 까지 함께 썼으며,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도 얼마동안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언어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민족의 통일성 회복을 위하여 국어통일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북한은 모두 새로운 언어 개혁을 중지하고 되도록이면 1945년 이전의 <한글맞춤법 통일안>에 근거하여 협의를 한다면 민족의 소중한 유산인 우리말은 민족통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남북한 당사자들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겸허하게 서로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주〉

- 1) “자기 나라를 보존하며 자기 나라를 일어나게 하는 길은 나라의 바탕을 장려함에 있고, 나라의 바탕을 장려하는 길을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존중하여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1908. 국어문전 음학)
- 2)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 –언어학자들과 담화– (1964. 1. 3.)

“어떤 사람들은 문자개혁을 곧 하자고 하였으나 우리는 그것을 결정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우리가 문자개혁론을 반대한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어떤 사람들은 언어문제를 민족문제와 결부 시키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공통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의 하나입니다. 피줄이 같고 한 령토안에서 살아도 언어가 다르면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조선인민은 피줄과 언어를 같이하는 하나의 민족입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우리 민족은 하나입니다. 지금 남조선사람들이나 북조선사람들이나 다 같은 말을 하고있으며 같은 문자를 쓰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들의 주장대로 문자개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북조선사람들이 서로 다른 글자를 쓰게 되면 편지를 써보내도 모르게 되고 신문 잡지를 비롯한 출판물들도 서로 알아볼수 없게 될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민

족적공통성을 없애며 결국은 민족을 갈라놓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3)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펴 나갈테 대하여(1966. 5. 14)

“과학기술용어뿐만아니라 늘 쓰는 말에도 중국식표현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의 일군들이 「일하는 시간」이란 말을 「사업시간」·「공작시간」이라고 하고 「낮잠」을 「오침」이라고 하는것과 같은것들이 그 전형적 실례로 될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제에 살아보지도 못한 우리의 어린이들까지도 「양복저고리」를 「우화기」라고 하고, 마시는 「차」를 「오차」라고 하며 차그릇을 받히는 「차반」을 「오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표준어란 말은 다른말로 바꾸어야겠습니다. 「표준어」라고 하면 마치 서울말을 표준하는것으로 그릇되게 이해될수 있으므로 그대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가 혁명의 수도인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발전시킨 우리 말을 「표준어」라고 하는것보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것이 옳습니다.

「문화어」란 말도 그리 좋은것은 못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쳐쓰는 것이 낫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말을 잘 다듬기 위하여서는 신문에 내여 지상토론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4) 고영근, 1989, 「북한의 언어 정체」〈북한의 말과 글〉을 유문화사.

5) ① 「한글맞춤법통일안」은 7개장 63개항 및 부록 1(표준말), 2(문장부호)로 구성되었는데, 이를 6개장 57개항 및 부록(문장부호)으로 조정

② 통일안 제 4, 33, 37, 38, 40, 41항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

③ 사전에서의 자모순(字母順)등 미비점을 보완

④ 한자어에서는 사이시옷을 안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⑤ '가Hong 다' → '가타' 따위처럼, 실제 말음 형태를 적음

6) 〈김일성선집〉 1979, 조선로동당출판사, 평양. (제2권)

남북 맞춤법의 차이와 그 통일문제

박 갑 수

1. 머리말

우리 민족은 일찍이 만주 벌판과 한반도 일대를, 그리고 고려 이래 한반도를 삶의 터전으로 하여 빛나는 문화를 누리며 살아 왔다. 그러나 우리의 조국은 제 2차대전 이후 남북이 분단되는 비극을 맞게 되었고, 자유로운 왕래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남북은 언어가 차이가 나 마치 서로 다른 두 개의 언어의 섬과 같은 현상을 빚게 되었다.

같은 민족이라는 조건은 여러가지로 달리 일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혈연이 같다는 것, 언어가 같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남북은 언어가 차이가 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같은 민족의 근거가 되는 “언어가 같다”고 하는 기준에 금이 가고 있다. 이는 참으로 슬픈 현상이다. 민족적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는 하루 빨리 언어의 통일을 꾀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이에 언어의 한 단면인 문자언어, 그 가운데도 표기의 기준인 맞춤법의 차이와 그 통일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해방 이전의 맞춤법

우리의 민족 문자는 한글이다. 이는 1443년에 만들어져 1446년에 반포된 것이다. 한글을 창제한 목적은 훈민정음 서문에 의하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문이 우리말에 어울리지 않아서, 둘째, 어리석은 백성들이 문자로 뜻을 펼 수 없어서, 셋째,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 일용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다. 맞춤법, 다시 말해 한

언어를 표기하는 바른 격식인 정서법은 무엇보다 편리하고 쉽고 정확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훈민정음이 “수비 니겨 날로 뿐에 뻔한 죄 흐고쳐”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보다 정서법의 원리에 부합하는 문자 창제였다고 하겠다.

훈민정음에 나타난 표기 규정으로 대표적인 것은 “終聲復用初聲”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초기의 정음의 용례를 보면 형태소의 원형표기를 위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훈민정음은 표음문자로 만들어졌으나 형태주의적인 철자를 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철자법은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에 적용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월인천강지곡”은 “석보상절”의 표음적 표기와는 달리 형태주의적 표기에 유의하였음을 보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기의 명맥은 길지 않았다. 훈민정음의 “八字可足用”的 소위 “팔종성가족용설”에 의해 음소주의로 바뀐 것이다. 이의 대표적인 문헌은 앞에서 언급한 “석보상절”이다. 이러한 음소주의 표기는 성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이후 즉 계속되었다. 연신군 때의 “진언권공”이나, “육조법보단경” 또는 “번역소학” 등에서는 이 표기가 매우 간결하고 정연하게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음소주의는 중종 때의 역학자 최세진의 “훈동자회”에 그대로 계승된다. 개화 이후에는 국문의 정리가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었으나 개혁과 수구의 양론이 엇갈리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문연구소를 설치하고 “국문연구 의정안”을 채택하여 종래의 음소주의에서 형태주의로 그 방향을 바꾸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무엇보다 주시경의 끈질긴 노력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의정안은 실시에 옮겨지지 못하였고, 주시경의 뜻은 1930년대에 이르러 이루어지게 되었다. 1930년 “개정철자법”에 앞서 조선총독부에서는 1912년 4월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최초로 표음주의를 성문화한 철자법이다. 이 때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①관용적 용법에 따라 발음대로 적음.
- ②아래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ㅏ”로 씀.
- ③된시옷의 기호는 ㅅ만 사용함.

④ 장음 표기는 글자의 왼쪽 어깨에 점을 찍어 표시함.

그 뒤 1921년 일부를 수정 보충하였고, 1930년에 앞에서 언급한 “언문철자법”의 통과를 보아 형태주의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 때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구개음화의 표음적 표기 : 절 집, 횡천, 제일, 체조
- ② 사이시옷의 채용 : 동짓달, 담뱃대, 장스군, 문스자
- ③ 종래의 10개 받침(ㄱ, ㄴ, ㄹ, ㅁ, ㅂ, ㅅ, ㅇ, ㄺ, ㄻ, ㄻ)외에
ㄷ, ㅌ, ㅈ, ㅊ, ㅍ, ㅋ, ㅌ, ㅍ, ㅎ, ㅍ, ㅎ 등 새 받침 추가
- ④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의 구분 표기 : 사람이, 사람은, 넋이,
넋을
- ⑤ 습관적 한자음의 이음 수용 : 시월, 봉어, 사탕
- ⑥ 된소리 글자로 병서 채택 : 씨, 까, 쯔

그러나 “언문철자법”은 보수파인 표음주의자의 강한 반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주시경계의 개혁파의 불만도 사게 되어 조선어학회는 사안으로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1933년 발표하게 되었다. 이 “통일안”은 따라서 총독부 학무국 안과는 달리 민간 단체의 안으로, 전자에 비하여 매우 확충되고, 체재도 정비된 것이었다. 이는 총론과 각론, 부록의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론은 7장, 65항, 부록은 표준어와 문장 부호의 둘로 되어 있다. “통일안”的 특징은 형태주의적 어원 표시의 규정이 더욱 철저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몇 차례에 걸쳐 수정이 피해졌다. 제1차 수정은 1936년에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 간행되어 1937년에 주로 표준말과 관련된 큰 수정을 한 것이고, 제2차 수정은 1940년 원안의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1940년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① 제19항 “갖후다”를 “갖추다”로, “맞후다”를 “맞추다” 등으로 고침
- ② 제30항 사이스온 말 중간에 놓음 : 뒤스간, 등스불, 움스집

그러나 일본이 1939년 조선어 과목을 폐지하는 등 적극적인 등화정책을 펴 맞춤법은 사문화되게 되었다. 그 뒤 1945년 우리 조국은 다행스럽게 해방을 맞아, “한글맞춤법 통일안”은 불문율로 이 나라의 정서법이 되어 문자생활의 규범이 되었다.

3. 남과 북의 표기법의 개정

해방을 맞아 우리 겨레는 자유롭게 우리의 말과 글을 쓰게 되었다. 이 때의 표기는 남과 북이 다 같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기준으로 삼았다. 남북의 이러한 표기법의 공통시대는 북측이 1954년 “조선어 철자법”을 제정 공포할 때까지 지속되었다(1948년의 “조선어 신철자법”을 공식적인 것으로 보지 않을 때). 그러면 다음에 남과 북으로 나뉘 뒤의 표기법의 역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남측에서는 통일안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기에 앞서 이의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46년 통일안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이것이 통일안의 제3차 개정이다. 이때에는 띄어쓰기를 크게 정비했는데, 개정된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①제30항 사이스을 웃말에 받침어 적음 : 넷가, 콧등, 잇파, 챗열
- ②한자의 속음이 된소리인 것은 본음으로 적음 : 정가, 발달, 필시, 결재
- ③조용언, 의존명사, 수량대명사 붙여 쓰기의 3항 폐기
- ④특별한 경우 붙여쓰기 허용 항 신설 : 이곳, 제 이십 일향, 좀더

이러한 맞춤법은 1954년 행정력에 의한 한글파동을 겪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맞춤법이 너무 어려우니 쉽게 고치자는 것이었다. 이때 공포된 “한글 간이화안”은 형태주의적 철자법을 1921년의 “언문철자법”과 거의 같은 음소주의적 철자법으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이는 빗발같은 반대 여론에 부딪쳐 1955년 대통령의 명령 철회로 일단락되었

다. 1958년의 “한글맞춤법 통일안”은 1949년 문교부에서 제정한 “문법 용어”에 따라 용어가 전면 수정되었다. 이로 인해 “움직씨, 그림씨, 겹이름씨”와 같은 고유어에 의한 용어가 전면에 많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 뒤 정부의 철자법 간이화안은 후퇴하였으나, 정서법이 형태주의적 경향이 짙어 고도의 문법적 지식을 갖추지 않고는 제대로 알 수 없어 일반 대중에게 어려운 규범이란 불만은 셋을 길이 없었다. 그리하여 정서법은 다소간에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문교 당국은 아래로부터 끊어오른 여론에 의해 한글 맞춤법의 사문화된 조항을 없애고, 대중에게 쉬운 것으로 고치는 맞춤법 수정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문교 당국이 1970년 국어조사연구 위원회를 구성, 표준말과 맞춤법의 수정 작업에 착수하게 한 것이 그것이다. 위원회는 1972년에 “개정 한글맞춤법(안)”을 마련하였고, 이는 1977년 문교부에 접수되었다. 문교부는 이 위원회의 안을 심의 1979년 최종 시안을 마련하였으나 확정을 보류하였다. 그리고 문교부는 1981년 이 사업을 학술원에 넘겨 재사정토록 하였으며, 1984년 개정안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안도 확정을 보류하고, 1985년 국어연구소에서 재검토하여 보완하도록 하였다. 이에 국어연구소는 이를 재검토하여 1987년 “한글맞춤법(안)”을 마련하여 문교부에 보고하게 되었고, 문교부는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988년 1월 문교부 고시 88-1로 “한글 맞춤법”을 공포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적인 규범으로서의 “맞춤법”은 약 20년이란 긴 진통 끝에 헛빛을 보게 되었고, 1년이란 준비 기간을 거쳐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맞춤법” 개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한글맞춤법 통일안의 불필요한 조항 삭제
- ②미비한 규정 보완
- ③지켜지지 않는 규정의 개정, 현실화
- ④개정의 폭을 극소화

이에 대해 북측은 남측에서 1946년 “통일안”的 일부를 개정한 뒤에

도 이를 계속 시행하였다. 북측은 1948년에 독자적으로 “조선어 신철자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것은 교육성 내에 설치된 조선어문연구회가 마련한 것으로, 1950년 책자로 간행되었다(고영근, 1990). 신철자법은 총칙과 자모, 어음, 문법, 어휘, 문장의 5개장에 걸쳐 64개항으로 되어 있다. 이의 총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어 철자법은 현대 조선인민의 언어의식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형태로 표기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2. 조선어 철자법은 그 표기에 있어 일반 어음학적 원리에 의거하되 조선 고유의 발음상의 제규칙을 존중한다.
3. 문장의 단어는 원칙적으로 각각 띠어 쓴다.
4. 표준어는 조선인민 사이에 사용되는 공통성이 가장 많은 현대어 가운데서 이를 정한다.
5. 모든 문서는 원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획서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조선어 신철자법”은 기본정신을 철저한 형태주의의 원리에 두었다. 이는 “ㄹ, ㄴ”두음법칙의 부정, 합성어 표기에 사이표()사용, 형태론적 어음 교체에 나타나는 새 자모 6자를 제정하는 등 개정이 피해진 것이다.

북측은 1954년 4월 다시 맞춤법을 개정 공포하였다. 이는 과학원 조선어 및 조선문학 연구소에서 새로운 정서법으로 “조선어 철자법”을 제정하여 공포한 것이다. 규범집 머리말에 의하면 철자법의 동요와 언어의 변화를 고려 하여 “한글맞춤법 통일안”에 많은 수정을 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철자법은 “조선어 신철자법”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1948년의 “조선어 신철자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3년 북경학술토론회에 참가한 북한학자의 증언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조선어 신철자법”을 공식적인 것으로

보지 않을 때, 1954년의 “조선어 철자법”은 우리 표기법의 통일시대의 막을 내리고, 남북이 표기를 달리하는 분화, 분기 시대에 들어서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어 철자법”은 전문 8장 56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문장부호가 새로이 조문에 삽입된 것으로 형태주의적 원칙이 명문화된 규범이다. 이 “철자법”은 종전의 “한글맞춤법”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만이 개정된 것이다. 개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24개 자모에서 40개 자모로 바꾸었음 : ㅋ, ㅌ, ㅍ, ㅎ, ㅆ, ㅉ, ㅊ, ㅋㅋ, ㅌㅌ, ㅍㅍ, ㅎㅎ, ㅆㅆ, ㅉㅉ, ㅊㅊ
- ② 자음의 명칭 교체 : “기윽, 나은, 더운…”식으로 개정, “그느드르…”, 허용, “된기윽, 된비읍”으로 개정
- ③ 두음법칙 부정 : 락원, 량심
- ④ “하-” 외에 어간 모음 “ㅣ, ㅔ, ㅓ, ㅕ, ㅗ, ㅘ” 아래 어미를 “여, 였”으로 개정 : 비여, 개여, 세여, 되였다, 쥐였다
- ⑤ 중간 ㅎ은 중간에 놓이는 것이 원칙이나, 거센 소리로도 표기 허용 : 가ㅎ다 : 가타, 부ㅎ다 : 부타
- ⑥ 합성어에 사이시옷 대신 사이표를 씀 : 기’발, 일’군, 낮’일, 대’잎
- ⑦ 표준어 일부 개정 : 노을, 닭알, 부시다, -쟁이, 쫒다, 안해, 웨치다, 우
- ⑧ “-지다”가 붙은 것은 붙여씀 : 견방지다, 넘어지다, 좋아지다, 되여지다

“조선어 신철자법”과 비교할 때에 가장 큰 차이는 새 자모 6자를 폐기하고, 이에 관련된 조항을 폐기한 것이다.

1966년에는 다시 “조선어 철자법”이 개정되었다. 내각 직속 국어사정 위원회에서 공포한 이 “맞춤법”은 “띄어쓰기, 문장부호법, 표준발음법”과 함께 4부중 하나로 “조선말 규범집”에 둑여 있다. 이는 “조선어 철자법”을 재정비한 것으로, 띄어쓰기는 세밀하게 규정하며 별도의

부문을 이루도록 한 것이다. 맞춤법은 7장 28항으로, 띄어쓰기는 6장 23항으로 되어 있다. 개정된 맞춤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부사의 어말음 “어”와 “여”화 : 구태여, 도리여, 드디여
- ②중간 “ㅎ”의 배격, 거센소리 인정 : 가타, 다정타, 혜건대
- ③사이표 삭제 : 그믐달, 기발, 덧이
- ④한자음의 변한 소리 인정 : 나팔, 노, 유리
- ⑤띄어쓰기(6장23항), 문장부호법(19항)별도 규정

북측은 1987년 또 한차례 맞춤법의 개정을 단행했다. 이 개정은 언어 규범이 “사람들이 언어 실천에 더 잘 복무할 수 있도록 정밀화하고,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 보아 국어사정 위원회가 1966년에 공포된 규범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일부 조항과 내용을 수정 보충한 것이다. 이는 7장 27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966년의 규정과 달리 한 향이 들어든 것은 각 규범의 한 향이 각각 증감하고, 부사의 접미사 “이／히”가 분명치 않은 경우의 규정을 개정안에서는 다른 향에 덧붙여 넣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말다듬기에 따라 용어가 많이 수정된 것으로, 실제 규정은 두어 가지밖에 개정되지 않은 것이다. 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파생어에서 빠진 소리는 빠진 대로 적음 : 가으내, 무질, 바느질
- ②사이표 특수 용례 규정 삭제

띄어쓰기는 5장22항으로 되어 있다. 개정된 규범은 좀더 세분하여 정밀화한 것이다. “특수한 말, 특수한 어울림에서의 띄여쓰기” 규정 4 항이 추가되었고, “섞갈리기 쉬운 것들의 띄여쓰기”의 3항이 생략되었다.

이상 남북의 맞춤법의 역사를 대강 더듬어 보았다. 비록 표기법이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다같은 뿌리에서 시작되었고, 본래의 형태주의

적 표기 원칙을 지키고 있어 큰 차이는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4. 남북 표기법의 이질화 실상

우리는 앞에서 남북의 맞춤법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남북의 현행 맞춤법을 비교하여 표기법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살펴보는 차례는 북측의 “철자법”의 차례에 따르되, 공통점 아닌 차이점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우선 차례의 배열은 다음과 같다.

한글맞춤법(1988)	조선어 철자법(1987)
제1장 총칙	총칙
제2장 자모	제1장 조선어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2장 형태부의 적기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3장 말줄기와 토의 적기
제5장 띄어쓰기	제4장 합친말의 적기
제6장 그 밖의 것	제5장 앞붙이와 말뿌리의 적기
부록 문장 부호	제6장 말뿌리와 뒤붙이(또는 일부 토)의 적기
	제7장 한자말의 적기

위의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철자법”에서는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를 다루지 않고 있다. 이것은 별도로 규정되고 있다. “띄어쓰기”는 총칙과 5장 22항으로 되어 있고, “문장부호법”은 총칙과 20항으로 되어 있다. 띄어쓰기는 자세하게 규정하기 위한 조치겠으나 “맞춤법”에 포함시켰어야 좋았을 것이다. “한글맞춤법”은 6장 57항 및 부록으로 되어 있다.

총칙은 표기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북측의 “철자법”은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

소리나는 대로 적거나 습관을 따르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여 형태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한글 맞춤법”은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음소주의가 강조된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한글맞춤법”도 그 내용을 보면 형태주의 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보게 한다. 외래어 표기에 대한 규정은 “한글 맞춤법”에만 보이고 “철자법”에는 보이지 않는다. 남측의 현행 외래어 표기 규범은 “외래어 표기법(1985)”이고 북측은 “조선어 외래어표기법(1956)”이다.

“제1장 조선어 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에서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40자의 자모의 차례와 이름을 들고 있다. 이는 “한글맞춤법”의 24자모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순서와 이름도 같지 아니하다. 이제 두 규범의 자모를 차례에 따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조선어 철자법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ㅏ, ㅑ, ㅓ, ㅕ, ㅗ, ㅕ, ㅓ,
ㅘ, ㅗ, ㅕ, ㅓ, ㅕ, ㅡ, ㅣ, ㅔ, ㅐ, ㅖ, ㅒ, ㅚ, ㅟ, ㅞ, ㅙ, ㅞ

한글 맞춤법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ㅌ,
ㅍ, ㅎ, ㅏ, ㅑ, ㅓ, ㅕ, ㅗ, ㅕ, ㅓ, ㅕ, ㅡ, ㅣ,
ㄲ, ㄸ, ㅃ, ㅆ, ㅉ, ㅒ, ㅖ, ㅔ, ㅖ, ㅚ, ㅟ, ㅞ, ㅙ, ㅞ
ㅞ, ㅙ, ㅞ, ㅞ

자모의 순서는 사전의 표제어의 순서와 직결되기 때문에 언어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바 크다. 따라서 통일이 필요하다. “기윽 니은 디귿…” 등 자모의 명칭 통일은 무난한 것으로 보인다.

“제2장 형태부의 적기”에서 “ㄹ”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것을 예사소리로 적는 것은 남북이 일치하나, 의문형 어미를 “-ㄹ가”로 적기로 한 “철자법”的 규정은 “한글 맞춤법”과 차이가 있다. “한글 맞춤법”에서 의문형 어미는 된소리로 적기로 되어 있다. “-ㄹ까,-ㄹ꼬,-ㄹ쏘냐”가 그것이다. 이는 의문형에 형태적인 차이를 보인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제3장 말줄기와 토의 적기”에서 말줄기의 모음이 “ㅣ, ㅐ, ㅔ, ㅚ, ㅟ, ㅕ”인 경우 줄기 “하”와 마찬가지로 어미 “어, 었”을 “-여/-였”으로 적는 것은 형태주의를 표방한 표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구태여, 도리여, 드디여”의 어말음을 “여”로 적는 것도 다른 점이다. “조선어 철자법”에서는 준말의 표기 규정으로, “않다”, “못하다” 앞에 오는 “하지”를 줄일 경우 “넉넉치 않다”와 같이 “치”로 적는다고 하였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거북지, 깨끗지, 넉넉지, 못지, 섭섭지, 익숙지”와 같은 “하-”의 생략형에 “않다” 또는 “못하다”가 이어지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현실 언어를 수용해 차이가 빚어진 것이다.

“제4장 합친 말의 적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이시옷을 쓰느냐, 마느냐하는 것이다. 북측에서는 “사이표”를 치는 단계를 거쳐 규정에 서 빠졌는데, 협행 “철자법”에서는 사이시옷이 다음과 같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소리 같은 말인 다음의 고유어들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적는다.” 예 : 샛별-새별(새로운 별), 빗바람(비가 오면서 부는 바람)-비바람(비와 바람)

“한글 맞춤법”에서는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 아래의 규정을 이어받아 사이시옷을 쓰도록 하고 있다. 사이시옷의 사용은 형태 구별 및 발음의 변별을 위해 사용하는 쪽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제6장 말뿌리와 뒤붙이의 적기”에서 “철자법”은 본딴말에 뒤붙이 “이”가 붙어서 명사를 이루는 것은 어원을 밝혀 적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종래의 “한글맞춤법 통일안”的 규정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은 “한글 맞춤법”에서는 개정되어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 명사가 된 것만 원형을 밝혀 적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더페리, 살사리, 오또기, 푸서기” 따위는 “-거리다”가 붙을 수 있어 “더펠이, 살살이, 오뚝이, 푸석이”와 같이 어원을 밝혀 적게 되었다. 부사 어에 뒤붙이 “이”나, “히”가 붙는 경우 분명히 구별되는 경우의 규정은 남북이 같다. 그런데 “이/히”가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철자법”에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한글 맞춤법”에

서는 “히”로 적는다고 명문화한 점이 다르다.

“제7장 한자말의 적기”에서 한자말은 소리마다 해당 한자음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남측의 표기 기준과 크게 다른 점이다. 남측은 두음법칙을 인정해 “ㄹ”두음과 구개음화된 “ㄴ”두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철자법”이 한자말에서 모음 “ㅔ”를 “계, 례, 혜, 예”만을 인정한 것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글 맞춤법”에서 는 이 밖에 “예, 폐”를 더 인정한다. “한글 맞춤법”의 이러한 규정은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的 규정을 계승한 것이다.

이 밖에 맞춤법의 문제로 “한글 맞춤법”에서 “렬/률”을 음운론적 조건이 다를 때 구별해서 적기로 한 것, “더우기, 일찌기”를 부사 “더욱, 일찍”에 “-이”가 붙었다고 본 것, “덧니, 사랑니 : 가랑니, 머릿니”와 같이 “이”가 합성어로 쓰일 때 “니”로 적기로 한 것, 한자의 속음을 인정하되 그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 따위가 남북의 표기를 달리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부사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가 음소주의적 표기에 기운 것으로, 형태주의적 표기를 하여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다.

띄어쓰기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분야이다. 단어를 단위로 띄어쓴다는 원칙은 남북이 다 같다. “제1장 명사와 관련된 띄여쓰기”에서 “부문, 분야, 기관, 담당, 관계, 이상…”을 앞 단위에 붙여쓰기, 명사들이 토없이 연달아 어울리는 경우 묶여진 단위별로 띄어쓰기, 단계적으로 마디를 이루는 회의, 사변, 기념일 등의 마지막 명칭의 앞 단위에 붙여 쓰기는 남측의 규범과 다른 것이다. 개념상 “하나의 단위로 묶여지는 명이”는 붙여 쓰는 것이 북측의 원칙인데 대해 남측은 허용 사항일 뿐이다. 칭호, 직명을 앞의 고유명칭에 붙여 쓰기, 고유 명칭 중간의 “직속, 부속, 소속, 산하, 아래…” 등의 앞 단위에 붙여 쓰기, 앞의 명사를 받는 “자신, 자체, 전체, 전부, 전원, 일행, 일가, 일동, 일체, 모두…” 등의 앞 단위에 붙여 쓰기도 남측과는 다른 북측의 규정이다. “불완전명사와 이에 준하는 단위들”을 원칙적으로 앞 단어에 붙여 쓰기로 한 북측의 규정은 이것을 띄어쓰게 되어 있는 남측의 규정과 크게 다른 점이다.

“제2장 수사, 대명사와 관련한 띄여쓰기”에서 “백, 천, 만, 억, 조”와 같이 띄어쓰게 되어 있는 것은 “만” 단위로 띄게 되어 있는 남측과 다른 것이다. 단위 명사와 이에 준하는 명사를 수사에 붙여 쓰게 되어 있는 것도 남측과 다른 점이다. 대명사는 불완전명사와 이에 준하는 것이 직접 어울리는 경우 붙여 쓴다는 것도 남측과 다른 점이다.

“제3장 동사, 형용사와 관련한 띄여쓰기”에서 “고”형 동사에 다른 동사가 녹아 붙은 것, “아, 어, 여”형 및 그 밖의 다른 형 뒤에 보조적으로 쓰인 동사와 형용사의 붙여 쓰기도 차이를 보이는 규정이다. 남측에서는 보조용언은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될 뿐이다.

“제4장 관형사, 부사, 감동사와 관련한 띄여쓰기”에서 명사와 토 없이 직접 어울린 “너머, 따라, 전녀, 걸려”의 붙여 쓰기도 남측 규정과는 다른 것이다. 하나의 대상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의 원칙적인 붙여 쓰기, 속담이나 고유어 성구의 붙여 쓰기도 남측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남측에서는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고유명사는 단위별로 띄어쓰고, 전문용어는 붙여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띄어쓰기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띄어쓰는 정도로 볼 때 북측은 많이 붙여 쓰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남측은 단어별로 너무 띄어 쓰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하겠다.

문장부호는 “조선말 규범집”에는 17가지가 들려 있고, “한글 맞춤법”에는 19가지가 들려 있다. 북측의 “반두점, 같은표”가 남측에는 빠져 있고, 남측의 “가운뎃점, 빗금, 중괄호, 빠짐표”가 북측에는 빠져 있다. 인용표와 거듭인용표의 남북의 부호의 형태가 다르며, 북측의 숨김표가 남측에서는 숨김표와 빠짐표로 나뉘어 있다. 북측의 밑점과 남측의 드러냄표는 구실은 같으나 치는 위치가 다르다. 이 밖에 남북이 다같이 쓰는 부호의 명칭이 9개가 다르다는 차이도 보여 준다.

남북의 맞춤법 외에 또 중국 동포들의 “조선말 맞춤법”이 있다. 이는 동북3성 조선어문화협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조선말 규범집”에 들어 있다. 이 규범집에는 “조선말 표준발음법, 조선말 맞춤법, 조선말 띄여쓰기, 문장 부호법”을 담고 있어 체계가 북측의 그것과 같다.

“조선말 맞춤법”은 1966년의 북측의 “철자법”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5. 맞춤법의 통일을 위한 대책

남북의 언어가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 겨레는 다 같이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맞춤법의 경우는 다른 영역에 비하여 염려하는 것처럼 심각하지는 아니하다. 그것은 종래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바탕이 되어 있으며, 다같이 형태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원칙이 같고 세부적으로 다른 맞춤법을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을 몇 가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형태주의적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음소주의 표기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한다.

형태주의를 취할 경우 아무래도 어렵다는 인상을 배격할 수 없다. 그러나 남북이 같은 규범을 만들기 위하여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음소주의를 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필요해서 음소주의를 택하는 경우는 남북이 차이가 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일이다.

둘째, 표기는 혁신 아닌 보수성을 떠도록 한다.

사물은 끊임없이 변한다.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표기는 이러한 언어를 끊임없이 따라가며 바꾸거나, 선수를 쳐야 하겠는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음성언어에 대해 문자언어는 보수성을 지닌다. 따라서 표기법은 천천히 따라가며 필요할 때 귀납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남북의 표기법이 분화된 이후에 차이가 나게 된 규범은 통일시대의 규범으로 복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개정된 규범은 필요해서, 또는 옳다고 판단되어 바꾸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쪽에서 바꾸지 않았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맞춤법이란 귀납적인 것으로, 필연의 법칙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민족의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호 양보할 일이요, 그 규범은 통일시대의 맞춤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규범의 개정은 이질화 아닌 동질화를 추구하도록 할 일이다. 동일했던 규범이 근자에 서로 다르게 바뀐 것도 있다. 이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역행하는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 차이를 빚게 하는 개정은 절대 삼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표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통일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사이시옷의 문제

사이시옷은 앞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쓰도록 한다. 그래야 형태의 이해 및 발음에 편의를 제공한다.

②어간 모음 “ㅣ, ㅐ, ㅔ, ㅚ, ㅟ, ㅕ” 아래의 “-여/-였”의 문제

“ㅣ, ㅐ, ㅔ, ㅚ, ㅟ, ㅕ” 아래의 어미도 “-여/-였”으로 통일한다. 그래야 형태주의적 표기가 된다. 위의 모음 아래 어미가 “여/였”으로 발음되는 것은 “하-” 아래 “여/였”이 되는 것과 구별된다. 이들은 근원적으로 “ㅣ” 모음동화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③한자의 어두음 “ㄹ”과 구개음화된 “ㄴ”的 문제

한자의 어두음 “ㄹ” 및 구개음화된 “ㄴ”은 1933년의 “한글맞춤법 통일안”에서부터 두음법칙이 인정된 것이다. 그리고 북측에서도 이의 발음을 원칙으로 할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④“이”와의 합성어에서 변이음 “니”의 문제

“이”를 “니”로 적는다는 것은 형태주의적 표기에 어긋나는 것이다.

“한글맞춤법”의 “잔니, 덧니, 사랑니”등은 “잔이, 덧이, 사랑이”로, “가랑니, 머릿니”등은 “가랑이, 덧이”로 적어 형태소를 고정하도록 할 일이다.

⑤띄어쓰기의 문제

“한글맞춤법”은 너무 띄어쓰는 경향이 짙다. 1946년 이전의 규범과 같이 조용언, 의존명사, 수량 단위의 명사는 붙여 쓰는 방법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우리말의 표기 규범에 관해 살펴보았다. 하루바삐 같은 언어 규범 아래 남북이 생활하는 날이 다가오고, 우리민족이 통일되어 열싸 안고 춤추는 날이어서 빨리 찾아오길 간절히 기원한다.

〈참고문헌〉

고영근 편, 「북한의 말과 글」, 을유문화사, 1989

고영근, 「북한의 초기 철자법과 문법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6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고영근, 「남북한 맞춤법 검토, 국어정서법의 종합적 검토」, 한국 정신
문화연구원, 1990

김민수, 「국어정책론」, 고려대 출판부, 1973

김민수, 「북한의 국어연구」, 고려대 출판부, 1985

김민수 편,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 녹진, 1991

박갑수, 「국어의 표현과 순화론」, 지학사, 1984

북한언어연구회 편, 「북한의 어학혁명」, 백의, 1989

전수태, 최호철, 「남북한 언어비교」, 녹진, 1989

조선어규범화를 위한 리론과 실천

김 동 찬

조선어규범화에 관한 리론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언어리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언어학계는 주체적언어리론에 기초하여 조선어규범화사업을 벌려오는 과정에 리론적면에서와 실천적면에서 귀중한 경험을 축적 할수 있었다.

1. 언어규범화에 대한 일반적리해

1) 규범은 언어의 생명

언어규범은 언어의 고유한 특징과 언어구조의 요구를 일반화하여 규제한 언어사용준칙이다.

언어는 규범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현상이다. 언어는 교제의 도구로 이용되는 일종의 약속적기호인것으로 하여 그 자체가 규범이다. 새로 태어나는 모든 개인에게 있어서 언어는 이미 주어져있는것으로 되며 따라서 기성의 사회적약속을 어기고 제나름의 기호를 들고나가면서 교제에 릴할 필요성도 가능성도 생기지 않는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동일하게 이해되고 그들모두가 다같이 지키는 규범성이 파괴된 《언어》는 벌써 죽은 언어이다. 오직 전하여내려오는 기성의 규범이 그대로 통용되고 그것을 지키면서 진행하는 사람들의 언어생활속에만 산 언어가 존재한다. 산 언어는 그 자체가 사회적규범이 되며 규범은 언어존재의 생명선이라는데 언어규범론의 출발적전제가 있다.

2) 보존과 갱신의 통일은 언어의 존재방식

언어가 본성에 있어서 규범적이고 그것을 자의로 바꿀수 없다는것은

결코 언어가 고정불변한 정적인것이기만 하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언어도 시간속에서 변하는 동적인것이며 언어적규범도 일정한 가변성을 지니지 않을수 없다.

사물이 존재하고 발전하는 변증법적원리에 비추어볼 때 언어는 요컨대 보존과 개신의 통일속에 있다고 할수 있다. 보존이 자기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언어의 정적인 상태라면 개신은 그 향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동적인 상태라고 할수 있다. 보존을 확보하는것은 자체의 고유한 질을 유지공고화하기 위한 언어의 본성적요구이며 개신을 실현하는것은 발전과 향상을 이룩하기 위한 언어적운동의 합법적과정이다. 보존되면서 개신되고 개신되면서 보존되는것이 바로 언어가 존재하는 모습이다. 언어는 보존을 기본으로 함으로써 자기의 질을 유지할수 있고 부분적개신을 동반함으로써 시대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발전풍부화되여나갈수 있다.

3) 언어의 변화는 언어사용에서의 변화의 결과(사회언어학 견해에 대한 음미)

언어의 규범성과 그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사회언어학이 일찌기 자기의 견해를 내놓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는것이 필요할것이다.

언어규범론의 견지에서 볼 때 사회언어학, 그중에서도 세칭 언어기호학은 독특한 학설사적지위를 차지한다. 사회언어학은 언어를 일종의 《제도》, 질서로 봄으로써 그 사회적규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소슈르의 언어기호학에서는 《비가역성》(바꿀수 없는 특성 - immutability)과 《가역성》(바꿀수 있는 특성 - mutability)리론이 제창되어 개인에게 있어서 언어적기호는 자유로운것이 아니라 부과된것이며 사람은 주어져 있는 언어에 결박되어있다는것, 그러면서도 언어적기호는 시간속에서 변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언어적기호의 사회적규범성과 그 가변성에 대한 리론을 전개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언어기호학은 언어와 언어적규범에 관한 문제를 사람과 동떨어져있는 어항속의 금붕어를 들여다보듯이 봄으로써 옳게 밝힐수 없었다.

언어기호학은 언어학을 기호학에 종속된 위치에 내려놓고 시간속에서의 언어적기호의 변천을 언어자체의 숙명적이며 자연생장적인 진화

로 봄으로써 언어적 규범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참된 원인을 규명 할수 없게 하였다. 소슈르의 『일반언어학강의』에서는 언어적 기호 속에 하나로 합쳐진 어음적 외피와 의미는 각각 고유한 자기의 생을 영위한다고 하면서 『언어는 혹은 어음에 혹은 의미에 작용하는 허다한 요인들의 영향 밑에서 변천 아니 진화한다. 이 진화는 숙명적이다.』라고 하였다.

『강의』에서는 『시간은 만물을 변화시킨다. 언어가 이 보편적 법칙에 서 벗어날 리유란 없다』라고 하면서 언어에서의 변화의 원인이 시간 그 자체인 듯이 보았다. 그러나 시간이 변화의 필수적 조건으로는 되여도 그 자체가 원인으로는 되지 않는다. 언어기호학은 언어적 기호가 가질 수 있는 『바가역성』과 『가역성』의 근본원인을 진화론적 맵장에서 찾으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언어기호의 비가역성이이라는 것과 가역성이이라는 것을 동시에 말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가역성이자 비가역성이고 비가역성이자 가역성이라는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을수 없었다.

언어적 기호의 보존과 개신의 원인을 언어 자체의 자연생장성에서, 그것도 숙명적인데서 찾으려 한것은 자기의 언어학이 사회언어학이 되기를 바랐고 『언어가 존재하기 위하여서는 말하는 대중(masse parlante)이 필요 하다』고 정당하게 서술하기까지 한 언어기호학으로서는 치명적인 리론적 중도반단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이러한 중도반단으로 하여 언어기호학은 언어의 물질성과 그 존재형태에 대한 문제도 심리주의적인 테두리에서 고찰하는데 그침으로써 언어가 『제도』, 규범이라고 한 자신의 리론을 부정하는데 떨어지고 있다. 『강의』에서는 언어를 한 집단의 사람들의 뇌수안에 『음재적으로 존재하는 문법체계』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는 사람들의 뇌수속에도 간직될수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인민대중의 언어생활 속에서 사용, 응용되며 또한 사람들이 소리내여 말하고 그 음파를 청각으로 포착하여 거기에 담긴 의미를 해득할수 있게 하는 물질적인 실체이다. 언어가 물질적인 실체가 아니라 순수 관념적인 것이라면 도대체 사회적 『기호』로 될수 없다. 언어는 물질적 실체인 것으로 하여 그 존재형태도 『음재적』이기만 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나 있는 『현재적』 또는 『양재적』인 것이라고 하는것이 보다 중요하고 보다 정확하다. 인민대중의 언어생활에서 쓰이지 못하고 개인의 머리속에 들어박혀있기만 하

는 《언어》는 아직은 교제의 도구가 아니며 따라서 사회적 《제도》를 이룰수 없고 규범성의 론의대상이 되지 못한다.

언어에서의 변화문제도 언어자체의 진화적변화문제로 고찰될수 없다. 언어에서의 변화는 어디까지나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언어사용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기인한다. 인민들의 오랜 언어생활과정에서 이제까지의 규범파는 크건 작건 차이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써 주어졌던 언어의 규범과 사용되는 언어사이에는 편차가 조성되게 된다. 이러한 편차가 시간적으로 지속되고 공간적으로 파급되어 일시적, 개인적인것으로부터 항시적, 대중적인것으로 전환될 때 재래의 규범과 맞서는 규범으로 되고 나아가서는 재래의것을 밀어내게 된다.

이와 같이 언어적규범의 보존도 인민들의 언어생활, 언어사용속에서 담보되며 그 변화, 개신도 언어생활속에서 먼저 마련되어 그것을 넘겨 받아 언어구조에 반영되게 되는것이다.

4) 언어규범화의 본질

언어규범화는 언어사용준칙을 확립하기 위한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언어규범화는 언어에 대한 언어사용집단의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작용형태로 된다.

고립된 개별적언어사용자는 언어사용에서 수동적지위를 면할수 없지만 단합된 언어사용집단은 그가 도달한 자주화, 창조화 및 의식화 수준과 그가 처한 사회적환경에 따라서 언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으며 그리함으로써 언어의 자연생장성을 막고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유리하게 목적의식적으로 언어를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언어사용자측으로부터의 언어에 대한 이러한 능동적작용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가 언어규범화사업이다.

언어규범화는 그 내용에 있어서 서로 밀접히 련관된 두가지 측면을 포괄하게 된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실천적으로 언어규범화는 언어사용에 대한 사회적규제이다. 언어사용에 대한 사회적규제는 언어사용자들의 언어생활의 다양성, 불균등성으로 하여 생기는 언어사용에서의 불일치성으로부터 초래되는 필연적요구

이다. 하나의 언어를 둘러싸고 언어사용자들은 연령과 직업, 지식정도, 정견과 신앙, 생활조건 및 지역적분포 등에서 차이를 가진다. 언어 사용자구성의 이러한 다양성은 불피코 그들의 언어생활에 반영되며 이로 부터 언어사용에서 차이를 가져오게 한다. 언어사용에서의 차이의 심각화는 언어의 통신적기능을 약화시키고 사람들의 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조성한다. 이리하여 언어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것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규범적인것으로 지정하여주어야 할 사회적 취사선택, 규범화의 요구가 일정에 오르게 된다. 이러한 요구는 일정한 조항들로 명문화된 문건으로 고착되어 언어사용을 통제하는 사회도덕적, 나아가서는 일정한 법적 효력을 발휘함으로써 실현된다.

리론적으로 언어규범화는 언어구조에 대한 사회적평가이다. 언어구조에 대한 사회적평가는 언어사용에 대한 사회적규제의 기초에 놓인다. 언어구조에 대한 사회적평가에서 중요한 담당자는 언어학전문가들이며 언어구조의 변화상태를 살피고 언어구조를 보다 깊이 재고찰하는 것은 일정한 규범으로서의 언어를 연구서술하기 위한 그들의 일반적인 의무일뿐아니라 언어규범화사업에 이바지하기 위한 그들의 특수적인 의무로 된다. 언어구조에 대한 평기는 언어학전문가들의 과학리론적 및 방법론적 차이에 의하여 달리 될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규범화의 내용이 달리될수 있다. 바로 여기에 언어학자들이 사회와 역사 앞에 지니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

언어규범화의 폭과 심도 및 그 도의적 또는 법적 요구수준은 언어사용집단의 의식화수준 및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적 제조건에 의존되며 또한 언어과학의 발전수준을 반영한다.

2. 조선어규범화에서의 근본립장과 그에 기초한 실천

1)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집단생활에 적극 이 바지하는 규범으로 되게 하는 립장

주체적견지에서 볼 때 규범이 사람들에게 접수되고 그들 스스로에 의하여 지켜지는것으로 되려면 생활적으로는 그들에게 리롭고 쓸모있

는것이여야 하며 리론적으로는 사람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한것이여야 한다. 사람의 본성적요구는 자주성을 실현하고 창조성을 발양하며 의식성을 구현하는것이므로 언어규범도 마땅히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집단활동에 이바지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의 언어규범들은 총체적으로 이러한 텁장을 구현하고있다.

우리의 띄여쓰기규범은 사람을 위주로 하는 독창적인 규범화리념을 구현하고있다. 그것은 이 규범이 독서능률을 올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수천년을 헤아리는 인류의 서사생활력사는 《주어진것》으로서의 언어를 위주로 하고 언어구조적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진 규범의 시행력사였다고 할수 있다. 그리하여 띄여쓰기라고 하면 언어의 기본단위인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여서 쓰기만 하면 그만이고 그것이 사람에게 편리한지 불편한지는 도대체 문제로 상정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단어들의 형태가 고정되어있지 못하고 음절단위로 된 네모글자를 쓰고 있는 우리의 설정에서는 단어를 단위로 한다는 기준만으로써는 사람들의 독서에 편이한 띄여쓰기가 될수 없다. 더욱기 우리 말에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그 기능이 문법화되어있어 사용빈도가 비상히 높은데 한글자로 적혀지는 《것, 수, 데, 뿐…》과 같은 불완전명사들이 많다. 어휘빈도자료에 의하면 총단어 104만 7천 3백 76개인 본문(각종 문체의)에서 《것》은 빈도순위 제3번이다. (그 절대빈도수는 1만 8천 1백 18이며 상대빈도수는 0.01730에 해당한다.) 《수》역시 빈도번호 22로서 비상히 높은 빈도로 사용되며 그밖의것들도 빈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언어구조를 위주로 하여 《단어를 단위로》하는데 얹매여서만 띄여쓰기를 한다면 글이 너무 토막토막 떨어져 읽기에 매우 불편하게 되는것을 피할수 없게 된다. 문제는 사람이 언어구조에 복종하여 이러한 불편을 당연한것으로서 감수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편이를 위하여 언어적 《규범》을 뜯어고치느냐 이렇게 세워진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문제설정자체를 이렇게 하려고는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오직 사람위주의 주체적 언어리론과 규범화사상이 제시됨으로써 문제해결의 근본적으로 새로운 열쇠가 마련될수 있었다.

서사생활에서 내리쓰기로부터 가로쓰기으로 전환한 것 역시 사람들의 요구에 맞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규범을 새로 세운 것으로 된다. 원래 사람의 눈은 가로로 배치되어 있어서 내리쓴 글보다 가로쓴 글이 편리하며 글쓰기도 역시 가로쓰기가 내리쓰기보다 훨씬 편하다.

우리는 언어규범화사업을 인민대중에게 철저히 의거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표준발음법, 띄여쓰기 등 대중의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문제일수록 대중속에 들어가는 사업을 강화하여 이 사업에서 커다란 방조를 받을 수 있었다.

규범이 사람들에게 접수되고 언어생활에서 구현되게 하는데서 신축성과 점진성은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각이한 사회계층들의 언어의식과 언어관습에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내리먹이는 식으로 되여서는 참으로 인민적이고 생활력있는 규범을 세울 수 없다. 우리 학계에서는 발음규범을 비롯하여 년령에 따르는 차이가 심한 부분의 규범은 신축성있게 재정하였다. 어두움 [ㄹ]과 관련하여 그것을 [ㄹ]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함으로써 [ㄴ], [령]발음도 허용하게 한 것은 그 대표적인례이다.

점진성을 구현하는 것도 언어규범화에서 중요한 방도이다. 특히 어휘와 같이 기능이 다면적이고 결합관계가 다각적인 분야의 규범화에서 조급성은 금물이다. 우리는 써보면서 좋으면 채택하고 미타하면 더 두고보는 식으로 말다듬기사업을 점차적방법으로 하고 있다.

2)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창조적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규범으로 되게 하는 입장

언어는 민족의 가장 중요한 표징의 하나이며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부인것만큼 언어규범화사업도 어디까지나 민족의 번영발전에 이바지하는 애국애족적사업이 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언어규범이 무엇보다도 민족성원들의 언어생활을 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것으로 되게 하는데 기여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는 해방직후 일반서사생활에서 한자사용을 폐지하는 일대

변혁을 단행하였다. 이리하여 서사생활에서 자주성을 실현하고 이중서 사생활의 무거운 부담을 털어버리였으며 새로운 한자어가 자꾸 생겨날 수 있는 문자적원천을 영영 메워버렸다.

언어규범이 민족의 번영발전에 이바지하는것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규범내용에서 민족어의 개화발전에 저애로 되는 요소들, 특히는 민족의 존엄에 저촉되는 요소들을 가셔내야 한다. 이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두 <ㄹ>》문제라고 할수 있다. 이 문제는 알타이어계통설과 관련되어있는것만큼 사실상 단순한 언어문제가 아니며 마땅히 민족적 자주성의 립장에서 힘하여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조선민족은 알타이족이 아니라 바로 조선족이기때문이며 또한 우리 말의 일부 현상들이 알타이어계통의 언어들과 공통성이 있다고 하여 그로부터 곧 우리 말이 알타이어계통에 속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으며 더우기 어두에서 [ㄹ]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절대로 설수 없기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은 그 어떤 다른 종족의 후예가 아니였으며 인류문화의 려명기로부터 이 땅에 태여나 자기의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자기의 문화를 찬란히 꽂고싶운 독자적인 단일민족이다. 문헌자료는 우리 말 어두 음에 [ㄹ] 소리가 존재하였다는것을 증시한다. 혜건대 《…약대어나 라귀어나 다외야》에서 《라귀》는 《나귀》를 의미하는 고유어휘인데 이것은 초기국문자료인 《석보상절》(제 9권 15장)의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는 허다하다. 발음생리적으로 보아도 조선사람의 혀가 어두의 [ㄹ] 소리를 충분히 낼수 없을만큼 짧거나 굳은것은 절대로 아니다. 현실적으로 마흔줄, 쉰줄의 장년들까지도 [로동, 리발, 려판]등 어두 [ㄹ] 소리를 충분히 낸다. 아마도 해외의 동포들도 혜건대 《리비아》, 《로마》를 [이비아], [노마]라고는 말을하지 않을것이며 또 《림》가 성과 《임》가 성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임》이라고 적고 또 그렇게 발음하는것이 과연 잘된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것이다. 우리는 언어학분야에 침투한 문화 이동론의 본질을 똑똑히 보아야 할것이며 저도 모르게 조선사람을 발음생리에서의 《열등족》으로 만드는데 길닦이를 하여주지나 않는지 짚어 돌이켜보아야 할것이다. 사실 해방직후 우리가 허구적인 《두음법칙》에 포로되어 대중의 요구를 무시하고 어두 [ㄹ]를 말살하는 표기와

발음 규범을 세웠더라면 오늘 우리 인민들의 발음에서 어두음 [ㄹ]를 들어보지 못할것이며 그들을 영영 《혀짧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본의 아닌 죄책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을것이다.

규범화에서 민족적자주성을 존중시하는 입장은 다른 나라와 관계되는 언어규범화문제에서도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나라이름과 수도이름을 종래의 영어식으로부터 해당 나라 인민들이 하는대로 따르기로 하고 고칠것은 고쳤다. (례: 큐바-꾸바)

우리 학자들이 언어규범화사업을 애국애족적립장에서 벌려나감으로써 국가의 지도도 보다 큰 은을 내게 되었다. 국가에서는 언어규범화 사업을 비롯하여 학계적으로 제기되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필요한 방조를 아끼지 않았으며 행정기구로서 《국어사정위원회》를 내오는 조치까지 취해주었다.

언어규범화를 위한 우리 학자들의 활동에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한것이 조선어학회의 핵심성원들이였다는 사실은 아직 널리 알려져있지 못하거나 덜 강조되어있다. 이분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적지 않은 학자들이 언어학연구사업과 언어규범화사업에서 해방후에도 계속 큰 공로를 세울수 있은것은 그들이 이 사업을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진행한데 근본바탕이 있었다고 하여야 할것이다.

일제의 비밀경찰자료가 명백히 증명하는바와 같이 조선어학회, 특히 그 내부의 비밀조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조국광복회산하 국내조직으로서 일제패망직전까지 국내에 존속하여 조국광복회 10대강령실현과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해방을 위한 국내진공작전에 무장으로 호응하기 위한 비밀활동을 벌리였다. 조선어학회 핵심성원들은 조국이 광복된후 새 민주조선건설에 매진하는 북반부의 유리한 조건에서 언어규범화사업을 보다 높은 과학리론적기초우에서 벌려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언어규범화사업은 종래의 《한국맞춤법통일안》을 모체로 하여 그것을 계속 발전풍부화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었으며 몇차례의 단계를 거쳐 《조선말규범집》(1966년 국어사정위원회 제정)의 제정 공포로써 그 열매를 보게 되었다.

3) 언어를 더욱 정확하고 아름다운것으로 발전풍부화시켜나가는데 이바지하는 규범으로 되게 하는 입장

우리 나라에서 언어규범화사업과 언어규범과 관련이 있는 저술 및 서술들은 그 어느 시기의것이나를 막론하고 거의 모두 자기나름으로 우리 민족어의 우수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고 그것을 더욱 정확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발전시켜나가려는 지향을 안고 마련되었다고 우리는 보고싶다.

언어규범이 언어를 더욱 정확하고 아름다운것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규범화사업이 높은 과학리론적토대우에서 응당한 폭과 심도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것이다.

해방후 우리 학계에서 언어규범화리론은 주체적언어사상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규범화사업은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되었다. 우선 종래의 맞춤법 도거리규범으로부터 서사규범과 발음규범으로의 발전적분화가 이루어졌으며 서사규범은 띠여쓰기, 문장부호법 등으로 더 세분화되었다. 이리하여 언어규범이 언어발전과 언어생활에 보다 넓은 범위에서 심도있게 작용하게 되었다. 원래 《맞춤법》(orthography)과 《표준발음법》(orthoepy) 그리고 《문장부호법》(punctuation)은 각각 다른 성격의 규범들이므로 이것들을 도거리로 《맞춤법》이라고 하는것은 론리적으로도 부조리가 아닐수 없다.

언어규범이 언어를 더욱 정확하고 아름다운것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하려면 또한 규범화사업에서 언어구조를 공시태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언어규범은 언어와 언어사용집단이 시간적으로 일치하는 공시태적 규범이며 언어규범화는 해당 시기의 언어를 수단으로 하고 해당 시기의 인민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사업이다. 해당 시기의 언어구조를 떠나 지나간 어떤 역사적시기애로 거슬러올라가서 그 시기의 언어구조를 가지고 세운 《규범》은 언어를 통시태적으로 다룬 규범으로서 《현재》의 언어사용집단과는 시간적으로 서로 격리된 비현실적인것이다.

우리는 맞춤법규범을 세우면서 자모의 수를 현재의 언어구조를 정확히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확정하였으며 그 이름과 배열순서도 보다 체계성있게 바로잡았다. 오늘날의 우리 말에는 된소리(성문폐쇄음)«ㄱ,

ㄸ, ㅃ, ㅆ, ㅉ》가 《시차적기능》(differentiate function)을 수행하는 독자적인 음운으로서 엄연히 존재한다. 그리하여 순한 소리 《ㄱ, ㄷ, ㅂ, ㅅ, ㅈ》 및 거센 소리(대기음) 《ㅋ,ㅌ,ㅍ,ㅊ》와 대응되어 소위 《삼류음체계》를 이룬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우리 말의 음운구조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순한 소리, 거센 소리가 음운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글자를 가지는것이 마땅하다면 된소리도 역시 음운인것만큼 마땅히 해당한 글자대응이 있어야 한다는것은 부인할수 없는 리치이다.

우리 학계가 언어규범화에서 이룩한 경험과 성과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비결에 대하여 사실대로 지적해야 할것이다.

그 사실이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주체적언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민족어를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혁명하게 이끌어주신 사실이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그 어느 학자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을 먼저 포착하시고 규범화사업도 혁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일부 사람들이 신중한 고려없이 들고나온 문자개혁론을 반대하고 저지시키였으며 우리의 종전 띄여쓰기가 글자들이 너무 떨어져 독서능률이 오르지 못하게 되였으므로 그것을 고치되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고쳐야 하겠다고 그 방향과 방도까지 명철하게 밝혀주신분도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말마디 하나하나에 대하여서도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고 바로잡아주신다. 술병에 붙은 상표에 《수삼로주》라고 씌여있는것을 보시고 《수삼》이 한단어이고 《삼로주》가 한단어 아니 《수삼로주》라고 한데는 《삼》이라는 말 하나가 빠졌다고 지적하여 주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다.

우리는 언어학자이기에 앞서 민족의 성원이라는 숭고한 민족적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애국애족의 입장에서 우리 언어규범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세련완성하여 후대들에게 훌륭한 규범을 물려주고 민족의 통일과 번영에 특색있게 이바지하기 위하여 힘을 합쳐나갑시다.

남북 규범문법의 이질화 문제

고 영 근

1. 들어가기

한 나라나 민족에게 있어 규범문법의 확립은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규범문법이 확립되어 있어야만 그 사회에 통용되는 맞춤법을 만들 수 있고 사전을 편찬할 수 있으며 언어교육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개화기 이후 규범문법의 확립을 위해 바친 시간이 반세기 이상이었다는 사실에서도 규범문법의 통일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은 규범문법에 한정하여 남북의 문법체계와 문법용어를 서로 대조하여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여 보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은 우선적으로는 우리 민족과, 우리말을 학습하는 외국사람들이 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범문법 통일안> 제정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말의 모든 규범을 통제하는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의의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2. 남북 규범문법의 역사

우리말의 문법은 처음은 서양인들의 손으로 연구되었고 갑오경장을 겪으면서 한글이 공용성을 얻게 되자 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껴 우리들 스스로 문법연구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문법학자는 유길준, 주시경, 김희상 등인데 이들은 대체로 체언형태부와 용언형태부를 다 같이 단어로 인정하였다. 그 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최현배가 용언의 활용법을 제창하여 체언형태부만 단어로 인정하고 용

언형태부는 단어의 일부분으로 처리하였다¹⁾. 이러한 최현배의 문법체계는 「우리말본」(1937, 1955, 1971)에 집성되어 있는데 「한글맞춤법통일안」(1933)과 「큰사전」(1947)편찬에도 응용되었으며 나라 안팎의 우리 말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²⁾. 그러나 해방이 되면서 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짐에 따라 남북의 우리말 연구는 서로 담을 쌓은 채 이론과 방법을 달리하면서 독자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해방이 되고 나서 한 3, 4년 동안은 남북의 문법연구와 문법교육은 큰 차이가 없었다. 대체로 해방전의 연구결과를 다시 정리하거나 저술을 다시 짹어 내어 우리말 교육의 지침으로 삼았다. 통일된 문법모형도 없었고 용어도 각각 달랐다. 남쪽에는 최현배, 김윤경, 정렬모, 홍기문, 장하일, 김근수, 이상춘, 박태윤, 박창해, 박종우, 유재현 등이 활약하였다³⁾. 북쪽은 처음은 최현배 등의 해방전 교과서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현재까지는 박상준과 서광순의 문법만 확인되어 있다⁴⁾. 남북의 문법 교육은 1948년의 독자적인 정부수립이 계기가 되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남쪽은 1949년 7월, 문법통일을 위한 첫 시도로서 문법용어를 제정하고 같은 해 9월부터 문법교과서의 검인정제를 실시하였다. 확정된 문교부의 문법용어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이중체재로 되어 있었다. 이 용어는 국어문법뿐만 아니라 외국어 문법교육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법용어의 통일이 계기가 되어 많은 어학자들이 중등학교용 문법책을 썼다. 그러나 이 통일안은 용어에 국한되었고 그나마 한자어와 고유어의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학습자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용어는 물론 체계의 통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육계와 문화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는 1963년에 9품사를 골격으로 하는 문법체계와 한자어 중심의 용어의 통일을 결행(決行)하였다. 통일안의 심의과정과 이의 시행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통일문법에 기댄 많은 검인정 교과서가 두 차례에 걸쳐 나왔다. 그러나 세부에 들어가면 지은이에 따라 견해가 다른 곳이 많아 국어교육에 불편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1985년부터는 단일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국어교육의 지침으로 삼았으며 1991년부터는 옛말에 대하여도 통일된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1세기

가까이 끌어오던 우리의 규범문법이 비로소 통일된 모습을 보이었다. 통일규범문법의 이론과 방법은 문법통일작업에 직접 관여한 남기심·고영근의 「표준국어문법론」(1985, 1993)과 고영근의 「표준중세국어문법론」(1987)에 집성되어 있다. 남쪽에는 60년대에 들어오면서 나라밖의 구조문법과 생성문법의 영향을 받아 우리말 문법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은 학자들의 손으로 밝혀져 왔으며 특히 8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종합화의 기운이 성숙하여 많은 문법서들이 진행되었다⁵⁾. 한편 김민수밖에 몇 사람이 같이 편찬한 「역대한국문법대계」(총102권)(1977~1986)은 1세기에 걸친 한국문법의 업적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어 문법 연구와 문법교육의 조건이 과거 어느때보다 잘 갖추어져 있다.

북쪽의 규범문법은 학문적인 문법연구와 차이가 없다. 남쪽은 이론과 실천을 구분하되 전자는 주로 이론적 성향이짙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후자는 국어교육론자들이나 일선교사들이 전념하는 일이 많다. 북한은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조선어문연구회를 조직하여 남쪽의 한글학회의 「한글」에 맞서 「조선어연구」를 창간하면서 철자법제정, 규범문법 및 사전의 편찬에 갖은 힘을 기울였다⁶⁾. 북쪽에서 어문연구를 주도하거나 문법연구에 전념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김구(金九)의 남북 협상을 앞뒤로 하여 남쪽에서 올라간 사람들이었다. 북쪽은 소련의 언어학자 마르의 야페트이론을 비롯하여 유물론에 근거를 둔 문법이론을 도입함으로써⁷⁾ 1949년 최초의 규범문법서인 「조선어문법」을 편찬하였다. 어음론, 형태론, 문장론의 3부체계로 되어 있으며 8품사를 골격으로 삼았다. 전통문법의 관형사를 제외하였으며 격조사로 단어로 인정하지 않았다. 격조사는 물론 보조사도 단어로 인정하는 남쪽의 규범문법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문법용어는 철두철미 한자어로 되어 있다. 1960년에는 부피가 큰 「조선어문법」(1960, 1963)을 엮었는데 1949년의 체계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관형사를 살리고 보조사도 단어의 일부분으로 봄으로써 철두철미 종합적 체계를 지향하였다. 그뒤 문화어운동이 일어나면서 「조선문화어문법규범」(1976)⁸⁾등 문화어 운동을 뒷받침하는 많은 문법서가 편찬되었다. 용어는 고유어가 많이 채택된 점이 이전과 다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조선어리론문

법」이 개인의 이름으로 간행되었으며 현재로는 김용구의 「조선어문법」(1989)이 북한의 규범문법의 현주소를 알려 주는 최근의 업적이 아닌가 한다.

3. 남북 규범문법의 이질화 양상

남북 규범문법은 이론과 방법은 물론, 품사 및 성분체계에서부터 서술방식에 이르기까지 이질화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⁹⁾. 같은 사회 안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연구를 하여도 의견의 상충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학문이 정상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 남북처럼 반세기 이상 담을 쌓으며 지내왔고 이론과 방법이 서로 다른 상황 아래에서는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이 자리에서는 남북의 어학자들이 서로 머리를 마주 대고 규범문법통일안을 제정한다고 할 때 부딪히는 몇가지 주제를 논의해 볼까 한다.

(1) 문법단위

일반적으로 음성론의 단위는 음운／음소, 품사론의 단위는 단어, 형태론의 단위는 형태고／어소, 문장론의 단위는 어절을 들고 있다. 그 밖에 문장 위의 단위로 이야기(미, 글월, 문장, 문장군, 텍스트)를 드는 일도 없지 않으나 이곳에서는 문장문법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음운／음소는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단위이다. 형태소／어소는 음소／음운의 결합체로서 의미·기능을 지닌 가장 작은 단위이다. 단어는 그 정의를 둘러싸고 논의가 많으나 형태소의 결합체로서 실질형태소를 중심으로 논의되기도 하고 형식형태소에 단어의 자격을 주는 일도 있다. 어절이란 문장을 발성할 때 휴지를 경계로 하여 설정되며 단순한 문장에서는 문장성분의 직접적 소재가 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어절을 단어로 보기도 한다¹⁰⁾. 이들 단위를 변별하는 원리는 통합관계와 계열관계의 기준이다¹¹⁾.

다음과 같은 문장을 예로 들기로 한다.

(1)아기가 웃었다.

(1)은 음소／음운으로는 /a/, /k/, /i/, /k/, /a/, /u/, /s/, /ð/, /s/, /t/, /a/의 11개로 분석할 수 있고 형태소로는 /aki/, /ka/, /us/, /ðss/, /ta/의 5개이다. 북쪽은 현대 언어학의 morpheme에 해당하는 개념을 “형태부”라 하여 일찍부터 우리말의 형태론의 연구에 도입하였으나 객관성 있는 분석원리를 제시한 일이 없다¹²⁾. 그런데 형태소 가운데는 단어와 문장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요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덮개’의 ‘개’는 많은 단어에 분포되어 있고 새로운 단어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단어형성소”라 부를 수 있으나 ‘집옹(지붕)’의 ‘옹’은 ‘집’과 같은 특수한 말에 붙기만 하고 새로운 단어형성에는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장구성소”라 부를 수 있다. 한편 앞의 ‘웃었다’의 ‘었’과 ‘다’는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붙어 문장을 형성하는 기능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문장형성소”라 부를 수 있으나 ‘웃었다’의 한 활용형인 ‘웃었습니다’의 ‘읍니다’는 사정이 다르다. 이 말은 형태소 분석 원리에 따르면 ‘ㅂ, 니, 다’로 분석될 수 있으나 앞의 ‘었, 다’와 같이 독자적으로 동사에 붙어 문장을 형성하는 일이 없다. 이런 점에서 “문장구성소”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종전의 형태소／어소를 “형성소”와 “구성소”로 구분하여 이를 “어소”라는 이름 밑에 싸잡아 넣는 일도 있다¹³⁾.

그러나 단어의 수효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주시경은 (1)의 예가 다음 4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2)아기, 가, 웃, 있다

주시경은 명사와 동사의 의미부(원체부, 몸씨)는 물론, 그 형태부(관계부, 몸씨)까지 모두 단어로 처리하였다. 곧 의미부인 ‘아기, 웃’도 단어가 되고 형태부인 ‘가, 있다’도 단어가 된다.

한편 최현배와 현행 남쪽의 규범문법은 (1)의 예가 다음 3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3)아기, 가, 웃었다.

최현배는 동사에 한정하여 활용법을 도입하였으며 의미부와 형태부를 합쳐서 한 단어로 처리하였다. 이른바 종합적 설명법을 채택하였다.

나아가 정렬모(1946)와 이승녕(1953)은 (1)의 예가 다음 두 단어로 성립되었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4)아기가, 웃었다.

이들은 명사의 형태부까지 단어의 일부분으로 봄으로써 국도의 종합적 설명법을 도입하였다. 곧 어절을 단어로 보고 있다. 이 모형은 북쪽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고수해 왔으며 남쪽에서는 특히 역사문법에 기울어진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

단어 설정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를 독립된 단위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단어의 한 부분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가로 돌아간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은 전통적으로 지정사라 불려온 '이다'의 처리에 관한 것이다. '이다'는 남쪽에서도 단어의 자격을 주는 견해와 그렇지 않은 견해가 맞서 있었던 때가 있어 학교문법 통일과정에서 논쟁이 되기도 하였지만 현행 학교문법에서는 단어로 인정하되 "서술격조사"라 하여 단어의 한가지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북쪽에서는 초기에는 이를테면 「조선어문법」(1949)에서는 동사의 활용에 나타나는 '으'와 함께 결합모음으로 처리하였으나^[14] 「조선어문법」(1960)에서는 체언을 용언화하는 접미사라고 하여 유의적 기능을 인정하였고 뒤의 문화어문법류에서는 "바꿈토"라 하여 토의 한가지로 처리하였다. 북쪽에서도 남쪽과 같이 '이다'를 들리싸고 많은 논의를 거듭하였음을 알 수 있다.

[2]품사체계

현행 남쪽의 품사체계는 다음 9품사이다.

(5)남쪽의 품사체계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이 체계는 1963년의 학교문법통일안에서 확정된 것으로(앞에서 나옴) 그 사이 두 차례에 걸친 겸인정 교과서 편찬과 두 차례의 단일문법편찬에서도 그대로 준수되어 왔다.

남쪽 품사분류의 기준은 남기심·고영근의 「표준국어문법론」(1985,

1993)에 기대면 다음과 같다.

(6) 남쪽 품사분류의 기준

- 가. 의미
- 나. 가능
- 다. 형식

(6)의 기준은 해방전에 나온 최현배의 「우리말본」(1937)에서 확립되어 이희승과 정인승의 문법을 거치는 사이에 다듬어져 현재는 품사분류의 표준기준이 되어 있다.

북쪽의 품사체계는 이미 언급한 김용구의 「조선어문법」에 기대면 다음과 8품사이다.

(7) 북쪽의 품사체계

- 명사, 수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남쪽과의 차이는 조사가 설정되지 않은 것 뿐이다. 북쪽에서는 체언 형태부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쪽의 조사가 빠진 것이다. 북쪽은 체언형태부와 용언형태부를 총괄하여 "토"라는 범주 속에 넣는다¹⁵⁾. 수사와 대명사의 순서가 다른 것도 차이점의 하나이다.

북쪽의 품사분류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없지 않지만 「조선어문법」(1960)에서 제시된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¹⁶⁾.

(8) 가. 어휘적 의미의 성격의 동일성

- 나. 문법적 범주의 구성의 동일성
- 다. 문장론적 기능의 동일성
- 라. 단어조성의 유형의 동일성

(8)가, 나, 다는 전통적인 기준인 남쪽의 (6)가, 나, 다와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다른점은 남쪽에는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8)라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소련의 서술문법에서 제안된 품사분류의 기준인데 조어법적인 현상을 품사분류의 기준으로 삼는 예는 딴 곳에서는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상 남북 양쪽의 품사체계와 그 분류기준을 대조해 보면 품사체계에서 남쪽은 조사를 하나 더하였고 분류기준에서 북쪽은 조어법의 문제를 하나 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성분체계와 문장의 종류

남쪽의 성분체계는 앞의 「표준국어문법론」(1985, 1993)에 기대면 다음과 같다.

(9) 남쪽의 성분체계

- ① 주성분<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② 부속성분<관형어, 부사어>, ③ 독립성분<독립어>

성분체계는 품사체계만큼 깊은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품사체계가 결정되면 성분체계는 거의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서 보어만 제외하면 최현배의 「우리말본」(1937)의 체계와 큰 차이가 없다. 이곳의 보어란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주격조사 ‘이／가’를 취하는 명사구를 가리킨다.

북쪽의 성분체계는 앞의 「조선어문법」(1989)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 (10) ① 맞물린 성분<술어, 주어, 보어, 상황어, 규정어>, ② 외딴성분 <호칭어, 삽입어, 감동어, 접속어>, ③ 단독성분, ④ 강조성분<제시어, 총괄어>

남쪽은 상위성분이 셋, 북쪽은 넷이며 그 기준도 다르다. 남쪽은 문장구성에 있어서 필수성 여부를 분류기준으로 삼아 그 아래 작은 성분을 두었으나 북쪽은 상관성을 기준으로 상위성분을 설정하고 그 아래 작은 성분을 두었다. 남쪽 같으면 모두 독립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북쪽에서는 “외딴성분, 단독성분, 강조성분”으로 잘게 나눈 것도 큰 차이점이다. 남쪽과의 용어차이도 심하다. “술어”는 남쪽의 서술어에, “보어”는 목적어에, “상황어”는 부사어에, “규정어”는 관형어에 각각 해당한다. 서술어를 주어에 앞세운 것도 큰 차이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문장의 종류는 문장종결법에 기댄 것과 문장구성의 방식에 기댄 것의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후자는 양쪽의 문법모형이 너무 달라서 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남쪽은 주시경의 통사이론과 현대의 생성문법을 통합하였고 북쪽은 전통문법에다 소련의 통사이론을 접붙

인 듯한 모형을 취하고 있어 전혀 다른 이론을 등에 짊어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문장종결법에 근거한 문장의 종류만 대조하기로 한다.

남쪽의 문장의 종류는 앞의 「표준국어문법론」에 기대면 다음 5개가 설정되어 있다.

(11) 남쪽의 문장의 종류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한편 북쪽은 다음 4개를 인정하였다.

(12) 북쪽의 문장의 종류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권유문
서술문은 남쪽의 평서문에 해당하는데 전통적으로 쓰여 왔고 지금도 이 용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권유문은 남쪽의 청유문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이 용어를 쓰는 사람이 많았다. 문제는 감탄문의 설정인데 일찍이 최현배도 감탄문을 빼어 문장의 종류를 넷으로 잡은 일이 있고 지금도 이 견해가 옳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북쪽도 시대에 따라 감탄문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였음을 보면 남쪽과 비슷한 고민을 되풀이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문법용어

문법용어를 고유어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한자어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쉽게 그 장단을 가리기 어려운 참으로 미묘한 문제이다. 우리말의 문법이 연구되기 시작한 개화기부터 이 문제가 문법가들을 괴롭혀 우리의 문법은 전통적으로 고유어용어와 한자어용어의 이중체재 속에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남쪽에서 처음 두 계열의 용어를 공인한 것도 그려 한 고민의 결과이며 60년대의 문법통일과정에서 “문법파”와 “말본파”가 극한 대결을 연출한 일도 그러한 갈등의 연속이었다. 어쨌든 현재 남쪽은 음성과 구두점에 관련된 소수의 용어를 제외하고는 한자어용어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북한은 초기부터 문화어운동이 벌어지기까지는 한자어용어만 허용하였다. 그러나 문화어운동이 일기 시작하면서 많은 용어가 고유어로 바뀌었다. 이를테면 “술어, 주어”를 “풀이말, 세움말”로 고쳤으며 어떤

것은 고유어와 한자어가 합친 “알림문장, 얹음형”과 같은 용어도 만들어 내었다. 그러다가 80년대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서서히 한자어로 돌아오고 있다. 이를테면 앞의 김용구의 「조선어문법」(1989)에는 70년대에 나왔던 “세움말, 풀이말”을 다시 “술어, 주어”로 바꾸었다. 그 까닭을 잘 알 수 없으나 북쪽은 맞춤법을 비롯한 언어규범을 너무 자주 바꾼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에 대하여 남쪽은 통일안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번 결정되면 여간해서는 바꾸는 일이 없다.

다행스럽게도 규범문법의 중추부분인 품사용어는 남북이 다같이 한자어를 선택하고 있으며 문장부호는 고유어를 선택하고 있어 공통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부로 들어가면 체계의 차이로 달라진 용어가 상당하고 앞의 “목적어／보어”처럼 같은 대상에 대하여 이름이 달리 붙여진 것도 적지 않다.

4. 휘갑

지금까지 필자는 남북의 규범문법을 체계와 용어에 걸쳐 눈에 대조함으로써 눈에 띄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하여 보았다. 논의된 바를 조목별로 간추려 보기로 한다.

1. 문법단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단어책정의 기준이 다르다. 남쪽은 명사형태부를 단어로 인정하는 데 대하여 북쪽은 단어의 일부분으로 처리한다.
2. 이른바 지정사를 남쪽은 서술격 조사라 하여 조사의 일종으로 처리하나 북쪽은 바꿈토라 하여 이른바 토의 일종으로 본다.
3. 품사체계는 남쪽이 9품사, 북쪽이 8품사이다. 북쪽은 명사형태부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가 품사체계에서 빠졌다.
4. 품사분류의 기준이 다르다. 남쪽은 의미, 기능, 형식의 세가지를 두는 데 대하여 북쪽은 단어형성의 문제를 더하여 넷을 두었다.
5. 성분체계는 분류기준이 달라 이질화된 면이 많으며 용어도 서로 다른 것이 많다.
6. 문장의 종류는 북쪽에서 감탄문을 뺀 것 밖에는 큰 차이가 없다.

7. 문법용어는 남북이 다같이 한자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띠고 있으며 품사이름은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나 세부로 들어가면 다른 것이 많다.

〈주〉

- 1) 우리말 문법연구의 역사는 19세기 전반기부터 현재까지 1세기 반에 걸친다. 이 방면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고영근(1983 : 제1장)을 보라.
- 2) 최현배가 우리말 문법교육에 기여한 활동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고영근(1992a, 1994b)을 보라.
- 3) 해방 직후(1945~1948)의 문법서의 발간상황에 대하여는 남기심 · 고영근(1985=1993)을 보라.
- 4) 대체적인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박상준, 조선어문법(초급중학교용), 1947~1948.
서광순, 국어문법(인민학교용), 1949.
- 5) 남쪽의 문법연구의 흐름과 동향에 대하여는 고영근(1983), 서울대국어연구회(편)(1990), 고영근 밖에 (공편)(1992)을 보라.
- 6) 초기 북한의 철자법제정과 문법연구에 대하여는 송서룡(1957), 김병제(1960), 고영근(1989a, 1994a)을 보라.
- 7) 북쪽의 소련의 언어이론의 도입양상에 대하여는 고영근(1992b, 1994a)을 보라.
- 8) 「조선문화어문법규범」에 대하여는 임홍빈(1989)을 보라.
- 9) 필자는 고영근(1993a)에서 남북규범문법의 이질화 양상의 일개를 제시한 바 있다.
- 10) 우리말 문법의 단위에 대한 종합적 논의는 고영근(1993b)을 보라.
- 11) 형태소의 분석원리에 대하여는 고영근(1978=1989b : 제1편)에 자세하다.
- 12) 형태소의 분석원리에 대하여는 고영근(1978=1989 : 제1편)을 보라.
- 13) 고영근(1993b)에 이런 문제가 자세히 논의되어 있다. 이런 개념의 "어소"는 최근 복합적인 단어를 중심으로 남북에서 거의 동시에 제안된 김성규(1987)의 "형태소"와 "어휘소", 김동찬(1987)의 "형태

부”와 “의미부”의 개념을 받아들이되 굴절층위에까지 확대하여 설정된 것이다.

- 14) ‘이’의 결합모음설에 대한 비판은 고영근(1989a)를 보라.
- 15) 북쪽의 “토”에 대한 연구는 볼프(H. Wolf)(1992)를 보라.
- 16) 북쪽의 품사분류의 기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고영근(1988, 1993b), 임홍빈(1992)를 보라.

〈참고문헌〉

고영근

- 1983, 국어문법의 연구—그 어제와 오늘—, 탑출판사.
 1987, 표준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88, 북한의 문법연구, 국어생활 15.
 1989a, 북한의 초기 철자법과 문법연구, 정신문화연구 36.
 1989b, 국어형태론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편), 북한의 말과 글, 을유문화사.
 1992a, 외솔의 중동문법 저술에 대한 연구, 동방학지 71.72(합집).
 1992b, 북한언어학의 형성에 관한 제문제, 어학연구 28.3.
 1993a, 한반도 우리말 연구의 통합을 위한 테제, 이중언어학회 일본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1993b,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일지사.
 1994a, 통일시대의 語文問題, 도서출판 길벗.
 1994b, 최현배의 학문과 사상연구, 연구보고서.

고영근 밖에(공편)

- 국어학연구 100년사, 일조각.

김병재

- 해방후 15년 동안 조선언어학의 발전, 조선어문 4.

남기심 · 고영근,

- 1985, 1993(개정판),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볼프(H. Wolf)

- 1992, 북한문법의 “토”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06.

서울대학교 국어연구회

1990,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송서룡

1957, 소베트 언어학과 해방 이후 조선언어학 발전에 준 그의 영향, 조선여문 6.

이승녕

1953, 격의 독립풀사 시비, 국어국문학 3.

임홍빈

1989, <조선문화어 문법 규범>을 통해 본 북한의 문법, 고영근(편)(1989)에 실림.

1992, 북한의 문법론, 어학연구 28.3.

정렬모

1946, 신편고등국어문법, 한글문화사.

남북한 어휘의 이질성 문제

심 재 기

1. 머리말

남북이 분단된 이래 50년 가까운 세월, 서로 상잔과 반목을 거듭하는 동안 두 사회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 하면서 각기 독자적인 언어사회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언어상의 격차를 물고 왔다. 음운이나 문법체계는 50년의 분단상황으로는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없는 것이지만 어휘는 시대의 변화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남북한의 언어차이는 그 대부분이 어휘상의 격차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러한 남북한 사이의 어휘를 중심으로 하는 언어격차현상은 통일을 대비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가. 그 해소방안은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이 글의 목적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언어의 격차현상은 언어전체의 동질성 확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여,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전체 언어현상에서 극히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만일에 그것이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비중이라면 아마도 우리의 논의는 불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까지는 내비려 두어도 괜찮을 만큼의 비중은 아니라는, 즉 통일이후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상태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는 가정에서 우리의 논의는 출발한다. 그렇다고 하여 논의가 끝난 뒤에, 우리의 근심이 부질없는 걱정이었음을 확인하면서 기뻐하리라는 희망을 처음부터 포기하였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

2. 동질성 논의의 출발점

남북한의 언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원래 방언적 차이만이 존재하는 하나의 언어였다. 이처럼 하나의 뿌리에서 파생된 남북한의 언어는 그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서 격차가 생긴 것을 풀어 볼 궁리를 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첨경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언어의 격차가 발생하기 이전, 즉 서로가 일치된 시대에 지니고 있었던 '공통기반' 같은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시야를 멀리해 돌이켜 보면 19세기 말 개화의식이 고조되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겠고, 좀더 가까운 시기까지 내려온다면 1930년대를 생각할 수도 있다.

19세기 말의 개화의식이 중국으로부터 민족적 독자성을 자각한 주체의식의 발로였다면 1930년대의 문화의식은 일제식민지 상황으로부터 민족적 독자성을 새롭게 다짐한 주체의식의 발로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시기가 모두 민족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우리는 여기서 1930년대를 주목하는 것이 좋겠다. 식민지 상황에서 도 민족의 언어를 올바로 지키고 가꾸기로 다짐하면서 바로 그러한 민족언어 지키기가 민족자체의 수호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은 금세기에 들어와 언어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언어의식의 공동기반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원래 하나였으며 결국에 가서는 하나이어야 하므로 갈라지기 이전의 굳건했던 지점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동질성 회복의 논의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여 1930년대의 '민족자존의 문화의식'은 남북한 언어의 공통기반이다. 너무도 당연하고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자나쳐버리기 쉬운 것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민족의 미래를 논할 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뚜렷한 역사적 공통기반이다. 이 시대는 국권을 일제에 빼앗긴 정치적 암흑기였다. 그러나 이 시대야말로 20세기를 통하여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 민족문화의 동질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보였던 때이다.

이 시기에 나온 다양한 문학작품들은 우리민족의 언어가 얼마나 아

름다운가를 증명했다. 이 시기에 전통시가의 맥을 이은 시조가 새롭게 부흥되어 민족문학의 독특한 장르로 재확인되었으며 새로운 서정시와 소설들이 민족의 언어자산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후세의 문학사가들이 20세기 우리문학을 논할 때 가장 역점을 두어 강조할 부분이 1930년대에 있다는 것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이 시기에 우리 선조들은 “한글맞춤법통일안”을 확정함으로써 민족언어의 서사체계를 정비하였다. 해방 이후에야 빛을 본 우리말 큰사전도 그 작업의 대부분이 1930년대에 진행되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업적이다. 나라없는 민족이 그 민족의 말과 글을 다듬었다는 사실을 세계 어느나라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런 업적을 우리 조상은 성취하였다. 따라서 1930년대는 문학작품을 통하여 민족정서를 풍부하게 펼치고 맞춤법의 제정과 사전편찬사업을 진행하므로써 민족의 통합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문파의 길을 걷기 전에 언젠가 합칠 것을 예견하면서 “민족자존의식”을 굳세게 다진 이 1930년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의 짓궂음인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 30년대의 공통기반이야말로 동질성을 회복하는 쪽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질화 논의의 부당성

언어적 격차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고자 할 때, 잊어서는 안될 또 하나의 자세는 격차가 발생한 언어현실을 어떤 시점에서 바라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푸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남북한의 언어현실을 한 덩어리의 빙산에 비유하고자 한다. 수면에 떠 있는 부분은 차이점을 표상하고 수면 밑에 감추어져 있는 부분은 공통점을 표상한다고 할 수 있겠다. 차이점을 나타내는 윗부분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커보이고 많아 보인다. 그리고 공통점을 나타내는 밑 부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수면에 접한 중간지점에서 위와 아래를 넘나들며 그 언어뭉치가 비록 달라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의식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그동안 언어의 격차를 근심하는 분들이 간과했던 것은 아마도 빙산

의 하단부분이 아니었던가 싶다. 물론 격차를 확대해석하려는 심리의 저변에도 이미 동질성을 전제하고 있었으리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심리의 논조가 진실을 가리고 있음도 또한 숨길 수 없다.

그러면 이제부터 남북한의 언어가 얼마만큼 달라졌는가. 그 달라짐은 전체의 언어뭉치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한의 언어격차현상은 어휘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에 대해서만 검토하기로 한다.

4. 표준어의 기반

남한의 표준어는 1933년에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총론 제2장에 명시한 바를 근거로 하고 있다.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종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고 하여 시대와 계층과 지역의 세가지 요소를 밝힌 이 규정은 1989년에 새로 제정한 ‘표준어 규정’에는 “표준어는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바뀌었다. 이 두가지 규정 사이의 차이는 ‘종류사회’가 ‘교양있는 사람’으로 표현이 바뀐 것 외에는 시대와 지역에는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면 1930년대에 ‘종류사회’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어떤이는 이것을 조선왕조 양반사회의 잔재로 보려고 할 것이고 또 어떤이는 개화기 이래 새로이 대두한 개화지식인층의 확산으로 보려고 할 것이다. 이 두가지 대립되는 견해 중에서 아마도 나중의 견해가 진실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한다. 19세기 말 갑오경장을 겪은 이후 합법적으로 반상의 제도는 무너졌으며 국권을 일제에 빼앗긴 1910년을 넘기면서 양반의 세도는 궁벽한 시골의 유림사회(대표적인 예로 안동지역)를 제외하고는 거의 존재를 감추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의 개화의식을 주도해 나가는 새로운 지식인들은 옛날 양반의 후예가 아니라 조선왕조의 전통사회에서는 중인(中人)에 속했던 역관과 의원이었

고 일부 의식이 있는 승려들이었다. 금세기 초엽에 대중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었던 지식인들은(예컨대 육당(六堂 崔南善)이나 춘원(春園 李光洙)등) 비록 그들이 혈통상으로는 양반이라고 하겠으나 이미 기능상 중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회를 이끌어갈 주도적 역량을 상실한 양반들이 사라져버린 식민지 시대상황에서 개화운동의 맥을 이은 지식인들은 결국 신분상으로는 중인계층을 대표할 수밖에 없었다. 1930년대에 ‘종류사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을 지칭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표준어의 모태는 우리민족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층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조선조 사회의 중인계층의 맥을 이으면서 양반계층을 포섭함으로써 형성된 광범위한 지식계층이었다. 이것이 현행 ‘표준어 규정’에는 ‘교양있는 사람’으로 표현되었다.

한편 지역으로는 서울말을 표준어의 기반으로 하였다. 이것은 서울 말로 대표되는 경기도방언을 표준어의 온상으로 삼는다는 뜻인데 고려조이래 천년동안 경기도가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전국에 두루 통한다는 잇점을 확인한 것이니 더 이상 그 타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5. 문화어의 기반

북한은 1966년 5월 14일에 김일성이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려 나갈 데 대하여”라는 담화문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남한과 특별한 차이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표준어·표준말’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암묵적으로 그것이 서울말과 같은 것임을 나타내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담화문에 다음과 같이 밝히므로써 ‘문화어’라는 용어를 북한의 표준공용어로 설정하였다.

“우리말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터를 잘닦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혁명의 참모부가 있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방면에 걸치는 우리 혁명의 전반적 전략과 전술이 세워지는 혁명의 수도이며 요람지인 평양을 중심지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언어의 민족적

특성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표준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표준어>라고 하면 마치도 서울말을 표준하는 것으로 그릇되게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전설하고 있는 우리가 혁명의 수도인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발전시킨 우리말을 표준이라고 하는 것 보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어>란 말도 그리 좋은 것은 못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쳐쓰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설정된 문화어는 그후 노동계급 또는 근로인민대중의 언어라고 하는 자리매김이 분명하게 된다. 한 두개만 인용해 보기로 한다.

—문화어 : 사회주의 건설시기 주권을 잡은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 밑에 혁명의 수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노동계급의 계급적 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게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문화적으로 다듬어져 전체인민의 규범으로 삼는 민족어의 전형, 우리 문화어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등지의 주체적인 언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언어정책에 의하여 해방후 공화국 북반부의 새로운 사회주의 밑에서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지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가장 발달한 아름다운 언어의 하나다. (우리말의 어휘 및 표현, 1979)

—문화어는 사회주의를 전설하고 있는 근로인민대중이 자기들이 놀쓰는 말을 토대로 하여 목적의식적으로 건설한 언어이며…, (최정후, 조선어학개론, 1983)

위의 인용한 바를 요약하면 문화어는 근로인민대중(또는 노동계급)의 평양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근로인민대중이란 누구인가? 아마도 그들은 노동자와 농민을 근간으로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지식인 계층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6. 표준어와 문화어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표준어와 문화어는 각기 다음과 같은 평행구

조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대	지역	계층
표준어	현대	서울	교양있는 사람
문화어	현대	평양	근로대중

이 표에 의하면 분명히 표준어와 문화어는 이질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시대를 제외한다면 지역과 계층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얼굴이 만들어 내는 두개의 표정에 지나지 않는다. 첫째로 교양있는 사람과 근로대중은 하나의 언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집단을 어느 시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문화적으로 만들어졌다”든가 “목적의식적으로 건설했다” 등으로 표현된 내용은 세부적인 내포의미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남한에서 언급한 “교양있는”이라는 표현이 함축하고자 하는 것과 그렇게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교양있는 사람은 곧 중류사회이며 또한 조선조 사회의 중인계층에 맥이 닿음을 앞에서 논했거나와 그것은 동시에 근로대중으로 표현된 북한의 노동자·농민·지식인과 다르지 않다. 다만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계층을 어떤 시점에서 보는가 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서울말과 평양말의 거리이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격차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도 남한과 북한이 서로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짐짓 차별을 강조하는 것일 뿐, 실제로 있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 북한에서는 평양말에 토대를 둔다고 하면서도 지역성을 다음과 같이 회석시킨다.

“문화어와 방언은 서로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호상 작용하고 호상 영향을 주고 있다. 문화어는 방언 가운데서 쓸모있는 전형적인 언어적 요소들을 섭취하여 자체를 풍부화시키며 또한 방언속에 침투하여 불필요한 방언들을 밀어내기도 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지역적 방언이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점차로 제거되어 간다.

근로자들은 문화어를 소유하게 되고 문화어는 전체인민의 공동의 소유물로 된다."(최정후, 조선어학개론)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평양말을 토대로 하는 문화어는 구개음화 거부현상을 특징으로 하는 평양사투리를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서울말과의 거리가 실질적으로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남북한 전체의 다양한 방언구획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은 함경도와 경상도를 한 묶음으로 하는 동부방언이요, 이와 대립하는 서부방언은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를 꿰뚫어 묶이는데 이 양 대 구분은 음장의 유무, 성조의 유무 같은 것이 가장 특징적인 변별요소이다. 그런데 평양말과 서울말은 그 서부방언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다.

7. 실제 검토

지금까지 남한의 몇몇 학자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남북한 어휘의 차이점을 검토하여 왔다. 그것은 남한의 차지로 보면 크게 세가지 부류로 요약된다.

첫째, 사회체제의 차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정치·사상적 용어
둘째, 평양방언이 반영된 일상용어

세째, 한자어 및 외래어를 순수한 우리말로 바꾼 것
이것들을 차례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번째, 정치·사상적 용어는 서로 다른 사회를 유지한 당연한 결과이다. 이것은 큰 규모의 사회방언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남북한 사이의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이다. 서로가 생소하게 느끼는 상당수의 어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의사소통에 장애를 느끼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 남한의 '대통령'이라는 낱말과 북한의 "수령"이라는 낱말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두번째, 평양방언이 반영된 일상용어도 부분적인 생소함을 논외로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표준어와 문화어의 차이를 몇개 들어본다. [()안이 문화어]

끄나풀(끄나블)	강낭콩(강남콩)	숫양(수양)
튀기(트기)	호루라기(호르레기)	윗목(웃목)
샘(샘, 새암)	솔개(소리개, 솔개)	시누이(시누이, 시뉘)
아내(안해)	길풀—삯(보행삯)	다다르다(다닫다)
양파(등글파)	생인손(생손)	빌리다(빌다, 빌리다)
옥수수, 강냉이(강냉이)		

위의 예들을 보면 한 날말의 서로 다른 발음상 변이형태를 각각 표준어와 문화어로 삼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다. 남한이나 북한이 두개의 형태를 모두 인정하는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설사 다음과 같이 발음상 전혀 다른 형태를 표준어나 문화어로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앞으로 두개의 표준어로 공인될 가능성도 있다.

방언적 차이가 심하다고 느껴지는 몇 예를 보인다.

일려주다(대주다)	경단팥죽(동그래 팥죽)
눈치(짬수)	새우잡(쪽잡)
멍개(우릉성아)	거위(계사나)
나이테(해돌이)	고종사촌(고모사촌)
물수제비(물찰찰이)	한의학(고려의학)

세번째, 한자어 및 외래어를 순수한 우리말로 바꾼 것은 북한의 말다듬기 운동의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다. 그것이 실제의 언어현실에서 바람직하게 쓰이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한 방향설정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한자어의 간결성을 버리고 의미상의 평이성을 취할 경우 그것이 얼마나 실용될 것인지를 문제가이다. 다음의 예를 든다.

센터링(중앙으로 꺽어차기)
멜균(균강그리 죽이기)
산분구(가루뿌림 주동이)
도찰(문질러 바르기)

이모작(두별농사)

남북한 어휘의 격차를 부채질한 가장 큰 요소는 남한의 과도한 외래어 사용과 북한의 지나치리만큼 순결주의를 내세우는 말다툼기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자어와 외래어를 순수한 우리 말로 바꾸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언어의 자연스런 발전과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우리는 북한의 적극적, 계획적, 체계적 어휘정리 사업이나, 남한의 소극적, 방임적, 산발적 국어순화운동이나 모두 중용의 묘를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의 순결주의는 우리 말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일종의 애누리작전으로 본다면 그런대로 수긍할 수는 있다. 따라서 그 것은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를 처음부터 기대하지는 않는 작전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남한의 방임주의는 북한의 지나친 철저성에 주목하면서 적어도 공공의 장소에서나 공공간행물에서의 외래어 남용에는 제재를 가하는 조치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을 듯 싶다.

8. 맷음말

이상으로 우리는 매우 소략하나마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언어사실을 어휘를 중심으로 일별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검토해 보면 볼수록 등질성이 더 크게 부각된다 는 점을 숨길 수가 없다. 아마도 그것은 1930년대에 확립된 민족적 공통기반이 탄탄하다는 데에도 연유할 것이고 현재 고조되고 있는 민족 정서 곧 통일을 성취하겠다는 민족적 통합의지가 50년의 격차는 능히 용해시킬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에도 연유할 것이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저지른 어문정책상의 두 가지 실책이 있다. 그 하나는 한때 잠시나마 한글 풀어쓰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였다는 점이요, 다른 하나는 한글전용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전통문화의 기본자산인 한자교육에 차질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한자교육과 한글전용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까지 남북한은 공동의 보조를 취한다. 전혀 상대방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똑같은 어문정책과 문자교육의 궤적을
밟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남북한 사이에 문화적
기반이 같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남북한 사이에 자유
로운 왕래가 이루어지고 언어접촉이 활발해지면, 별것도 아닌 것을 가
지고 대단한 격차가 생긴 줄 알고 서로 오해하였음을 웃으며 이야기하
게 되리라는 점이다.

우리의 어휘정리사업과 거기서 얻은 경험과 교훈

심 병 호

1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그런것만큼 말과 글이 민족의 참다운 소유물로, 공동의 재부로되자면 그의 순결성과 민족적특성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

언어의 순결성과 민족적특성을 공고히 하는데서 기본문제는 어휘구성을 정리하고 고유어에 토대하여 더욱 발전풍부화하는것이다.

어휘정리사업을 진행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이 사업에 대한 입장과 관점을 똑바로 세우는것이다.

어휘정리사업에 대한 입장과 관점을 똑바로 세워야 이 사업을 민족어의 주체적발전에 맞게 정확히 진행할수 있으며 그 방향과 방도를 명백히 정할수 있다.

어휘정리사업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 말 어휘구성속에 있는 비민족적이며 비문화적인 어휘들을 정리하여 민족어의 순결성과 민족적특성을 적극 발양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사업이다.

어휘정리사업에 대한 이러한 본질적리해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튼튼히 의거하여 이 사업에 대한 주체적 입장을 확립하였다.

어휘정리사업에 대한 우리의 주체적립장은 :

첫째로, 어휘정리사업은 우리의 말과 글을 정리하여 끊임없이 세련시키고 발전시킴으로써 언어의 민족적특성을 살리며 나아가서 민족의 주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사업이라는것이다.

어휘정리사업이 민족의 주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사업으로 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언어의 민족적특성은 어휘구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언어의 기본단위는 단어이며 어휘구성은 문법구조보다 사회발전과 시대의 변화를 더 빨리 받아들인다. 이러한 조건으로 하여 어휘구성 속에는 비민족적인 어휘들도 들어오게 된다. 그런 것 만큼 이러한 비민족적인 어휘들을 정리하여 어휘구성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나아가서 언어의 민족적특성을 살려나갈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민족의 주체성을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된다.

어휘정리사업이 민족의 주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사업으로 되는 것은 다음으로 언어가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로 되기 때문이다.

민족은 피줄과 언어, 지역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다.

민족의 고유성은 언어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해당 민족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것도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민족어는 해당 민족이 수천년간 간직하고 발전시켜온 공동의 재부로서 여기에는 민족의 고유한 특성과 사상감정, 민족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그런 것 만큼 언어가 민족적특성을 보존하고 충분히 발현할 때 민족의 주체성이 보장되고 더욱 굳어진다.

이와 같이 어휘정리사업은 민족의 주체성을 공고히 하고 발양시키는 기본조건으로 된다.

둘째로, 어휘정리사업은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뿌리빼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사업의 하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볼 때 비교적 발전된 나라들 사이에 있다. 이것으로 하여 지난날 일부 사람들 속에서는 이 나라들에 대한 사대주의와 함께 자기의 것을 천시하는 민족허무주의가 생겨나게 되었다.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는 언어분야에도 미쳐 지난날 일부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글을 천시하면서 한자말이나 외래어를 써야 《유식》하고 《위신》 있는 것으로 생각한 대로부터 한자말과 외래어를 마구 끌어들

여겼을뿐아니라 이것들로 새말을 망탕 만들어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외국말에 대한 사대주의의 후파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것을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3권에서 지난 항일 혁명투쟁시기에 일부 사람들이 실정에 맞지도 않는 《쏘베트로선》을 끌여들여 기계적으로 혁명근거지에 적용하다나니 농민들속에서는 《쏘베트》란 말의 뜻을 몰라 물건의 이름이나 어떤 무기의 이름 지어는 사람의 이름으로까지 리해하는 현상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인민대중이 모르는 외국말을 망탕 끌어들이면 이렇게 된다고 회고하시였다.

특히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지난 40여년간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식민지통치의 한 고리로 조선말말살정책을 실시하면서 언어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일본말만 쓰도록 강요하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후파로 하여 우리 말속에는 수많은 일본말과 일본식말이 들어와 어휘구성을 어지럽혀놓았다.

해방전 우리 나라의 언어실태는 바로 이러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람들속에 있는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뿐만 아니라 언어분야에서도 우리 말속에 있는 일본말과 일본식말을 청산하는것과 함께 비민족적인 어휘들을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낡은 언어관점이 발붙일수 있는 바탕을 없앨수 있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어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을 심어줄수 있으며 민족적자주성을 지켜나갈수 있다. 어휘정리사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우리 말 어휘구성의 실태를 옳바르게 분석한 과학적인 입장이며 이 사업의 목적에도 맞는 정확한 입장이다.

2

어휘정리사업에서 그 수행방법을 옳바로 세우는것은 이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어휘정리의 방법을 옳바로 세우고 이 사업을 과학리론적토대위에서 진행하여야 여기에서 나타나는 편향을 미리 막고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는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세웠다.

1) 어휘정리의 대상을 정확히 규정하고 조사장악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는 것은 어휘정리사업의 첫 공정이다.

어휘정리사업은 수십만개의 어휘를 다루는 방대한 사업일뿐 아니라 여러가지 부류의 어휘를 다루어야 하는 복잡한 사업이다. 그런 것 만큼 어휘정리사업을 과학적 요구에 맞게 정확히 진행하자면 정리해야 할 대상어휘의 기준을 옮바로 정하고 조사장악사업을 실속있게 잘 하여야 한다.

우선 정리해야 할 대상어휘를 선정하는 기준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정리해야 할 대상어휘의 기준을 바로 정하여야 다듬는 사업에서 편향을 없앨 수 있고 언어생활에서 복잡성과 혼란을 피할 수 있다.

우리는 정리해야 할 대상어휘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우리 말 발전의 역사적 특수성으로부터 출발하여 고유어와 비민족적인 어휘와의 호상관계, 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 한자말과 외래어가 쓰이고 있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것들 가운데서 우리 말 발전과 사람들의 언어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본말과 힘든 한자말, 까다로운 외래어를 정리대상으로 정하였다.

이와 함께 비록 수량상 적기는 하지만 고유한 우리 말 속에 있는 비문화적인 어휘들도 정리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정리대상의 범위를 이렇게 정함으로써 한자어와 외래어에 대한 주체적 입장이 정확히 서게 되었고 다듬는 원칙도 똑바로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정리해야 할 대상어휘를 조사장악하는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정리해야 할 대상어휘에 대한 조사장악사업을 세밀히 진행하여야 정리사업의 기간과 범위, 정리방법 등을 똑바로 세울 수 있다.

우리는 언어학자들과 자연기술과학분야의 전문가들, 기술자들과 출판보도부문의 일군들, 교육자들과의 협력 밑에 사전류, 교과서, 단행

본, 잡지 등을 참고로 하여 대상어휘들을 부문별로 전면적으로 조사장악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휘정리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료토대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게 되였다.

2) 한자말과 외래어를 고유한 우리 말로 잘 다듬어 단어체계를 고유어에 토대하여 하나의 체계로 만드는 것은 어휘정리사업의 기본 내용이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에서 『단어체계를 고유어와 한자어의 두 체계로 하여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단어는 우리 고유어에 근거하여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가르치시였다.

고유어에 토대하여 단어체계를 하나의 체계로 만드는 것은 민족어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민족적 특성을 발양시키며 어휘구성의 단일성을 보장하는 기본요구의 하나이다.

단어체계를 하나의 체계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한자어와 외래어를 정리하는데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하였다.

① 고유어와 한자어사이에 뜻이 꼭 같고 그 쓰임도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를 정리하는 원칙이다.

고유어와 뜻에서나 그 쓰임에서나 꼭 같은 한자어인 경우 그것을 정리하여야 고유어를 살릴 수 있고 새로운 한자어가 생겨날 수 있는 바탕을 없앨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적 사람들 속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한자어라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고유어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정리하였다.

례를 들면 『석교, 상전, 돈사, 모돈, 묘목…』 등과 같은 한자어는 『돌다리, 뽕발, 돼지우리, 어미돼지, 나무모』와 같은 고유어가 있는 조건에서 한자어는 쓰지 않도록 하였다.

② 한자어와 외래어를 쓰는 경우에는 우리 말로 완전히 굳어진 것만 쓰되 그 범위를 제한하는 원칙이다.

일부 한자어나 외래어들은 오랜 역사적 기간 우리의 언어생활 속에 깊이 침투되어 우리 말처럼 되여버렸고 일부는 비록 외래적 요소라는 느

낌이 있으나 토착화되어 우리 말 발전과 언어생활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학교, 비행기, 내과, 용감하다…》 등과 《뿔럭, 비타민, 마스크, 콩크리트》 등의 어휘들은 굳어진 말이므로 다듬지 않고 그대로 쓰도록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어휘부류들을 그대로 쓰되 그 범위를 제한하여 언어생활에 필요한 것만 쓰도록 하였다.

③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에는 반드시 고유한 우리 말 어근에 토대하여 만드는 원칙이다.

새말을 고유한 우리 말 어근에 토대하여 만들어야 어휘구성의 민족적 특성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고 그의 단일성도 담보할 수 있다.

고유한 우리 말은 다른 민족어의 침습을 받지 않고 우리 민족이 대대로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민족적 특성을 가장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언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말 속에 있는 고유어를 적극 살려쓸 뿐 아니라 새로운 말마다들을 고유어 어근에 기초하여 만들도록 하였다.

④ 인민들 속에서 널리 쓰이는 좋은 말을 적극 찾아쓰는 원칙이다.

인민들이 쓰는 방언들 가운데는 우리가 받아들여 쓸 수 있는 좋은 말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이런 말들은 적극 찾아내어 쓰면 그만큼 어휘구성이 풍부하게 될 뿐 아니라 민족적 특성도 더욱 높아지게 된다.

⑤ 한자어와 고유어 사이의 뜻 폭 관계, 단어 결합 관계 등을 잘 고려하여 한자어를 다듬는 원칙이다.

한자어는 오랜 기간 고유어와 함께 언어생활에 쓰이는 과정에 뜻 폭, 단어 결합 등에서 일련의 차이를 가지게 된 것 만큼 이런 관계를 잘 고려하여야 한다. 같은 뜻을 나타내는 한자어라고 하더라도 뜻 폭에서 차이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지하》라는 말은 《땅속》이라고 다듬어 쓸 수 있으나 《지하 투쟁, 지하 조직》 할 때의 《지하》는 《땅속》이라고 다듬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지하》와 《땅속》은 의미 폭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하》와 《땅속》을 다 쓰도록 하였다.

일부 한자어들은 고유어와 뜻이 같으나 단어 결합의 요소로 쓰일 때에는 일정하게 차이가 있다.

례를 들면 《주택》이란 말은 《살림집》이라고 다듬어쓸수 있다. 그러나 《문화주택》과 같은 단어결합의 경우에는 《문화살림집》이라고 하면 어색하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불 단어결합관계를 고려하여 《주택》과 《살림집》을 다 쓰도록 하였다.

⑥ 한자어와 외래어를 다듬는데서 현시대사람들의 사상감정과 도덕적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언어는 사람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것만큼 이 측면을 고려하여야 언어의 문화성도 보장할수 있고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풍모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신 말마디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한다.

례를 들면 《바다나물》이란 말을 새롭게 만든데서 찾아볼수 있다.

지난날에는 미역, 다시마 같은것도 바다에서 자라는 식물이라는대로부터 《해초》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한자말의 뜻대로 《바다풀》이라고 고치었다. 《해초》를 《바다풀》이라고 고친것을 아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느 중요한 회의를 지도하면서 《해초》란 말을 《바다풀》이라고 다듬으면 사람이 풀을 먹는것으로 되여 사람들의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산이나 들에있는 식물가운데서도 사람이 먹는 식물은 《산나물》, 《들나물》이라고 하는것만큼 바다에 나는 식물가운데서도 사람이 먹는 식물인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것은 바다에서 나는 나물이라는 뜻을 담아 《바다나물》이라고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였다. 우리가 널리 쓰고 있는 《단고기》란 말에도 어버이수령님의 은정깊은 사랑이 깃들어있다.

우리는 지난날 인민이 즐겨먹는 음식물의 이름을 점승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개장국》, 《개고기》라고 불렸으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그러나 인민의 언어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좋은 음식이 이름이 천하여 시대적미감에 맞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고기맛도 달고 고기도 맛이 있으므로 《단고기》라고 이름짓자고 하시면서 친히 고쳐주시였다.

《바다나물》, 《단고기》 얼마나 민족적 향취가 풍기고 우리의 어감에도 맞는 좋은 말인가.

이밖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꽃도 곱고 향기도 좋은 나무이름을 지난 날에는 《개오동》, 《박태기나무》라고 부르던것을 《향오동》, 《구슬꽃나무》라고 지어주신것을 비롯하여 고쳐주시고 새로 지어주신 이름은 수없이 많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인체의 기관과 조직 이름, 동식물의 이름을 비롯하여 일부 학술용어를 다듬을 때에도 도덕교양의 측면을 고려하였다.

3) 다듬은 말에 대한 보급과 통제사업을 잘 하는 것은 어휘정리 사업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어휘정리사업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에 말과 글이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자는데 있다.

아무리 많은 말을 다듬어놓아도 실지 언어생활에서 쓰지않으면 다듬어놓은 보람이 없게 되며 나아가서 한자어와 외래어들이 되살아날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한자어와 외래어를 다듬는 사업과 함께 다듬은 말을 보급하고 쓰도록 통제하는 사업을 어휘정리사업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인정하고 이 사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무엇보다 먼저 다듬은 말에 대한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우리는 《다듬은 말》이 정해지면 우선 중앙과 지방의 신문들과 방송, 각 전문분야의 잡지들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알려주어 모든 사람들이 쓰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몇해에 한번씩 《다듬은 말》을 책으로 묶어서 중앙과 지방의 정권기관들과 기관, 기업소들에 보내여 여러가지 공문서, 규정집 등을 만들 때 리용하도록 하였다.

다듬은 말을 보급하는데서 중요한 공간의 하나는 학교교육이다.

인구의 절반이 각급 학교와 교육망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건에서 교육을 통한 다듬은 말의 보급은 위력하고도 확고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과서에 쓰이는 용어도 말이 다듬어지는데 따라 몇해에 한번씩 바꾸도록 하였으며 인민학교 1학년때부터 다듬은 말로 교육을 하도록 하였다.

록 하였다.

우리는 또한 전문분야의 사전류들을 만들 때에도 다듬은 말을 올림 말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이번에 《조선말대사전》을 만들면서 여기에 다듬은 말을 올림 말로 옮겨 고착시켰다.

다음으로 다듬은 말을 정확히 받아들여 쓰도록 통제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갔다.

물론 대중의 자작적열성에 의하여 다듬은 말이 언어생활속에 널리 쓰이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언어관점이 남아있는 조건에서 통제사업을 잘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이다.

우리는 국가기관의 공문서와 규정집들과 출판보도물 등에서 다듬은 말을 쓴 정형과 쓰지 않은 정형을 료해하여 해당 단위에 알려주는 한편 강연, 해설담화 등을 통하여 다듬은 말을 널리 받아들여쓰도록 하였다. 이밖에 거리의 간판, 상품의 이름, 상표, 설명서, 해설문의 글 등을 바로 잡아주는 사업도 진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에 기초하여 어휘정리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이 사업은 자기 목적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 다듬은 말은 언어생활속에서 자기 자리를 확고하게 차지하고 적극 쓰이고 있다.

3

지난 40여년간 어휘정리사업을 힘있게 벌려온으로써 우리 말의 어휘 구성과 언어생활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무엇보다 먼저 어휘구성속에 존재하였던 한자어와 외래어들이 정리됨으로써 단어체계가 고유어를 기본으로 하는 하나의 체계로 되었다.

다음으로 고유한 우리 말 어근에 기초하여 새말들이 수없이 생겨남으로써 우리 말 어휘구성은 질적으로 풍부화되었고 그의 민족적특성이 최대한 발양되게 되었다.

즉 《바다나물, 보라콩, 옥쌀, 물보라, 살짜공, 손기척, 졸짱, 흙깔

이, 물주머니》 등 수많은 말들이 만들어져 쓰이게 되었다.

또한 어휘정리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의 언어관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었다.

힘든 한자말이나 외래어를 써야 《유식》하고 《위신》 있는 것으로 생각하던 낡은 언어관점이 없어지고 쉬운말, 쉬운글을 쓰는 사람이 민족어를 사랑하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이 확고히 서게 되었다.

어휘정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일련의 경험과 교훈도 얻게 되었다.

첫째로, 어휘정리사업을 힘있게 벌려 우리 말과 글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민족적특성을 적극 살려나갈 때 민족의 존엄과 영예도 지키게 되고 사람들에게 민족에 대한 사랑, 민족적 자부심과 궁지를 더 깊이 심어줄수 있다는 교훈을 찾게 되었다.

다듬은 말을 비롯한 고유한 우리 말 어휘로 언어생활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속에서는 가장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학술적개념을 표현하는 용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상, 현상을 능히 우리 말로 표현할수 있다는 자신심을 갖게 됨으로써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고히 서게 되었고 따라서 민족적 자부심과 궁지도 높아졌다.

어휘정리사업의 결과 오늘 《새마을동, 새살림동, 런못동》과 같은 거리, 마을 이름들, 《놀이감공장, 가죽이김공장, 녀자옷상점》과 같은 공장, 상점 이름들이 생겨났다. 지어 지난날에는 생각할수 없던 《종이총국, 소금총국, 물고기공급지도국, 먼거리자동차수송지휘처》와 같은 국가기관의 이름까지 생겨났다.

그리고 지난날에는 학술용어는 응당 한자말이나 외래어로 짓는것으로 생각했으나 지금은 《같기식, 안같기식, 모르는수, 문지기, 그물치기, 그물다치기, 눈확빼, 꺾쇠빼》와 같은 우리 말 학술용어들이 생기여 적극 쓰이게 되었다. 결국 어휘정리사업이 단순한 언어적문제뿐만 아니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고 빛내이는 사업이라는것을 말하여 준다.

둘째로, 언어문제도 언어학자들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에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가 안받침될때 옮바르게 진행될수 있다는 교훈을 찾게 되었다.

어휘정리사업은 언어에 대한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작용과 광범한 인민대중의 참가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다. 그런것만큼 자연발생성에 맡겨서는 어휘정리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 대중의 이러한 목적의식적작용을 조직화하고 그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도록 발동시킬 때 만이 성과를 거둘수있다.

더우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객관적조건으로 하여 어휘구성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있는 조건에서 어휘정리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안받침하지 않고서는 목적한 성과를 거둘수 없다.

우리는 어휘정리사업에 광범한 대중이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하도록 이 사업을 전사회적운동으로 벌리는 한편 국어사정위원회라는 국가기구를 내오고 여기서 이 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며 장악하도록 하였다.

국어사정위원회는 어휘정리사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대중을 계몽하는 한편 광범한 대중이 이 사업에 동원되도록 조직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매개 분과위원회들에서 진행하고있는 정형을 자주 료해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대중의 적극적인 참가밑에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어휘정리사업은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게 되었다.

셋째로, 어휘정리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당면하여 해결할 문제와 전망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백히 가르고 순차적으로 해나가야만 언어생활에서 혼란을 막을수 있고 이 사업도 정확히 진행될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어휘정리사업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기본교체수단인 어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이므로 선후차를 명백히 가르고 그에 따라 누에가 뽕을 먹듯이 하나하나 정리해나가야 언어생활에서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뿐 아니라 나라의 과학기술과 문화의 발전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우리는 보통교육부문에서 많이 쓰는 어휘와 사람들속에서 늘 쓰는

말을 1차적으로 다듬어야 할 대상으로 정하고 이것들부터 다듬도록 하였다.

1차적으로 다듬어야 할 대상들이 다듬어져 언어생활에 일정하게 쓰일 때 다음단계에서 보다 힘든 말과 전문적인 학술용어들을 다듬도록 하였다.

다듬을 대상에 대한 토론도 출판보도물을 통한 지상토론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전문가들과의 토론과 협의를 배합하도록 하였다.

다듬은 말에 대한 보급도 정권기관과 보통교육부문에서 먼저 받아들여 쓰도록 하면서 출판보도물에서도 받아들여 쓰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듬는 사업도, 다듬은 말을 보급하는 사업도 편향 없이 진행될수 있었다.

우리의 말과 글은 이 땅에 태여난 선조들이 첫 태를 둈은 때로부터 반만년의 기나긴 세월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쓰고있는 우리 민족의 뿐이 짓들여있는 귀중한 공동의 재부이다.

북과 남, 해외의 언어학자들은 우리의 말과 글을 연구하는것으로 하여 그 누구보다도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고 궁지와 자부심이 높으며 이에 못지 않게 책임감도 무겁다.

우리의 주석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서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모두가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통성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우리 언어학자들은 역사와 민족, 세대 앞에 지난 자기의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분별의 장벽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생긴 부분적인 언어차이를 절대화할것이 아니라 수천년동안 형성되고 공고화된 언어의 공통성을 더욱 귀중히 여기고 이것을 튼튼히 다지고 가꾸기 위해 지혜와 지식, 힘을 합치자.

우리는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화해와 단합을 이루하고 서로 협력하고 련대하여 우리의 말과 글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언어로 만들기 위해 손잡고 나아가자.

남북 언어학자들의 국어사 연구에 보이는 문제점

정 광

I

우리말의 역사적 변천에 대하여 남북 언어학자들의 연구태도에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우리말이 어떤 계통의 언어인가 하는 문제로서 국어의 기원에 관한 것이며 둘째로 중세국어의 기반이 된 고려어가 고대삼국의 어떤 언어를 모태로 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원래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이 어떤 계통의 언어인가를 밝히는 하나의 문제로서 민족의 기원이나 단일성의 문제와도 관련되는 중대한 쟁점이기도 하다.

이 발표에서는 우선 국어의 계통에 관한 남쪽 학자들의 연구를 고찰하고 국어사 연구에 나타나는 남북학자들의 견해 차이를 밝혀서 앞으로 이루어질 한민족 통일조국의 자랑스런 언어로서 우리말의 역사적 정통성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국어의 기원이나 계통에 관한 연구는 우리의 선조들이나 중국의 호사가들이 단편적으로 살펴본 바가 없지 않으나 서양에서 시작된 역사비교언어학의 언어연구 방법이 점차 일반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Dante Alighieri의 '俗語論(De vulgari eloquentia)' 이후 서양에서는 희랍어, 라틴어, 히브리어 등 고전문헌 언어 이외의 다른 여러 언어에 대한 고찰이 시작되었고 문예부흥 이후에는 유럽의 많은

土着語(vernacular)들이 기술되어 언어의 비교와 그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18세기 중엽에 영국의 William Jones에 의하여 ‘인구어족의 가설’이 제기된 이래 소위 바벨塔으로 분화된 여러 언어의 역사적 연구가 폭넓적으로 유행하였으며 19세기 초엽에 독일의 Franz Bopp나 Jakob Grimm, 그리고 덴마크의 R.K.Rask에 의하여 그 가설은 증명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로부터 서양의 역사비교언어학은 언어연구의 중요한 방법이 되었고 언어학이란 학문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인구어족의 가설’이 증명되면서 이 언어들과 인접한 다른 계통의 언어들에 대하여 그 기원과 상호 관계가 관심을 끌게 된다. Poppe(1965)에 의하면 유우라시아대륙에 산재하고 있는 교착적인 언어들을 한데 묶어 같은 부류로 구분한 것은 17세기 초엽 스웨덴의 장교였던 Philip Johann von Strahlenberg가 오래 동안 포로로서 시베리아지역에 잡혀있다가 돌아와서 쓴 논문에서 주장한 ‘타타르제어(the Tatar languages)’의 가설이 처음이다. 그는 우글族(Finno-Ugric人, Baraba Tatars人, Huns族을 말함), 투르코-타타르人, 사모예드人, 몽골과 만주人, 통구스人, 그리고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살고 있는 여러 종족의 언어를 같은 계통의 언어로 생각하였다¹⁾. 전술한 덴마크의 R.K Rask는 이 보다 더 광범한 지역에 분포된 교차적인 언어를 ‘스키티안제어(Scythian languages)’라고 불렀고 Max Müller는 샘어와 티벨트어, 그리고 말레이어와 인도의 드라비다어까지 함께 묶어 ‘튜란제어(Turanian languages)’라고 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튜란제어의 가설’은 인구어족과 같이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語族(language family)으로 간주한 것은 아니다²⁾.

그러나 한국어는 이들의 언어 분류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들은 우리말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세기 후반 한반도에 왔었던 서양인 선교사들에 의하여 우리말과 타타르제어, 또는 튜란제어와의 유형적 유사성이 지적되었을 뿐이다³⁾. 유우라시아대륙에 널리 퍼져있는 교착적인 문법구조의 여러 언어에 대하여 역사비교언어학의 연구방법을 적용시켜 이들의 계통적인 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힌 최초의 노력은 M.A.Castrén의 Altai語族, 즉 Ural-Altaï語族의 假說이다.

카스트렌은 유우라시아대륙에 산재된 여러 非印歐語 가운데서 비교적 역사가 분명하고 문법기술이 이루어진 튀르크어, 몽골어, 만주-통구스어와 편-위글어, 사모예드어를 한데 묶어 '알타이諸語'라고 불렀으며 이들의 계통적 친족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음운, 어휘 등을 비교하였다. 카스트렌은 알타이제어의 언어 사이에는 인구어족의 언어들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은 유사성이 발견되지는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19세기 중에 Wilhelm Schott, Heinrich Winckler 등에 의해서 하나의 語族으로 정착되었다. 후일 '우랄-알타이어족'으로 알려진 이 언어들과 한국어가 계통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주장은 주로 일본인 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20세기초 일본인 白鳥庫吉(1914~1916)은 '조선어와 'Ural-Altai어 와의 비교연구'라는 제목으로 600에 가까운 우리말의 어휘를 우랄-알타이제어, 그 중에서도 주로 알타이제어와 비교하고 한국어의 우랄 알타이어족설을 주창하였다. 이 가설은 후일 小倉進平등의 일본인 학자들과 金允經(1938)등의 국내학자들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며 남쪽에서는 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일반화되었다. 우랄-알타이어족의 가설은 이들 언어에 대한 어휘의 체계적인 비교나 그로부터 얻어낸 음운의 대응을 기초로 하여 친족관계가 증명된 것이 아니라 당시 인구어족의 가설을 증명하는데 유행하던 '共通特質論'에 입각한 것으로 이 언어들에서 공동으로 나타나는 언어적 特質에 의하여 우랄 알타이어족을 분류한 것이다⁴⁾. 이러한 분류 기준은 이승녕(1950), Collinder(1952) 등에 의해서 비판되었다.

역사적으로 교류가 많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튀르크제어, 몽골제어, 만주-통구스제어를 우랄제어와 분리시켜 '알타이諸語'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매우 오랜 전통을 갖는다. 1860년대에 벨혜름 쇼트는 카스트렌의 '알타이語群'을 '츄딕(Chudic-휘노, 우글어)'과 '타타르(Tatar-알타이어)'로 구분하였으며 우랄제어에 관한 연구는 별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알타이어족의 몽골제어, 만주-통구스제어, 튀르크제어에 대한 본격적인 비교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G.J. Ramstedt였다. 그는 1900년대 초기부터 이 언어들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들이 서로 계통적으로 친족관계에 있음을 믿어 '알타이諸族說'을 주장하였

다. 후일 그는 한국어와 일본어에 접한 다음에 한국어를 알타이어의 한 분파로 생각하여 알타이공통조어가 몽골어파, 만주-통구스어파, 뿐만 아니라 투르크어파, 그리고 한국어로 나뉘어졌다는 유명한 '알타이어의 四語派說'을 주장하였다. 람스테트의 알타이어족설은 당시 러시아의 동방학자들, 특히 St. Petersburg에서 활동하던 W.Kotwicz, B.Y. Vladimirtsov, A. Rudnev, E.D. Polivanov 등에 의하여 호응되었으며 이들의 제자인 N. Poppe에 의하여 서방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말과 알타이제어와의 계통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알타이어족설을 주장한 람스테트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는 먼저 한국어의 '섬(島)'과 '배(舟)'의 두 어휘를 일본어의 그것과 비교하는 논문을 썼으나(Ramstedt : 1926) 그가 한국어의 계통에 관하여 체계적인 논문을 발표하기 1년전 소련의 뽀리바노프에 의하여 한국어와 알타이제어의 계통적인 친족관계가 논의되었다. Polivanov(1927)는 비록 짧막한 논문이지만 최초로 한국어와 알타이어제어의 음운과 형태에 있어서 그 계통적인 유사성을 논증하려던 것으로 알타이 공통조어의 *1과 *r이 한국어의 r과 대응함을 밝혀서 지금도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어의 계통에 대하여 알타이어학을 창시한 람스테트가 관심을 갖고 논문을 발표한 것은 우리말의 기원과 다른 주변 언어와의 관계를 고찰함에 있어서 기념할 만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Ramstedt(1928)는 이 논문이 비록 Polivanov(1927)보다는 1년 후에 나왔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람스테트는 이후 계속해서 한국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우리말의 어원에 관한 Ramstedt(1949, 1953, 1954, 1982)라던지 문법에 관한 Ramstedt(1939)등의 업적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⁵⁾. 특히 그의 알타이어학序說인 Ramstedt(1952, 1957, 1966)은 한국어가 알타이어족에 속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서 우리말과 알타이어와 관계를 연구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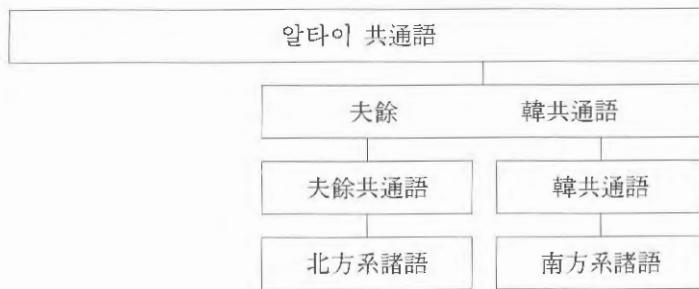
람스테트와는 약간 의견을 달리하지만 Nicholas Poppe의 알타이어연구는 알타이어학을 좀더 정밀화시켰으며 195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엄격한 냉전체제 속에서 서방세계 알타이어학의 명맥을 잇게 하였다. Poppe(1960)에서는 한국어의 어휘 82개가 비교의 대상이 되었

다. 또한 이보다 앞서 Poppe(1950)에서는 람스테트의 『한국어 어원연구』(1949)에 대한 書評에서 람스테트가 제시한 비교의 예 가운데 오류를 지적하고 자신의 새로운 비교의 예를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그는 람스테트의 알타이어 계통도를 수정하여 Poppe(1965)에서 이기문(1961) 이후의 한국어 계통도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러한 한국어의 기원에 대한 소위 포페-이기문의 알타이어 계통도는 1970년대와 80년대를 風靡하여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매겨 할 수 없는 국어와 알타이어의 비교연구가 발표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이기문 : 1975, 김방한 : 1983, 송기중 : 1991, 및 졸고 : 1991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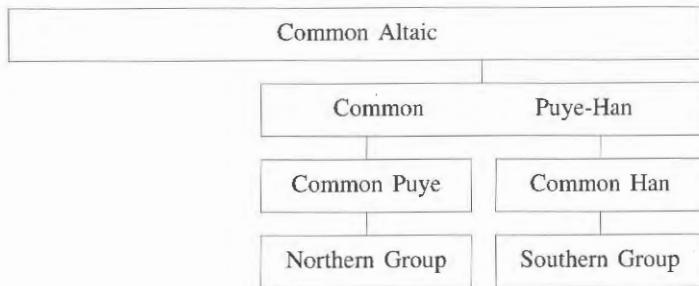
포페-이기문의 계통도는 람스테트의 그것과 달리 알타이공통조어로부터 원시 한국어가 먼저 분기되었고 한동안 다른 알타이 세 語派(몽골어, 만주-통구스어, 튀르크어)의 공통시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Poppe(1960/5-8)에서 제시하고 Poppe(1965/147)에서 다시 정리한 알타이어 계통도는 다음과 같다.



이 계통도는 이기문(1961/18)에서 그대로 수용되었고 다음과 같이 한국어 부분을 세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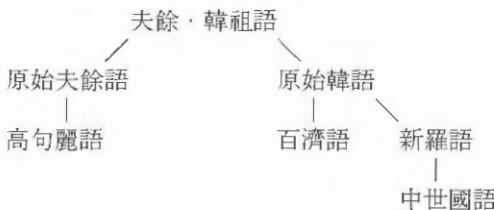


포페는 이기문(1961)의 이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Poppe(1965/138)에서 다음과 같이 한국어 부분을 정밀화하였다.



이와같은 포페-이기문의 알타이어 및 국어의 계통도는 남한의 국어사 연구에서 국어의 기원과 계통에 대한 가장 유력한 이론이 되었다. 특히 이기문(1961)에서 고대국어(Ancient Korean)시대에 남북 양계의 언어가 이미 분화된 것으로 보았으며 중세국어(Middle Korean)는 언어중심지가 한강 이북인 개성으로 옮아간 다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즉 신라유민인 지배층의 신라이어를 근간으로 하고 개성지방의 원주민이 사용하는 피지배층의 고구려어를 低層으로 하여 새로 성립된 高麗共通語로부터 중세국어는 성립된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중세국어의 시작은 새로운 고려공통어의 언어자료를 보여주는 鷄林類事(1103-1104)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가설은 남북 국어사 연구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형규(1962, 및 1975)를 비롯한 남한 학자들의 비판은 중세국어 시대구분의 기점이 계림유사의 편찬이라는 점을 들어 외국인의 저작물을 기준으로 삼는 연구태도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북쪽 학자들의 비판은 중세국어의 모태가 신라어라는 점과 고대국어시대에 고구려어, 백제어, 신라어 등 세나라의 언어가 서로 별개의 언어였다는 점, 그리고 우리말이 알타이조어로부터 분화된 것이라는 주장이 주로 그 비판의 대상이었다. 이 책의 개정판인 이기문(1972)에서는 계림유사의 편찬(12세기초)이 중세국어의 기점이라는 주장은 수정되어 10세기 高麗의 建國과 高麗 中央語의 성립을 고대국어와 중세국어의 갈림길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국어와 알타이제어의 친족관계는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三國志』魏志 東夷傳의 기록등을 근거로 하여 滿洲와 韓半島에는 肅慎系, 夫餘系, 韓系의 삼대여군이 있었고 고구려어로 대표되는 북방계제어와 신라어로 대표되는 남방계제어의 분화는 확고한 것으로 기술되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系統圖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기문(1972)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국어계통 연구의 定說로서 많은 남한의 국어학자들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 더욱이 이기문(1961)에서 거론되었던 중세국어의 高句麗語 低層設은 오히려 약화되고 당시 개성지방의 언어는 신라어의 한 방언이며 따라서 중세국어는 신라어를 근간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주장을 오히려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쪽의 국어사 연구에서는 김병재(1961)를 비롯하여 홍기문(1963), 김영황(1978), 류렬(1983), 그리고 김수경(1989)에서 한결 같이 이기문(1972 및 1980)의 연구태도에 반대하고 국어의 단일성, 즉

古朝鮮을 기원으로 하여 고구려어를 기반으로 하는 단일 민족어의 발달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수경(1989)에서는 이기문(1961, 1967, 1975, 및 1980)의 여러 논문을 종합적으로 비판하고 조목조목 그 부당성을 밝히려고 하였다.

III

본 발표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두 학설, 즉 이기문(1972)으로 대표되는 국어계통론과 김수경(1989)으로 종합되는 국어의 단일 기원설에 대하여 그의 옳고 그름을 논의할 의도는 없다. 다만 남쪽에서도 최근 고고인류학의 발달에 의거하여 새로운 국어계통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고하고 그동안 국어사 연구에서 남한의 학자들이 당면하였던 문제점을 지적하여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960년대부터 남한에서는 선사시대에 한반도에 거주했던 우리의 선조에 대하여 팔목할 고고인류학적 연구가 시작되었고 한강유역과 낙동강유역의 선사유적지가 발굴되고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민족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考古人類學적인 연구성과는 한반도에 알타이족과는 다른 선주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점차 학계에서 인정되고 그에 따라 국어와 알타이제어와의 친족관계보다는 다른 언어와의 계통적관계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김방한(1983)에서는 국어의 알타이어족설에 이의를 제기하고 古아시아族(Palaeo-Asiatics), 또는 古시베리아族(Palaeo-Siberians)과의 계통적 관계가 조심스럽게 제의되었다. 즉, 김방한(1976, 1978)에서는 고아시아족의 하나인 길리야크족의 언어가 한국어의 기충을 형성하고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였고 강길운(1988)에서는 이 가설의 증명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안들은 앞에서 강조한 고고인류학적 연구성과에 의거한 것이며 또 포폐 이후에 널리 확산된 反알타이語族說에 대한 반론을 뒷바침한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가설들은 북쪽의 고고인류학적인 연구성과와 함께 고찰되면서 새로운 민족어의 계통이 심도있게 연구되어야 한다.

또 한가지 국어사연구에서 남쪽학자들의 중요한 결함은 고구려어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며 渤海語에 대해서도 무지한 소치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대국어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언어는 주로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기록된 자료에 의한 것이다. 특히 고구려어와 백제어는 『삼국사기』地理志의 지명자료에 의존하는 바가 컸으며 지명에 대한 현지 방언의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고구려어에 대한 연구도 지명연구, 특히 방언에 남아있는 고구려어의 흔적들이 일차적인 자료가 될 것이며 이의 연구를 위하여는 고대 지명표기에 사용된 고구려의 이두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발해어에 대한 연구도 이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북쪽의 연구가 남한에서는 거의 이용될 수 없었고 현지 지명조사도 지금까지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앞으로 민족어의 변천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지명연구와 고구려 이두의 연구에 의거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학자의 학문적 교류는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끝으로 첨가할 것은 국어와 일본어의 비교와 계통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 하기로 하고 이 발표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주〉

- 1) Philip Johann von Strahlenberg: *Das nord- und östliche Theil von Europa und Asia, insoweit das ganze Russische Reich mit Sibirien und grossen Tatarei in sich begreiffet, etc.*, Stockholm 1730. 참조
- 2) R.K. Rask: *Den skytiske Sproget, Sammlede tildeles forhen utrykte Afhandlingen I*, København 1834, 및 Max Müller: *The Language of the Seat of War in the East, With a Survey of Three Families of Languages, Semitic, Arian, and Turanian*, London-Edinburgh-Leipzig, 1855 참조
- 3) Rosny(1864), Dallet(1874), Ross(1878)에서는 국어와 타타르제어와의

유형적 유사성이 지적되었고 Hulbert(1905)에서는 튜란체어의 하나인
인도의 드라비다어와 국어와의 유사성이 논의되었다. 특히
Rosny(1864)의 연구는 한국어의 계통을 밝히려는 서양학자들 최초의
논문으로 알려졌다.

- 4) 인구어족의 공통특질에 관하여는 Trubetzkoy(1936)의 연구를 참조하고 우랄-알타이 제어의 공통특질에 대하여는 Castrén(1857) 또는 "The Memory of M.A. Castrén, Speeches Held on the Occasion of the One Hundreth Anniversary of His Death, May 7, 1952", *JSFOu* 56: 2(1952)를 참고할 것.

5) 람스테트의 한국어는 그가 핀란드의 駐日大使館에 근무할 때 일본에서 채용한 한국인 교사로부터 학습한 것으로 그의 한국어 어원에 관한 연구와 다른 알타이어와의 비교연구에 관하여는 직계 제자인 Penti Aalto가 쓴 논문, Aalto(1975)가 있어 소상이 알 수가 있다.

〈참고문헌〉

- 강길운(1977) : 『백제어의 계통론Ⅰ』, 『백제연구』 제8집(1977), 서울

강길운(1978) : 『백제어의 계통론Ⅱ』, 『백제연구』 제9집(1978), 서울

강길운(1983) : 『한국어와 길약어는 동계이다Ⅰ』, 『한글』 제182호,
(1983), 서울

강길운(1988) : 『한국어계통론, -개설, 문법비교론-』, 형설출판사,
1988, 1, 서울

김방한(1976) : 『한국어 계통연구의 문제점』 『언어학』 제1호(1976),
서울

김방한(1980) : 『한국어계통연구서설』, 『동아문화』 제17집(1980), 서
울

김방한(1983) : 『한국어의 계통』, 민음사, 1983, 서울

김병제(1961) : 『조선민족어의 형성에 관하여』, 『조선언학』 제3호
(1961, 8) pp.37-43, 평양

김수경(1989) : 『세나라시기 언어력사에 관한 남조선학계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평양출판사, 1989, 5, 평양

김영황(1978) : 『조선민족어 발전력사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

- 사, 1978, 9, 평양
- 김완진(1967) : “한국어발달사(음운사)”, 『한국문화사대계』Ⅴ(언어·문학사), 1967, 서울
- 김윤경(1938) : 『朝鮮文字 及 語學史』조선기념도서출판관, 서울
- 김형규(1962) : 『국어사연구』, 일조각, 1962, 서울
- 김형규(1975) : 『국어사개요』, 일조각, 1975, 8, 서울
- 류 렐(1982) : “우리말이 걸어온 역사(4) : 고구려, 백제, 신라는 글자생활도 같이하여 왔다.” 『문화어학습』2호(1982, 4), pp.13-15
- 류 렐(1983) : 『세나라시기의 리두에 대한 연구』, -사람·벼슬·고장 이름의 표기를 통하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9, 평양
- 박병채(1968) : “고대삼국의 지명어 휘고”, 『백산학보』5호(1968), 서울
- 박병채(1971) : 『고대국어학 연구』,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71, 서울
- 송기중(1991) : “비교연구 : 국어와 북방민족어”,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동아출판사, 1991, 서울
- 송 민(1969) : “한일 양국어 비교연구사”, 『논문집』(성심여대)제1호(1969, 6), 서울
- 이기문(1961) : 『국어사개설』(초판), 민중서관, 1961, 8, 서울
- 이기문(1967) : “한국어형성사”, 『한국문화사대계』Ⅴ(언어·문학사), 1967, 서울
- 이기문(1968) : “고구려의 언어와 그 특징”, 『백산학보』제4호(1968, 6)
- 이기문(1972) : 『국어사개설』(개정판), 민중서관·탑출판사, 1972, 11, 서울
- 이기문(1973) : “한국말의 조상” 『월간중앙』3호(1973), 서울
- 이기문(1975) : “한국어와 알타이제어의 비교연구”, 『광복30주년기념 종합학술회의 논문집』(대한민국학술원), 1975, 12, 서울
- 이기문(1980) : “언어학적 측면에서 본 한민족의 기원”, 『민족문화의

- 원류』, 1980, 서울
- 이승녕(1950) : “우랄-알타이어의 공통특질고”, 『어문』2-1(1950), 서울
- 이승녕(1967) : “한국방언사”, 『한국문화사대계』V(언어·문화사), 1967, 서울
- 조재훈(1973) : “백제어언연구서설”, 『백제문화』제6집(1973, 12), 서울
- 졸 고(1991) : “비교연구: 국어와 일본어”,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동아출판사, 1991, 서울
- 홍기문(1957) : 『리두연구』, 과학원출판사, 1957, 12, 평양
- 홍기문(1963) : “삼국시대의 지명과 조선어의 계통문제”, 『조선어학』4호(1963, 11)pp.52-끝, 평양
- 小倉進平(1940) : 『朝鮮語學史』刀江書院, 1940, 東京
- 河野六郎(1945) : 『朝鮮方言學試攷』, 東都書店, 1945, 京城
- 白鳥庫吉(1897) : “日本書記に見える朝鮮語の解釋”, 『史學雜誌』, 第8編 第6號(1897), 東京
- 白鳥庫吉(1914-1916) : “朝鮮語と Ural-Altaic語と比較研究”, 『國學院雜誌』(4-2, 3, 5)(1914), 5-1, 2, 3, (1915), 6-2, 3(1916), 『白鳥庫吉全集』에 재록됨, 東京
- 白鳥庫吉(1915) : “言語上より觀たる朝鮮人種”, 『人類學雜誌』30-8(1915), 東京
- 新村出(1916) : “國語及び朝鮮語の數詞に就いて”, 『藝文』第7券 第2, 4號, 1916
- 服部四郎(1948) : “日本語と琉球語、朝鮮語、アルタイ語との親族關係”, 『民族學研究』13-2 「日本語の系統」(1948), 東京
- 村山七郎(1963) : “高句麗語と日本語との關係に關する考察”, 『朝鮮學報』제26호(1963), 東京
- Aalto(1795): Penti Aalto, "Ramstedt and Altaic Linguistics", *Central Asiatic Journal*, 14-3, 1975.
- Aalto(1982): Penti Aalto, "Proposals Concerning the Affinities of Korean", *MSFOu*, 181, 1982, Helsinki.
- Aston(1879): W.G. Aston, "A Comparative Study of the Japanese and

- Korean Languages", *The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XI, 3, August, 1879.
- Castrén(1857): Dr. M.A. Castrén, *Versuch einer koibalischen und kara-gassischen Sprachleher nebst Wörterverzeichnissen aus den tatarischen Mundarten des Minussinschen Kreises*, St. Petersburg, 1857.
- Collinder(1952): Björn Collinder, "Ural-Altaisch", *UAJ* 24, pp.1-26, 1952
- Dallet(1874): Ch. Dallet,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1974, Paris
- Edkins(1887): Joseph Edkins, "Connection of Japanese with the adjacent continental languages",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XV, 1887.
- Edkins(1895): Joseph Edkins, "Relationship of the Tartar languages", *The Korean Repository*, III, 11. 1895
- Gabelentz(1892): G. von der Gabelentz, "Zur Beurtheilung des Koteanischen Schrift-und Lautwesens", *Sitzungsberichte der Königlich Preuss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Berlin*, 1892.
- Hulbert(1905): H.B. Hulbert, *A Comparative Grammar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e Dravidian Dialects in India*, 1905, Seoul
- Parker(1886): Edward H. Parker, "Chinese, Corean and Japanese", *The China Review*, XIV, 4, 1886.
- Polivanov(1927): E.D. Polivanov, "K voprosu o rodstvennosti otnoseniyax koreiskogo i 'altaiskix' yazikov", *IAN SSSR*, 1927
- Poppe(1950): N. Poppe, "Review of G.J. Ramstedt's 'Studies in Korean Etymology'",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3.4, 1950
- Poppe(1960): N. Poppe, *Vergleichende Grammatik der Altaischen Sprachen*, 1960, Wiesbaden
- Poppe(1965): N. Poppe, *Introduction to Altaic Linguistics*, 1965, Wiesbaden
- Ramstedt(1926): G.J. Ramstedt, "Two Words of Korean-Japanese", *JSFOu* 55(1926), Helsinki
- Ramstedt(1928): G.J. Ramstedt, "Remarks on the Korean Language",

- MSFOu* 58(1928), Helsinki
- Ramstedt(1939): G.J. Ramstedt, *A Korean Grammar* MSFOu 82(1939), Helsinki
- Ramstedt(1949): G.J. Ramstedt, *Studies in Korean Ethmology*, MSFOu 95(1949), Helsinki
- Ramstedt(1952): G.J. Ramstedt, *Einführung in die altaische Sprachwissenschaft* I, MSFOu 104-2(1952), Helsinki
- Ramstedt(1953): G.J. Ramstedt, *Studies in Korean Ethmology* II, MSFOu 105-2(1953), Helsinki
- Ramstedt(1954): G.J. Ramstedt, *Additional Korean Ethmology*, ed. by P. Aalto, JSFOu 57(1954), Helsinki
- Ramstedt(1957): G.J. Ramstedt, *Einführung in die Altaische Sprachwissenschaft* I, MSFUu 104-1(1957), Helsinki
- Ramstedt(1966): G.J. Ramstedt, *Einführung in die Altaische Sprachwissenschaft* III, MSFOu 104-3(1966).Helsinki
- Ramstedt(1982): G.J. Ramstedt, *Paraalipomena of Korean Ethmology*, ed. by S.M. Kho, MSFOu 182(1982)
- Rosny(1864): Leon de Rosny, "Aperçu de la langue coréenne," *Journal Asiatique*, VI Sert. 3, 1864.
- Ross(1878): J. Ross, "The Korean Language.", *The China Review*, VI, 1878, Seoul.
- Trubetzkoy(1936): N.S. Trubetzkoy, "Gedanken über das Indo-germanenproblem," *Acta Linguistica* 1-2, Copenhagen, 1936

한국사상맥락에서 본 통일·평화관

김 영 두

I. 이끄는 말

현재 민족의 최대 현안과제를 말한다면 두말 할 것 없이 남과 북의 통일문제이다. 이러한 민족의 염원이 담긴 과제를 염두에 두고 금번 국제고려학회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언어와 철학』이라는 학술회의를 특히 남북학자 중심으로 주관함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필자는 「한국사상 맥락에서 본 통일·평화관」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평화통일관」이라 하지 않고 「통일·평화관」이라 함은 앞으로 남과 북이 화해와 공존의 대원칙하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교류하며 통일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제 통일 이후의 평화정착의 문제에도 관심가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다. 한국사상의 맥락에서 이러한 문제를 고찰할 때 고찰할 수 있는 사상과 철학이 다수 있지마는 여기에서는 제한된 시간의 발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특징이 있다고 보는 다음의 몇 가지 사상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한」의 철학에서 본 통일·평화관

한국정신 또는 철학의 시원을 말한다면 「한」(흔)의 정신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한」의 정신은 순수한 우리 민족의 기본정서가 담긴 철학이요 숨결이며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종교와 윤리, 도덕, 정치, 경제 등 모든 면의 기본적인 정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한」의 개념이나 철학적 성격에 대하여는 몇 편의 선행연구도 있다. 대표적인 몇 분을 듣다면 육당 최남선, 안호상, 최민홍 박사 및

근래에 연구성과가 큰 김상일 박사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안호상 박사는 「한」이 내포하는 의미를 무려 22가지나 들고 있는데 간추려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크다(大) 2)동이다(東) 3)밝다(明, 鮮) 4)하나다(單一, 唯一) 5)통일
하다(統一) 6)꾼, 끗(大衆) 7)오래(久)참음 8)일체, 전체 9)처음(始初)
10)한나라, 한겨레(韓民族) 11)회다(白) 12)바르다(正) 13)높다(高) 14)같
다(同) 15)많다(多) 16)하늘(天) 17)길다(長) 18)으뜸이다(元) 19)위다(上)
20)임금(王) 21)온전하다(全) 22)포용하다(包容)¹⁾

이러한 『한』의 개념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와같이 형성되었고 또한 오늘날에도 민족의 기본감정은 이 『한』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남한에서의 좋은 예로 지난 1988년에 성공적으로 치른 올림픽등을 들 수도 있지만 최근인 1993년 7월 26일에 발생한 아시아나 국내여객기 추락사고시에 추락지인 전남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마천부락 주민들이 솔선하여 발휘한 구조활동에서도 우리 민족의 저변에 깔려있는 이 『한』의 정서를 찾아 볼 수 있다. 66명이 사망하고 44명이 부상을 입은 이 사고시 추락기로부터 먼저 문을 열고 나온 3명의 젊은 승객들은 놀라움과 아픔을 자제하고 그 중 2명이 마을로 내려가 사고 소식을 전하자 남녀노소 할것 없이 200여 마을 주민들이 순식간에 산정으로 뛰어 올라가 구조활동을 벌였기에 그래도 생존자가 많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정황을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이렇게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모두가 신들린 사람처럼 산으로 뛰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마천부락 사람들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저 닥치는 대로 낫이며 담요같은 것들을 주워들고 산으로 치달렸다.』²⁾

이글에 나타나 있듯이 어떠한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신들린 사람처럼 하나가되어 헌신하는 자세에서 우리 민족에게 면면히 흘러온 『한』사상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곧 『한』사상인 것이다. 이렇게 내 이웃과 사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솔선하여 헌신에 앞장서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기뻐하는 등의 동질성이 곧 「한」의 철학이라 하겠으니 이러한 「한」의 철학에 바탕하고 보면 남과

북이 곧 한 민족이요 한 국가였으므로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몇 가지 과제들을 대화로서 잘 해결해 나간다면 결국 분단 이전의 한 국가와 민족으로 되돌아 갈 것이다. 이 때에 또한 「한」의 정서에 의하여 서로 부족함을 살피고 잘한 점을 본받게 되어 이 땅에 비로소 평화가 오지 않을까 본다.

III. 元曉의 和諍論에서 본 통일·평화관

원효(617~686)는 많은 저술과 업적을 남겨 중국으로부터 해동성자라는 칭호까지 얻었으며 한국은 물론 일본 불교사상계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 인도·중국·한국의 불교계에서 역사적 인물 한 분 씩을 꼽는다면 龍樹·지의, 그리고 원효를 들 수 있다고 한다³⁾. 이러한 원효사상의 특징은 용수처럼 대승불교를 개척함이나 天台智의와 같이 대·소승 교의의 총정리와 會三歸一의 一乘佛教 건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소승, 공·성·상의 대립으로 인한 여러 쟁론을 두루 화합 회통하게 하여 一味의 경지로 歸一시키고자 한 「十門和諍論」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어떠한 관념이나 이념의 격차에 의한 쟁론이 분분했던 것으로 인도에서 발원한 대·소·성·상의 모든 교의가 중국에 와서 몇 갈래의 학파와 종파로 갈라지고 이를 배워온 신라에서 그대로 본받아 각각 자기 종지의 우월함을 주장하자 이러한 정황을 한탄한 원효는 「禪是佛心 教是佛語」임을 인식하고서 이를 會通歸一시켜 하나의 회통불교를 건설한 것이다. 원효는 華嚴經宗要·法華經宗要 등 무려 17종에 이르는 宗要를 저술하였는데 여기에서 「宗」은 多를 전개함을 말하고 「要」는 一로 통합함을 말한다. 즉 多即一·一即多·多中一·一中多의 논리를 제시한 것이다. 이를 바꾸어 開合의 논리로도 설명했다. 즉 開하면 無量無邊之義가 전개되지마는 合하면 하나로 混融되어진다는 논리이다. 원효의 진리인식 방법은 이 개합과 중요의 논리로서 전개되어졌는데 百家의 諸說을 이 논리로서 회통시켜 나간 그것이 곧 화쟁의 논리인 것이다. 이러한 開合宗要의 논리는 그대로 우리의 통일 논의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남북으로 나뉘

어져 있고 통일 논의가 다양함은 開와 宗이라 할 수 있고 이를 하나로 모아 통일을 성취함을 곧 숨이요 要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의 논리는 어느 하나만을 고집하지는 않으므로 현실의 정치체계에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하나 이를 통일을 지향하되 남북이 공존할 수 있는 길과 나아가 우리 민족이 번영하게 되는 길을 一파 함께 多의 논리로 이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본다. 즉 통일로 감은 一이요 남북공존과 민족 개개인의 안정과 발전을 생각함은 多의 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 양자를 생각할 때에 비로소 안정과 평화가 함께 할 것이다. 이러한 원효의 업적을 평가하여 육당 최남선은 그의 「조선불교」에서 「인도 및 서역의 緒論的 불교, 支那의 各論的 佛敎에 대하여 조선에서는 최후에 結論的 불교를 건립하였다」고 까지 하였다.

會三歸一의 法華一乘論도 和諍의 논리가 된다. 이러한 會通의 논리를 통달한 원효에게 당시 三國統一을 열망하던 무열왕이 그 이념과 방향을 묻자 그대로 會三歸一의 논리로서 삼국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여 무열왕의 결심을 굳히게 하는데 크게 역할했다는 역사적 사건은 오늘의 우리도 매우 관심을 갖어야 할 교훈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분단된 남북이 통일로 가야할 당위성을 찾아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을 지향하되 그 양식은 과거와 같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은 공존의 논리에 바탕되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남북 어느쪽도 바로 독일식 흡수 통일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공동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기에 먼저 국가연합이니, 연방제니 하는, 즉 단계적 통일방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본다. 통일은 첨예한 과제들이 놓여 있는 현실문제이기에 이념제시만 가지고 해결될 성질의 일은 아니라 하겠으나 그렇다고 눈앞의 현실문제만 보아도 또다시 불행이 올 수 있으므로 철학과 새로운 이념을 가지고 현실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자세가 원효의 和諍哲學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으로 보며 아울러 필자가 그간 몇번 북한학자들을 접촉할 때도 강조한 통일 이후를 위한 철학도 준비될 것이다. 결국 그 방향은 中道의인 調和哲學이 아닐까 본다. 왜냐하면 中和主義 方向이라야 이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中道의 개념이나 내용에 대하여는 이글의 후미에서 논술코자 한다.

IV. 張顯光의 道一元論에서 본 統一·平和觀

張顯光(1554-1637)의 字는 德晦요 호는 旅軒이며 그의 글인 「旅軒說」에 의하면 그는 나그네 생활을 많이 했다. 조선조 명종 9년에 지금의 경북 구미에서 출생했으며 39세시에 왜란으로 온갖 고초를 겪었는데 이때 겪은 기록이 「龍蛇日記」이다. 임란때 피난후 돌아와보니 집이 폐허가 되었으므로 유랑생활을 하다가 잠시 벼슬길에 들기도 했고 유랑생활을 계속하다가 53세에야 門入과 宗人們의 노력으로 옛 집터에 안주하였다. 병자호란때는 義軍을 돋기도 했으며 84세로 일생을 마쳤다. 그의 『易學圖說』은 程子나 朱子의 易傳·易本義에 따르지 않는 독자적 견해로 평가 받는다⁴⁾. 그는 『易學圖說』이외에 수종의 저술을 남겼는데 그의 총체적 사상인 『道一元論』에서도 통일과 평화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

旅軒은 理氣보다 더욱 근원적인 道가 궁극의 실체로서의 創造者라 하였으니, 그의 『宇宙說』에서 『宇宙以下是 곧 이른바 形而下者요, 그 도는 곧 이른바 形而上者이다. 形而下者란 반드시 始가 있고 終이 있고 內가 있고 外가 있으나, 形而上자는 스스로 始도 없고, 終도 없으며, 또 內도 없고 外도 없으니, 과거로 소급해도 始極이 없고, 未來에도 終極이 없으며, 광대함에 外極이 없고 微小함에도 內極이 없는 것이다. 까닭에 이를 미루어 소급하면 宇宙가 나기 전에 道는 그 이전에 있었고 이를 미루어 미래로 나아가도 宇宙는 없었지만 道는 無窮하다』⁵⁾고 규정하였다. 또 이어서 『만물을 만들고 여러가지 사물이 있게 하는 것은 天地요, 天地를 만들고 宇宙가 되게 한 것은 道이다. 그러므로 天地를 創造하는 道가 따로 天地밖에 있는 一道가 아니며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는 道 또한 따로 天地를 만드는 道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천지를 창조하였고 또 만물을 창조함이 있다면, 같은 하나의 道이니, 어찌 두가지 임을 용납하리까』⁶⁾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旅軒은 形而下者에 대하여 形而上者로서의 道를 말했고 또 한 현상의 만물과 天地를 창조한 모체는 하나의 道임을 강조하였다. 즉, 바꾸어 말하면 도에 의하여 천지와 만물이 전개되어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旅軒의 道一元論的 論理는 그대로 우리의 統一問題와 평화정착을 위한 철학적 논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현재의 南北은 분단이전에 하나였으며 또 앞으로 다양한 사회상이 있다해도 근원도 道가 하나이듯이 하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

V. 少太山 朴重彬의 一圓思想에서 본 統一·平和觀

少太山 朴重彬(1891~1943)은 한국의 新宗教인 圓佛教의 開創者이다. 그는 1891년 5월 5일 전남 영광에서 탄생했으며 7~8세시로부터 宇宙自然現象에 대한 의문을 갖고 그 해결에 몰두하기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되었고 26세때인 1916년 4월 28일 大覺을 이루었다. 少太山은 大覺 후 당시의 時代思潮와 未來를 예견하고서 『物質이 開闢되니 精神을 開闢하자』라는 개교표어를 제시했고 저축조합을 결성(1917)하고 방언공사(1918. 4~1919. 3)를 직접 행하여 3만여 평의 농토를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경제안정을 먼저 도모한 후 직접교리를 저술하는 등의 활동을 하며 종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소태산의 기본사상은 우주진리의 상징인 一圓相의 信仰과 修行이 중심축이 되며 여러가지 교리체계가 형성되었는데 그중 統一과 平和에 관계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일원주의 사상에서 통일과 평화사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일원(○)은 원불교 교리의 구심체로 믿음의 대상이요 인격연마의 표준이다. 이 일원은 우주만유의 근원처, 모든 중생의 본래 마음자리, 모든 성현들의 깨달아 확인한 진리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원은 모든 종교의 귀일치요 삶의 궁극적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원상에 대한 법어에 의하면 『이 일원상의 진리를 覺하면 十方三界가 다吾家의 소유인 줄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⁷⁾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일원상 법어』에서 볼 때에 현상세계에서 각각으로 보이는 만물도 알고 보면 둘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하물며 남북의 분단이야 어찌 타당성이 있겠는가 먼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간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여야 하고 또 그간 분단을 경험함으로서 하나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으니 이것 또한 소중한 경험과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경험할 수도 있듯이 어떤 원한이나 섭섭함에 얹매이면 그것 때문에 좋은 면과 발전적인 면, 전체적인 면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남북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사나 어떠한 이해관계등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통일작업을 수행하거나 연구함에 있어서도 남북의 온국민이 나아가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큰 道에 바탕하여 행하였으면 한다. 여기에 일원상의 진리가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본다. 소태산은 말하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함이니 만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면 이는 쓸데 없는 일이라』⁸⁾라고 하여 일원상의 진리를 善用할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일원의 진리가 실제에 선용될 때에 평화는 자연스레 건설될 것이다.

둘째, 恩을 알고 이에 대한 報恩思想에서 통일과 평화의 철학을 찾아 볼 수 있다. 恩은 우주의 근원인 일원의 진리가 작용하여 만물을 살려 나감을 말하는데 일원과 현상세계의 관계나 현상세계 상호간의 관계를 다 恩의 관계로 본다. 이러한 恩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 하며 일원의 진리에 바탕하여 나타난 恩의 세계를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의 4종으로 말한다⁹⁾. 천지은을 앓은 곧 큰 도를 앓이 되는데 이 은을 앓으로써 만유는 한가족이며 근래 세계적인 과제인 자연보호 및 환경보호 관념이 근원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부모가 나의 생명의 근원임을 생각할 때 노인문제가 해소될 것이며 공존공영하는 동포은을 생각하여 自利利他의 사고와 생활을 힘으로써 더 쉽게 통일에 이르게 되고 평화공존의 세계가 성취될 것이다. 또한 진리 및 법률은에 의해서 만유가 생명을 유지하며 우리가 질서 있는 생활을 하게 됨을 생각할 때 서로 준법정신이 일어날 것이다. 이 개

념들은 다 포괄적인 개념인데 특히 동포온의 경우 한겨레나 민족은 물론 모든 금수나 초목까지도 범주에 넣어 말한다. 일원의 진리라는 근원이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同胞요, 한恩의 범위안에 있으며 恩에 의하여 살아감을 알 때, 또한 서로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를 알 때에는 극단적인 투쟁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 소득분배나 노동쟁의 문제등도 이러한 입장에서 서로 생각해 본다면 주장은 하되 서로 분수에 넘지 않게 평화적 해결책이 모색될 것이다. 이러한 상호관계의 恩을 薄으로서 또 더욱 서로 背恩에서 報恩의 길에 서게 됨으로서 통일과 평화의 길도 가까워 질것이다.

셋째 소태산의 수제자인 鼎山 宋奎(1900~1962)의 『建國論』¹⁰⁾에서 통일과 평화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 宋鼎山은 광복의 해인 1945년 10월에 혼란스런 정국을 예견하며 제시한 『建國論』에서 통일과 평화의 길을 분명히 제시했다. 이 『건국론』에서 제시한 통일의 方法論은, 「中道主義」이다. 이 中道主義에 대하여 『建國論』의 주장을 보면, 「중도주의는 過와 不及이 없는 것이니, 즉 상대편에 서로 권리편중이 없는 동시에 또는 각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잘 운용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관리는 관리에 대한 권리, 민중은 민중에 대한 권리,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한 권리, 노무자는 노무자에 대한 권리가 서로 공평정직하여 조금도 강압착취와 횡포자행하는 폐단이 없게 하는 법으로 모든 정책을 이와 같이 사정하는 것을 중도주의라 하며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한편에 서로 불안이 없어서 조선현실에 사실 적당하지 않을까 한다」¹¹⁾는 것이다. 鼎山은 가장 큰 장벽은 바로 각자의 主義에 偏養하고 中道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서로 調和하는 정신이 없는것¹²⁾이라 하면서 정치의 표준으로 중도주의가 아니고는 도저히 통일 조국과 평화를 가져올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였다.

넷째 宋鼎山의 일원의 진리에 의거한 三大倫理 제창에서도 평화적인 통일, 그리고 통일이후의 조화윤리 사상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同源道理, 同氣聯契, 同拓事業의 삼대윤리를 말한다¹³⁾. 동원도리는 모든 종교와 이념이 그 근원은 한道理임을 알아서 서로 大同和合하자는 것이다. 동기연계는 모든 인류와 생명력이 근본은 다 같이 한 기운으로

연계된 한 동포임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하자는 것이다. 동척사업은 모든 사업과 主義, 주장이 다 같이 세상을 개척하는데 서로 힘이 되는 것을 알아서 대동화합하자는 것이다. 정산은 이 삼동윤리에 대하여 「앞으로 세계 인류가 크게 화합할 세가지 大同의 관계를 밝힌 원리이니 장차 우리 인류가 모든 偏見과 偏着의 울안에서 벗어나 한 큰 집안과 한 큰 권속과 한 큰 살림을 이루고 평화 안락한 하나의 세계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길 기본 강령이라 하였다. 이러한 삼동윤리는 그대로 통일과 평화의 윤리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일원의 진리에 의거한 삼동윤리를 볼 때 일원주의는 곧 대 세계주의요 평화주의요 相生주의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일원주의 정신으로서 이념의 장벽을 초월하여 통일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원불교의 지도자인 金大山(1914~)도 「和同의 道」와 「중도와 세계평화」¹⁴⁾라는 법어를 통하여 중도가 최상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중도주의는 곧 일원상 진리에 바탕한 調和와 平和 共存의 哲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金大山은 「反共도 좋고 勝共도 좋고 멸공도 좋지만 和共해야 하고 救共해야 함」을 강조한 바도 좋은 귀감이 된다. ¹⁵⁾

VII. 맷는말

지금까지 「한국사상 맥락에서 본 통일 평화관」이라는 주제로 「한」의 철학, 원효의 화쟁론, 장현광의 도일원론, 소태산 박중빈의 일원철학을 중심하여 일원주의와 은의 윤리를 살펴보았으며 그의 首제자인 송정산의 중도주의와 삼동윤리 등을 간결히 고찰해 보았다. 결국 이러한 사상은 더욱 체계화 되고 발전된 「한」사상이라 이해해도 좋을 것으로 보며 여기에서 통일과 평화의 철학을 찾아볼 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은의 윤리나 중도주의, 삼동윤리는 직접적으로 통일과 평화의 철학이 될 수 있다고 본다.

少太山은 금강산을 유람한 후 「金剛現世界 朝鮮更朝鮮」¹⁶⁾이라 했으며, 조선은 앞으로 세계의 정신의 지도국이 될 것이라 하면서 조선은 지금 魚變成龍이 되어가고 있다¹⁷⁾라고 했다. 그러므로 이제 독일 통일

의 과정과 결과를 교훈삼아 우리의 정신과 실정에 적합한 통일방안이 中道와 中和主義의으로 나을 것이라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사상체계를 통하여 통일 이후의 調和哲學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1993. 8. 28-31 복경)

〈주〉

- 1) 안호상 外, 『국민윤리학』(서울 배영출판사, 1977) pp.147-150.
- 2) 동아일보 사설, 1993.7.29일자.
- 3) 이종익, 원효의 「十門和諍論」研究(원효성사의 철학세계, 대한전통 불교 연구원, 1989, p.327)
- 4) 劉明鍾著, 『韓國思想史』, 이문출판사, 1985, p.408.
- 5) 旅軒性理說 卷八, 宇宙說.
- 6) 위의 책
앞의 책, 『韓國思想史』, pp.408~415 참조.
- 7) 一圓相, 『圓佛教 全書』, 원불교 중앙총부, pp.23~24 참조.
- 8) 위의 책, p.25
- 10) 金永斗, 鼎山宋奎宗師의 『建國論』研究, 『韓國宗教思想再照明』
(진산 한기두 박사 학갑기념논문집 1993.)pp.1615-1634.
- 11) 宋鼎山, 『建國論』、『圓佛教敎故叢刊』제4권 부록.
- 12) 위의 책
- 13) 위의 책, pp.988~991(정산종사 법어 도운편 34~37)
- 14) 『하나의 세계』, 원광문고사, 1987, pp.66~69
- 15) 金大山, 「조국의 통일을 救共으로 이루자」, 『圓光』통권 제205호
(圓佛教 圓光社 '91. 9月) pp.22-23
- 16) 『원불교전서』, p.367(대종경 전망품 5)
- 17) 위의 책, p.381~382(대종경 전망품 23)

弥勒思想에서 본 統一方向과 統一韓國의 意義

김 삼 용

I. 弥勒思想에 대하여

1. 미륵사상의 유래

미륵은 석가세존의 제자였으나 현재에는 도솔천에서 모든 하늘사람들을 일깨우는 一生補處菩薩이다. 앞으로 수명이 8만 4천살에 이르면 이 세상에 下生하여 龍華樹 아래에서 成佛하고 3번의 說法會를 통해 모든 인간을 제도한다는 미래의 부처님으로 알려져 있다. 미륵에 대한 신앙은 인도에서부터 있어 왔으며,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로부터 중국을 통해 들어왔다. 이러한 미륵신앙은 위로는 국왕과 왕실로부터 아래로는 가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믿음과 의지의 대상으로 받들어져 우리 겨레의 고유신앙으로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처럼 민족의 숨결과 더불어 살아온 우리의 미륵신앙은 크게는 국가의 발전을 작게는 서민 개인의 안심입명에 적지 않은 힘이 되었다. 이렇듯 미륵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져야 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복되어야 한다는 희망의 상징이기 때문에 두메마을의 길가에도 자비의 웃음을 머금은 채 우리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미륵신앙의 전개를 전망함에 있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쪽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되어야 바람직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면을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믿는다. 또한 미륵 출현의 참뜻이 널리 올바르게 이해되어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과학시대의 현실에 알맞는 弥勒敎學의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미륵불의 출현시기

도솔천에 있는 미륵이 언제 이땅에 내려와 인간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異說은 있으나, 크게 三時說과 56억 7천만년설이 있다.

삼시설은 釋迦滅後 正法 500年, 像法 1,000年, 末法 10,000年說이다. 정법, 상법시대가 지나면 말법시대에 이르는데, 이 시기에 미륵불이 출현하여 용화회상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56억 7천만년설은 석가의 열반 뒤 56억 7천만 세에 이르면 도솔천의 수명이 다하여 도솔천에 거주하는 미륵이 인간이 사는 지상세계인 염부제에 내려와서 바라문의 여자 梵摩波提에 탄생한 후 더욱고 부처가 되어 용화(보리)수 아래에서 3번에 걸쳐 인연하는 사람들에게 설법을 행한다(龍華三會)는 설이다. 그러나 인도인의 숫자 관념은 우리와 다르다. 그러므로 56억 7천만년을 우리의 숫자 개념과 비교하여 이해하는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그저 56억 7천만년은 「많다, 크다, 오랜 후이다, 아직 멀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고작일 것이다.

어쨌든 미륵의 출현시기설은 한반도의 전래신앙 특히 구한말 水雲(崔濟愚, 1824~1863) 이후의 많은 신흥종교들과 교합하며 새시대의 도래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더욱이 관점에 따라서는 20세기 과학문명의 발달과 최근 지구촌시대의 화해·협력·평화와 행복추구의 세계가 오히려 미륵불이 출현할 시기로 보이며 미륵불시대인 것을 알 수 있다.

3. 미륵불의 출현장소

미륵불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즉 현대의 Mesianism의 실현장소는 지구촌의 어디일 것인가? 서양은 메시아니즘에 의한 성자의 출현이 성취되었으나 동양은 아직 갈망하는 상태에 있다. 더욱이 현대의 여러 가지 혼란된 세계상은 메시아의 출현을 갈망하게 하므로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까지 연결하여 「신메시아니즘」을 탄생시켰다.

이런 상황과 메시아니즘에 근거하여 해방 후 반도내에는 360여개의 신흥종교가 발생하였다. 이런 정후는 동양의 메시아니즘이 한국에 집

중된 한국적 특징을 이루고 있으며, 동양메시아의 출현이 임박했음을 예시한 것으로 본다. 특히 불교를 수용한 모든 나라와 비교해 볼 때 한 국의 미륵신앙이 가장 강렬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즉 현대적 메시아를 미륵불이라고 볼 때 그 출현 장소는 동양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중국, 일본, 한국의 세나라가 미륵불 출현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겠다. 특히 한국이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이미 包袋和尚을 미륵불로 모시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사회적 여러 여건이 선진화되고 풍요로워 현재보다 나은 미래의 이상사회 즉 미륵불의 출현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실제로 281회라고 하는 수 많은 외침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태된 전쟁과 굶주림과 고난이 없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이상사회를 건설할 미륵의 출현에 의해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다린 민족이다. 즉 민족의 숨결과 더불어 미륵신앙은 크게는 국가의 발전과 작게는 서민 개인의 安心立命에 적지 않은 힘이 되어왔다. 그러므로 새시대의 미륵불은 이미 한국에서 태어나셨거나, 태어나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Ⅱ. 韓半島의 國內外的 環境과 弥勒佛時代

미륵불시대를 조망함에 있어서 한반도의 분단원인과 국내외적 환경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 한반도의 환경을 미륵불시대와 대조해 보려는 것, 즉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미륵불시대라는 것을 확인하자는 것이다.

1. 한반도의 분단원인

19세기 말 세계 열강들은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하여 세력 각축전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에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일본이 1867년 명치 유신으로 근대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부국강병에 성공하여 제국주의 열강대열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한반도 안에서 1894년 청

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전승의 결과 일본은 한반도에서 다른 열강국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미국·영국들의 묵인하에 조선 왕조를 강제로 합병하였다.

이후 한민족은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등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자주적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였다. 결국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국에 패배하여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전시 연합국간의 합의에 따라 해방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전쟁기간 중에 형성되었던 미·소간의 협력체제는 붕괴되었으며, 소련은 전후에 세계각처에서 점령지역을 공산화하고 미국은 이러한 소련의 팽창정책에 대해 봉쇄정책으로 대응하는 냉전체제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미·소간의 대립이 한반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38선을 경계로 남북분단이 고착되어, 통일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민족운동은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체제구상의 벽을 뚫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남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수립이 선포되었고, 북에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를 수립하였다.

그후 남북이 서로 체제를 달리하여 오다가, 1950년 6월 25일 엄청난 회생의 6·25내전을 치르고도 남북분단의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분단과 6·25전쟁을 치르면서 남북한은 철저히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다른 발전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한민족의 분단은 본질적으로 한민족 자체 내부의 분열과 대립 및 갈등에 기인한 국내적 요인이 전후 전승국인 미·소간의 대립과 갈등에 기인한 국제적 요인보다 크다고 본다. 이것은 전후 전승강대국들에 의하여 점령된 오스트리아가 정치지도자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단결된 의지로 통일독립을 쟁취한 사실이나, 최근 주변강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이 국내외적으로 노력하고 특히 국제정치조건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통일독일을 이루한 사실에서도 여실히 증명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은 내부적인 요인에 더 비중을 두어도 무방하리라 본다.

2. 한반도의 국내외적 환경

한반도의 국제적 위상은 흔히 지정학적 조건과의 함수관계로 설명된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아시아의 대륙세력과 태평양세력 사이에 경쟁의 초점이 되어 왔다.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질서 변화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전반적인 국제정세의 분석이 긴요하다는 뜻이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정세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주변 4강과 남북한 당사자끼리의 관계도 간파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 일본 및 미국과의 관계 등 이 중삼각관계도 중요한 환경변수가 아닐 수 없다.

1985년부터 구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소위 「페레스트로이카」로 소련의 개혁, 개방을 시작하므로서 동서 양진영의 냉전체제가 해빙기를 맞으면서 新데탕트의 국제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동북아지역을 싸고 도는 4대강국들은 그들 나름의 다양한 목표와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복잡한 전략적 수단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국제관계 즉 4대강국들의 관계는 급격한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和解와 協力의 분위기를 증대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4대강국들이 경제적 분야에서 협력체제를 증대시키려 하고 있으며, 군사전략적 분야에서도 현상유지 내지는 군축의 분위기를 조성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반도 주변 4강은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를 그들의 세계적 또는 지역적인 수준에서 추구하려는 전략목표들과 밀접하게 연계시키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차원에서 그들은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북간에 오랜 논쟁거리였던 유엔가입 문제가 결국 동시가입으로 귀결되었고, 1990년 9월 국교를 수립한 이래 한국과 구소련의 맹주였던 러시아와의 관계는 다방면에서 긴밀해지고 있다. 또한 경제부문에만 국한되어 웠던 한중관계도 수교조약 체결이후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북한도 일본과의 국교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동안 적대적 감정으로 일관해 온 대미관계를 정상화시키고자 조심스런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요즈음 한반도 핵문제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 문제도 조만간 평화적으로 원만히 해결되리라 믿는다. 특히 이 핵문제만 해결되면 빠른 속력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되리라고 본다.

이러한 한반도의 국제적 환경의 변화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통일에 대한 성급한 기대를 유발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인 분석과 냉철한 대응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미륵불시대

經說에 의하면 미륵불이 출현하게 될 세상에는, 이 地上의 바다 면적이 줄어들며 땅이 평坦하게 넓어지고 토지가 비옥하여 농작물이 풍성하고 잡초와 병충해가 없어서 한번 심어 일곱번을 수확하며, 사람들은 질병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고 마음이 너그럽고 착해서 집집마다 문을 닫지 않으며, 水災·火災와 전쟁의 재앙도 없고 銛주림과 公害가 없으며, 사람들은 언제나 자애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공경(和順)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협조하여 누구에게나 부모형제와 같이 말씨가 겸손하다고 한다. 또한 大龍(인공강우기)이 밤에만 비를 내리고 낮에는 맑게 하며, 大夜叉(큰 로봇)가 한밤중에 길거리와 골목을 깨끗이 청소하며, 저자거리나 골목마다 明珠(전등)기둥이 있어서 대낮같이 밝고, 배설(大小便) 때에는 바닥이 갈라졌다가 볼일이 끝나면 고운 연꽃과 향기가 솟아나 악취를 없애주며…등등, 살기좋고 이상적인 세계가 된다는 것인데, 그러한 이상사회는 모든 미륵의 慈心訓道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다(『佛說彌勒下生經』, 大正藏 14, 421-423 및 『佛說彌勒大成佛經』, 大正藏 428-434).

그리고 『현우경』에 의하면 미륵불이 출현하여 구원받을 용화회상은 「욕심이 떨어져서 서로 양보하고 도우려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서로 뺏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사랑과 평화의 세상, 의식주가 풍요하여 넘치고, 주변환경이 칠보로 단장되어 화려하고, 밤과 낮의 구별이 없고 원근의 차이가 없어 사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TV, 광통신, 교통), 병이 없고 수명이 연장되는 세상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날 실현되고 있으며 실현할 수 있으므로, 바로 이 시대가 미륵불시대이며 용화회상의 시작이 아니겠는가. 이상사회(용화세계)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다가와주는 것이 아니며, 또한 관념과 希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미륵불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그것은 바로 한반도의 통일과 번영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가치 이념 사상의 향도력을 발휘하여야 하는 것이다.

III. 弥勒思想에서 본 統一方向

남북한의 통일정책은 두 정부가 그동안 내세워 온 이론과 제안·성명이 많았지만, 그 핵심은 통일주체, 통일목표, 통일방법 그리고 조국통일의 미래상이라는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미륵사상에서 본 남북한의 통일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미륵이 출현하여 건설할 사회와 국가가 용화세계라 한다면, 그런 용화세계는 남북이 통일되어야 건설될 것이다. 즉 한반도와 세계에 있어서의 용화회상 건설의 대전제는 남북통일이다. 나아가 용화세계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계에서 모든 인류가 개방과 화해와 협력 속에서 평화안락한 행복을 추구하는 세계가 된다고 한 것을 볼 때, 남북통일의 방향도 대전제는 평화적 통일이며, 그것을 위해 먼저 개방과 화해와 협력 속에서 상호교류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단일민족으로서의 공동생활권을 이루며 살아온 한민족은 일제의 혹독한 식민통치와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비극적인 국토분단과 이산을 강요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분단된 한민족의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복고적인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21세기를 향해 한민족이 웅비하는 모습을 창출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한민족공동체란 남북한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7천만 겨레가 한 핏줄, 한 민족이라는 정신적 유대로 연결되어 함께 번영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의 터전을 다시 이루어 이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같은 삶을 나누고, 서로 같은 운명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라는 공동체의식을 다져나가는 일이 급선무이다. 다행히 현대과학기술의 발달과 첨단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각자의 삶을 갈라 놓았던 경계선으로서의 전통적인 영토개념은 점차 회복해지고, 동족을 단위로 하는 공동체의 범위는 점점 확장되고 있으며, 더욱이 오늘날 세계는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인류의 역사는 정치적으로 자유가 증진되고, 경제적으로 의식주의 풍요로운 생활, 사회적으로 기회균등과 평화공존, 문화적으로는 정신 문명의 가치를 향유하며, 그리고 과학기술문명이 이루어내는 성과를 활용하여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조류의 변화는 인류의 관심이 체제나 이념을 떠나 보다 나은 삶, 인간다운 삶의 질을 추구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세계는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 따른 대립과 반목을 청산하고, 서로의 문을 활짝 열고 화해하며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함께 지향해 나가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미륵불 시대의 모습과 인류역사의 발달방향은 일치할 수 밖에 없고 또 일치해야 할 것이다. 시대의 향도자는 바로 이 방향을 바로잡아 나아갈 사명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미륵불시대의 주인공인 한민족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화해와 개방화 시대에 평화적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한 우리 한민족이 추구해야 할 현실적 목표는 우선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상호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여 같은 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민족공동의 생활권을 형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 인류역사의 흐름은 개인의 인격과 자유가 존중되고, 모든 사

람들이 화합 속에서 창의적인 경쟁을 통하여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임을 전제할 때, 같은 민족으로 출발한, 그러나 두 개의 민족으로 나뉘어진 한민족은 함께 공존하는 민주사회를 이룩하고 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꿈꾸는 인류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민족을 바탕으로 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성이다.

IV. 弥勒思想에서 본 統一韓國의 意義와 役割

이제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해오면서 서로 다른 길을 치달아온 남북한이 어떻게 동질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통일 독립민주화를 완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민족에게 주어진 과제이며, 21세기에 번영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 중에서 지도적 국가로서의 통일된 조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업인 것이다.

우리의 통일은 조국과 민족의 재통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개 이상의 국가사회가 하나로의 통합이나 통일이 아니라 5,000년의 유구한 민족사와 1,300년의 통일사를 경영해 온 단일민족이 다시 통일하려는 것이다. 물론 이 통일은 복고적인 원상회복이 아니라 세계사의進運과 궤를 같이 할 미래지향적인 창조적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조망하는 것은 차제하고라도, 미륵사상에서 볼 때, (지정학적)세계의 중심지이며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주도할 특히 사상·이념·가치를 주도하는 정신(도덕)문명의 중심지로서 세계의 부모국이 되므로, 21세기 나아가 미래세계의 역사를 향도하고 개척할 사명이 부여되어 있는 나라이다.

한반도에 있어서의 민족통일은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한민족 모두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이오. 역사적 과업이며, 세계인류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그러므로 더욱더 남북한 모두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통일국가를 완성하겠다는 실천의지를 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나아가 한반도의 국내외적 문제는 세계사의 문제이며 남북통일의 문제는 세계사의 획을 긋는 중대사이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는 이 시대의 전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이며,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곧 전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열쇠이자 새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에만 그치지 않고 곧 21세기의 선도자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 한민족은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의 화해분위기와 상호공존, 우호협력의 시대가 열려가는 현상을 잘 활용하여 역사가 한민족에게 제시한 분단 문제를 자주 평화 민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한민족의 번영과 미륵불시대의 세계평화를 향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의 이념·체제갈등의 화합은 21세기의 국가와 민족의 개념이 인류·전생령·지구촌으로 확대되고, 미륵불 지구촌시대에 인류가 화합·번영·평화공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상·가치관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만의 통일이 아닌 미륵불시대 이전의 상국·반목·약육강식의 역사에서의 동서냉전 산물의 마지막 잔재 제거와 화해·협력 그리고 평화추구의 역사를 이전하고 있는 지구촌시대·미륵불시대·21세기의 서막과 표본이 되어, 새시대의 미래상인 국제질서의 방향·가치관·사상·철학을 제시하고 실천하고 향도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주체적 견지에서 본 민족통일의 철학

박승덕

저는 먼저 북부조국학자대표단의 이름으로 남부조국에서 오신 철학자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들의 만남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국제고려학회 김성수선생님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난해 2월에 북남합의서가 채택발효된 이후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역전되어 또다시 악화되고 있는 엄중한 국면속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학자, 지성인들의 책임의식과 선도적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여야 할 절박한 민족사적요청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모임은 북남관계에서 대결의 추이를 막고 완화와 화해의 새로운 장을 펼치며 북과 남, 해외교포사회에서 민족의 통일과 장래발전을 위한 학자, 지성인들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학술토론회는 북부조국에서 발족된 《민족문제 연구회》의 대표단이 이남학자들과 처음으로 만나는 모임인 것으로 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뜻 깊은것으로 됩니다.

금년 2월에 평양에서는 갈라진 민족의 진정한 화해를 이룩하고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길 일념에 불타는 학자, 지성인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과 발전문제를 연구하는 학술단체인 《민족문제연구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북부조국의 학자, 지식인들이 이남과 해외교포 지성인들과 련대하고 협력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공동으로 이바지 하는것이 《민족문제연구회》의 목적입니다. 이 연구회는 앞으로 우리의 민족문제에 대한 다방면적인 연구활동을 벌리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이바지하는 북과 남, 해외교포사회의 학자, 지성인들의

공동토론회와 공동학술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문제연구회》대표단이 이 남의 철학자들과 자리를 같이한 의의깊은 이 토론회의 연단을 빌어 《주체적견지에서 본 민족통일의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비극적인 분단시대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단합, 발전과 번영의 통일시대를 능동적으로 개척해나가려면 공동의 민족통일철학을 가지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해와 단결을 지향하는 민족공동의 근본요구를 구현하고 민족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한 민족통일철학이 있어야 민족성원들의 분단의식을 통일의식으로 개조하고 민족의 진로에 대한 공통한 관점을 가질수 있으며 강력한 통일조국을 일떠세우고 그 찬란한 미래를 앞당길수 있습니다.

근 반세기에 걸쳐 하나의 민족안에 서로 대립되는 계급적리념과 사회제도가 고착되고 북과 남이 상반되는 역사적로정을 거쳐왔으며 민족적모순과 계급적모순이 엉켜있다는 사실을 넘두에 둘 때 주체적견지에서 민족통일의 철학을 정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옮바른 리론적해명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첫째로, 계급적다양성과 민족적단일성의 문제, 둘째로, 계급리념의 차이성과 민족리념의 동일성문제, 셋째로, 제도상의 대립과 국가적통일의 문제입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철학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심오한 리론적해명을 주고있습니다.

1. 계급적다양성과 민족적단일성

우리 민족의 통일은 북과 남에 있는 다양한 계급들, 그것도 적대되는 계급들을 단일한 민족공동체에 결합시키는 사업입니다. 서로 구별되고 대립되는 계급적리해관계를 가진 사회적집단들을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통일시키는 과제를 풀어 나가려면 무엇다보도 계급과 민족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민족과 계급에 대한 과학

적인 견해는 옳바른 민족통일철학을 확립하기 위한 출발적전제로 됩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북과 남의 다양한 계급들이 자기의 계급적리익에 기초하여 민족통일문제에 대하고 더우기나 이북사회를 령도하는 로동계급과 이남사회를 지배하는 자본가계급이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계급적립장에서 민족통일을 실현하려 하기때문에 통일은 곤난하거나 불가능할것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들은 계급적인 다양성과 대립성이 민족통일의 걸림돌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남의 일부 철학자, 정치학자들은 사회주의가 본래적특성에 있어서 계급해방의 사상이기때문에 이북사회주의자들의 통일정책은 남조선에서 계급혁명을 실현하는데 복종되어있다고 인식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북의 통일방안들이 민족의 이름으로 적화통일로선을 은폐하는 선전책략이라고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주로 계급과 민족의 관계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철학의 견해를 북의 지도리념인 주체철학에 기계적으로 옮겨놓는데로부터 비롯된것입니다. 주체사상은 일부 사람들이 쓰고있는것처럼 『맑스-렌닌주의의 국산화』이거나 『토착화된 맑시즘』인것이 아니라 맑스-레닌주의가 발생발전하던 시대와는 다른 역사적시대를 반영하고있는 새로운 지도리념입니다. 맑스-레닌주의를 로동계급철학의 영원한 대명사로 보는것은 시대의 발전에 상응한 철학의 진보를 부인하는 비력사주의적관점입니다. 헤겔이 정당하게 지적한바와 같이 철학은 사유에서 파악된 시대이며 시대적의식입니다. 초기대 맑스와 엥겔스의 견해는 서구라파 중요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정치적 및 경제적발전의 불균등성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단결에 의하여 동시혁명이 가능하였던 당시의 시대적조건과 결부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각국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단결에 의한 계급혁명에 주의를 집중하였으며 프로레타리아트가 민족적인것은 오직 자기의 계급적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계급으로 조직되는 집과 직접적인 투쟁무대가 필요하기때문이라고만 보았습니다.

맑스와 엥겔스의 이러한 립장은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이 내용상에서가 아니라 형식상에서만 민족적이며 《프로레타리아트에게는 조국이 없다》고 한 《공산당선언》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레닌은 계급과 민족에 대한 맑스주의의 견해를 그대로 계승하였으며 민족의 리익을 프로레타리아트의 리익에 종속시키고 민족적 자결과 해방에 대한 문제를 사회주의를 위한 계급투쟁의 문제에 복종시켜 취급하는 립장을 강화하였습니다. 레닌주의에서는 특히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의 민족해방혁명이 종주국프로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혁명이 성공하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으로 되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민족을 계급에 종속시키고 민족문제를 계급해방문제의 일환으로 본 맑스-레닌주의의 견해는 민족적자주성을 옹호실현하는것이 세계적추세로 되지 못하고 사회적변혁운동의 대중적지반이 상대적으로 넓지 못하였던 역사적시대에 기초한것으로서 리론적으로 미숙한것이였으며 실천적으로 그 진리성을 립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쏘련을 비롯한 일련의 이전 사회주의나라들에서 민족정책의 실패를 가져온 하나의 원인으로 되였습니다.

주체철학은 맑스-레닌주의철학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민족관을 제시하고있으며 계급과 민족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명을 주고있습니다. 민족과 계급의 관계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리해의 제한성은 주체철학에 의하여 극복되었습니다.

민족은 계급과는 질적으로 다른 징표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사회적집단입니다. 계급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와 정권에 대한 장악관계의 공통성에 의하여 결합되지만 민족은 피줄의 공통성, 언어와 심리에서 표현되는 문화적공통성, 령토의 공통성에 의하여 결합됩니다.

계급이 없어지기 전에는 민족안에 다양한 계급이 있게 되며 착취제도에서 살고있는 민족안에는 적대적인 계급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어떠한 계급에 속한 사람도 민족의 성원이기때문에 민족적공통성을 이루는 징표를 체현하게 되며 민족적관계에 의하여 결합되게 됩니다. 따라

서 서로 구별되고 때로는 적대관계에 있는 다양한 계급들이 있어도 민족은 단일하고 동질적인 공동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여러 계급들이 단일하고 동질적인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 는 것이 민족사회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계급적인 다수성, 다양성, 적대성과 민족적인 단일성, 동질성은 불상용적인 것이 아니라 상용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계급적인 다양성과 민족적인 단일성의 병존과 양립은 민족사회를 구조적으로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민족이 분열된 우리 나라에는 북의 사회주의적인 로동자와 농민, 남의 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 농민 등 다양한 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급적본성의 견지에서 보면 남의 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가 적대적일뿐 아니라 북의 로동계급과 남의 자본가계급도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계급들은 다 단일한 조선민족의 구성부분입니다.

계급적인 대립과 적대가 민족의 단일성과 동질성을 파괴하는 원인으로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잘못입니다.

민족의 분열을 극복하려면 계급적인 다양성과 대립성 속에서 민족의 단일성과 동질성을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이북사회를 령도하는 로동계급과 이남사회를 지배하는 자본가계급이 대립되여있어도 민족적인 단일성과 동질성에 기초한다면 민족의 통일을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계급적대립을 규정하는 요인에 비하여 민족적 동질성을 규정하는 요인이 훨씬 더 공고하기 때문입니다.

계급적대립을 규정하는 생산수단과 정권에 대한 관계는 사회제도에 따라 변화하지만 민족적동질성을 규정하는 피줄, 언어와 심리, 령토의 공통성은 사회제도의 교체와는 관계없이 유지보존됩니다. 민족적단일성을 담보하는 요인이 장구한 역사적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불변하다면 계급적대립을 조건짓는 요인은 훨씬 더 가변적입니다.

민족의 분열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조성된 북의 로동계급과 남의 자본가계급의 대립보다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고착된 민족

적인 동질성이 비할바없이 공고한 것입니다. 계급적인 대립에도 불구하고 민족적동질성에 기초하여 조국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은 추상적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변시키는것은 전적으로 모든 민족성원들 통일의지와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으로 계급적뉴대에 비하여 민족적뉴대가 더 생활력을 가지고있기 때문입니다.

민족은 오랜 역사적과정에 걸쳐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는 기본단위로 존재하고 발전하여왔습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의연히 민족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이 영위되고 인류역사가 창조되는 기본단위로 되고있습니다. 민족이 형성된 다음에는 어떠한 계급도 민족적뉴대속에서 살기마련입니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민족밖에 있는 계급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이 있을수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봉건사회가 멸망하면 그 기본계급인 지주와 농노가 없어지듯이 사회의 기본계급이 생존하는 시간은 해당 사회제도의 존속기간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민족은 사회제도의 변혁에 따르는 사회의 기본계급의 출몰과 관계없이 그 존재를 계속 유지합니다. 앞으로 사회주의사회의 발전과정에 계급은 없어져도 민족은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민족이 계급에 비하여 그 존재의 지속성이 보다 오랜 사회적집단이며 민족적뉴대의 생활력이 매우 크다는것을 보여줍니다.

민족이 계급적으로 화해된 집단이 아니라 하여 민족적뉴대의 견고성과 생활력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것은 잘못입니다. 계급적인 불화와 대립이 있더라도 민족적뉴대를 강화한다면 민족의 분렬을 극복하고 그 통일을 반드시 이룩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대립되는 계급들도 민족공동의 리익이 보장되어야 자기의 리익을 실현할수 있기때문입니다.

민족은 적대되는 계급들도 포함한 다양한 계급들의 전일체입니다. 계급과 민족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속에 있습니다. 부분과 전체가 변증

법적련관속에 있는것만큼 전자의 상대적독자성을 보지 않는것도 오유이며 후자의 독립성과 전자에 대한 규제적역할을 무시하는것도 잘못입니다. 따라서 민족전체의 리해관계를 떠난 계급의 리해관계란 있을수 없으며 민족공동의 리익이 보장되어야 계급의 리익도 보장될수 있습니다.

계급의 운명은 민족의 운명과 뗄수 없이 연결되어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사회생활과 역사창조의 기본단위로 되고있는 조건에서 민족의 운명이 개척되어야 계급의 운명도 개척될수 있습니다. 계급과 민족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결합되어있습니다. 민족을 단순히 계급투쟁의 마당으로만 보거나 계급과 민족의 관계를 내용적인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으로 인정하는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민족의 운명이 개척되려면 무엇보다도 민족이 통일된 전일체로 되여야 합니다. 민족의 통일과 독립은 민족공동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민족이 분렬되고 남에게 예속되면 민족의 자주적발전도, 창조적번영도 생각할수 없습니다.

북과 남의 어떤 계급도 민족의 분렬에서 리득을 볼수 없습니다. 하루 빨리 민족이 통일되어 민족공동의 리익이 보장될때 계급들의 리익도 실현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소한 리해관계에 사로잡혀 계급적 리익을 민족공동의 리익우에 올려세우거나 계급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민족통일을 위한 투쟁에 대치시켜서는 안될것입니다. 민족 안의 대결을 극복하고 민족적화합을 이룩하는것이 절박한 과제로 나서고있는 오늘 조선민족이라면 누구나 계급적리익에 앞서 민족공동의 리익을 도모하여야 하며 민족의 통일위업을 이룩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2. 계급리념의 차이성과 민족리념의 동일성

우리 민족의 통일은 북과 남에 근 반세기에 걸쳐 서로 대립되는 계급리념, 이데올로기가 뿌리를 내린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급리념은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으로 표현되고 사람들의 활동과 생활은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의하여 지도됩니다. 대립되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화합하고 단결하려면 계급리념과는 구별되는 리념적공통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주의리념을 신봉하는 북의 인민들과 자유민주주의 리념을 지지하는 이남주민들이 민족적 단합을 이루하여 통일을 실현하려면 불가피하게 민족공동의 리익을 반영한 리념, 간단히 말하여 민족리념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이로부터 민족통일의 철학을 확립하려면 계급리념의 차이성과 민족리념의 동일성에 대한 문제에 옮바른 해명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상의 대립이 민족의 분단도 가져왔고 민족통일에 넘을수 없는 담벽을 쌓아놓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나라에서 한 이데올로기가 다른 이데올로기를 타승하여 민족사회를 지배하는 유일한 이데올로기로 되여야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것처럼 인식하고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원래 민족을 경시하는 계급주의이기 때문에 이남의 민족주의자들이 이북의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민족통일에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들은 이북의 사회주의리념인 주체사상이 민족주의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이러한 사고와 이해의 기초에는 두가지 오해가 깔려 있습니다. 그 하나는 계급리념, 이데올로기만이 사람들의 활동에 본질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을 가지고 민족리념의 독자적지위와 중대한 역할에 대하여 보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체사상이 진보적민족주의와 통일되어있다는것을 파악하지 못하는데있습니다.

산업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에로 이행함에 따라 로자간의 계급투쟁이 침예화되고 특히 제2차대전후 세계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두 체계로 량극화되면서 사회주의리념과 자유민주주의리념사이의 투쟁이 치렬해진것을 배경으로 계급리념문제에 대한 관심이 비상히 커졌습니다. 이로부터 부르조아학계에서나 사회주의학계에서나 계급리념이 사람들의 의식구조와 사회의 정신생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는 커다란 주목을 돌렸으나 민족리념에 대해서는 경시하게 되였습

니다.

일찍기 프랑스부르죠아혁명을 사상적으로 준비한 계몽주의철학자들에 의해서는 《민족정신》, 《민족의지》등이 광범히론의되었으나 20세기 구미부르죠아학계에서는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민족주의가 커다란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맑스-렌니주의에서도 민족주의는 민족리기주의와 민족베타주의로 인식되어 배격되었습니다.

사회의 정신생활에서 계급리념의 의의만을 강조하고 민족리념의 역할을 경시하며 이데올로기의 차이만을 내세우고 각이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동일한 민족리념을 가진다는 사실에 눈을 감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민족은 계급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사회적집단입니다. 다른 민족에 대하여 독자적인 생활의 공동체로 살며 발전해나가는 집단이라는데 민족의 특성이 있습니다. 민족은 독자적인 집단으로 생존하고 번영하려는 요구를 가지며 그것을 집단의 공동의 생활력으로 실현해나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은 하나의 사회적생명체입니다.

민족의 사회적생명이 독자적인 집단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와 그것을 자신의 생활력으로 실현해나가는데서 나타나는것만큼 그것은 온갖 예속을 반대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려는 성질인 자주성으로 표현됩니다. 다시말하면 자주성이 민족의 사회적생명으로 됩니다.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민족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의식 형태를 민족리념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념은 다른 민족에 예속되거나 동화되는것을 반대하고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용호하며 다른 민족의 힘에 의존하는것을 반대하고 자기 운명의 개척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는 의식으로 표현됩니다.

민족은 자주적인 민족리념을 가질 때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쥘 수 있으며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과 각오를 가지고 민족의 통성과 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족리념을 계급리념에 종속시키면서 민족리념이 차지하는 독자적위치와 그 커다란 역할을 무시하는것은 잘못입니다.

사회에서는 계급의 일원으로 되는 사람이 동시에 민족의 성원으로

됩니다. 민족은 전일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성원들을 집단적 생명으로 결합시킵니다. 민족적 자주성은 민족을 독자적인 집단으로 살며 발전하게 하는 생명인 것 만큼 집단적 생명으로 존재합니다. 민족의 운명이 개척되어야 개인의 운명도 개척될 수 있는 것 만큼 민족의 집단적 생명은 그 성원들의 개인적 생명의 모체로 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계급에 속한 사람들도 같은 민족의 성원으로서 민족 공동의 자주적 요구에 자기의 개인적 요구를 일치시키게 됩니다. 여기에 계급리념을 달리 하는 사람들도 민족의 자주적 요구를 반영한 민족리념을 같이 가지게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계급리념의 차이성만 강조하고 민족리념의 동일성을 경시하게 되면 사람들의 정신 생활과 실천 활동에서 민족의식이 노는 커다란 역할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행전이후시기 세계적 범위에서 새롭게 나서고 있는 여러 가지 민족 문제, 각종의 민족간 분쟁과 충돌은 민족의식이 사람들의 의식 구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들의 현실 생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사고와 실천에서 민족을 우선시 하며 근로인민 대중의 민족주의를 내세웁니다.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님께서는 원래 민족적 주체를 세우는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 하시였습니다. 주체사상에서는 혁력사 발전 단계에서 인민 대중이 혁명의 주체를 세우는 문제는 민족적 주체를 세우는 문제와 일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민족 안에 부르죠아적 민족과 프로레타리아적 민족의 《두 개 민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족 문제를 계급 혁명 문제에 종속시킨 맑스-레닌주의가 민족주의 문제에 대한 옳바른 해명을 줄 수 없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와는 달리 진보적인 민족주의와 통일 되어 있습니다.

민족주의는 민족리념의 체계화된 형태이며 그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족의 근본 요구가 자주성을옹호하고 실현하는데 있는 것 만큼 본래 적의미에서의 민족주의는 민족적 자주성을 옹호 실현 하려는 리념으로 됩니다.

민족주의는 역사적으로 여러가지 변천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민족주의는 봉건제도를 반대하는 부르죠아민족운동시기에 민족의 자주적리익을 응호하는 진보적인 사상으로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구라파에서는 자본가계급이 민족주의의 가치밑에 민족시장과 민족국가의 형성에서 선봉적역할을 하였습니다.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시기에는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이 부르죠아지의 리익과 기본적으로 일치하였기때문에 당시의 민족주의는 민족공동의 리해관계를 반영하였습니다. 때문에 신흥부르죠아지가 민족주의의 구호를 들고 민족운동의 선두에 섰다고 하여 민족주의가 처음부터 자본가계급만의 사상이었다고 보는것은 잘못입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부르죠아지가 반동화되면서 민족주의는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응호하는 사상적도구로 되었습니다. 부르죠아지는 대내적으로는 자기의 계급적독재를 변호하고 대외적으로는 다른 민족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합리화하는데 민족주의를 악용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반동적부르죠아지의 민족주의는 민족리기주의와 민족배타주의로 변질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편으로 신흥부르죠아지의 민족주의와 반동적부르죠아지의 민족주의를 구별하여야 하며 다른 편으로 반동적부르죠아지의 민족주의를 민족주의의 전형적형태로 보거나 그것을 본래적의미에서의 민족주의와 동일시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본래적의미에서의 민족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의 민족주의에서 가장 완성되고 전형적인 형태로 표현됩니다.

근로인민대중은 계급적특권을 가지고있지 않기때문에 민족적리익과 자기의 계급적리익을 대립시키지 않습니다. 민족의 자주성이 짓밟히고 나라의 독립이 침해될 때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응호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자주적인 생활을 지켜낼수 없다는것을 가장 심각히 느끼는 사회세력이 바로 근로인민대중입니다. 그러기에 근로인민대중은 민족공동의 리익을 자기의 계급적리익보다 우선시하며 더 귀중히 여깁니다.

근로인민대중에게는 민족의 생명이 곧 자신의 생명으로 되며 민족의 운명이자 곧 자기의 운명으로 되기때문에 그들은 민족의 자주성을 지

켜 언제나 헌신적으로 투쟁하게 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퍼땀을 흘린 것은 근로인민대중이었습니다. 반동통치계급들은 저들의 특권적지위가 위태롭게 되면 외래침략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것도 서슴지 않았지만 근로인민대중은 결코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각국의 민족사가 남긴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민족공동의 리익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사회세력은 근로인민대중이며 자기의 계급적특권을 옹호하는 착취계급은 전민족의 리익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에 근로인민대중의 민족주의가 본래적의미에서의 민족주의를 전형적으로 대표하게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은 언제나 민족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민족운동의 기본동력을 이룹니다. 역사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적진보를 지향하고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창조적번영을 위하여 투쟁합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주동적이며 의식적인 혁사창조활동을 통해서만 민족의 사회적 진보가 이룩되게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근로인민대중의 민족주의야말로 사회의 전진운동과 민족의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는 진보적민족주의로 됩니다.

진보적민족주의는 진정한 국제주의와 통일되어있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의 민족주의가 옹호하고 실현하려는 자주성은 온갖 예속을 반대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려는 성질인 것 만큼 남에 대한 예속을 배격할뿐 아니라 남을 지배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며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할뿐만 아니라 남의 자결권을 침해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따라서 진보적민족주의를 견지하여야 자기 민족의 자주적리익을 고수할 수 있고 다른 민족과의 친선과 협조도 강화할 수 있으며 일국적인 것과 국제적인 것, 민족자주적인 것과 세계공통적인 것을 조화롭게 결합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진보적민족주의의 고유한 내용을 일정한 윤리적구조에 따라 체계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시기에는 민족주의에 대하여 론의한 경우에도 그것을 체계화된

사상리론으로 해석하거나 전개하지 못하였으며 민족주의의 내용을 감정과 정서, 의지, 신념 등 심리적인 것에 귀착시켰습니다. 이것은 민족의식, 민족정신을 리성적이고 리론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이고 경험적인 수준에서 고찰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민족적 자주성을 옹호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는 오늘 민족의식을 경험적이고 심리적인 것에 국한시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진보적인 민족주의는 마땅히 리론과 학설의 수준에서 과학적으로 체계화되어야 합니다.

진보적 민족주의를 리론적으로 체계화하는 론리적 구조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개척하려는 민족의 근본 요구를 반영한 사상입니다.

진보적 민족주의는 민족 공동의 근본 사상으로 됩니다. 이러한 사상은 민족의 통일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철학, 정치학, 교육학, 경제학을 비롯한 모든 사회과학의 기본 리념의 하나로 되여야 합니다. 사회과학의 리념을 계급과만 결부시키는 것은 일면적인 견해입니다. 진보적 사회과학은 용당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둘째로, 사회와 역사 발전에서 민족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기초한 리론입니다.

진보적 민족주의는 민족의 이해 관계를 반영한 사상일 뿐 아니라 민족을 초점에 놓고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주는 리론으로 되여야 합니다. 이러한 리론은 사회적 집단 가운데서 민족이 차지하는 중요한 지위와 역사적 운동에서 민족이 노는 커다란 역할에 기초하게 됩니다. 사회적 집단과 사회 관계, 사회적 운동과 사회 생활의 합법적 성격을 취급하는 철학, 사회학, 역사학,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의 제령역에서 진보적 민족주의의 리론을 구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와 역사 발전에서 민족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취급하는 것이 과학의 보편적 성격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민족은 계급과 같이 보편적인 사회적 집단이며 민족의 활동과 생활에서는 사회적 운동의 보편적 합법적 성격이 발현됩니다.

그것은 셋째로, 민족을 중심에 놓고 사회와 사회생활, 사회적운동과 역사적사건 등을 고찰하고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사회현상과 역사적운동에는 계급과 함께 민족과 관련된 측면과 경향이 있습니다. 민족을 중심에 놓고 사회와 역사를 고찰할 때 사회와 그 운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민족을 중심에 놓는 것은 특히 사회현상과 역사적사건의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됩니다.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생활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는 것이 시대적요구로 되고 있는 조건에서 민족을 중심에 놓아야 사회적 현상과 사건가운데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리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옳게 판단평가하고 가치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선택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보적민족주의는 민족의 근본요구를 반영한 사상, 사회와 역사에서 민족의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기초한 리론, 민족을 초점에 놓는 인식방법이 결합된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진보적민족주의는 민족을 위주로 한 사상, 리론, 방법의 체계입니다.

진보적민족주의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민족리념의 동일성을 확립하고 강화해나가면 서로 다른 계급과 계층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민족자주정신과 민족애에 기초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루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계급리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민족리념에 근거하여 민족의 통일을 얼마든지 성취 할 수 있습니다.

3. 제도상의 대립과 국가적통일

우리 민족은 북과 남에 대립되는 사회제도가 고착된 조건에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여야 할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토의 량단과 겨레의 분열을 극복하고 통일을 성취하려는 민족의 요구는 단일국가안에서 공동의 삶을 누리려는 지향과 의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장구한 세월 한 강토우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국가를 이루고 살아온 우리 민족의 경우에 이러한 지향과 의지는 특별히 강렬한 것

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과 남에는 적대적인 사회제도가 정착되고 그에 상응하여 서로 다른 리념에 기초한 두개의 정부가 나라의 일정한 지역과 주민들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의 계급리념과 그것을 구현한 제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것이 북남관계의 현상황입니다.

나라안에 대립되는 두 제도, 두 정부가 존재하고 그 지지자들이 서로 양보하지 않는 조건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단일국가를 이루고 살려는 민족공동의 넘원을 실현하는것이 우리가 하여야 할 민족통일입니다.

폭력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러한 통일을 실현하려면 협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하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련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의 기초에는 제도상의 대립과 국가적통일의 문제에 대한 철학적해명이 놓여있습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남북이 랑립하기 힘든 제도를 각기 내부적으로 정착시켜왔고 두개 정부의 정치적갈등과 적대감이 심하기때문에 련방국가에 의한 통일은 현실적으로 기대할수 없다고 쓰고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생활, 경제활동이 정부의 기능과 교호작용을 잠시도 면출수 없게 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하나의 국가안에 두개의 대립되는 지방정부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제도를 유지한다는것은 현실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통일국가는 응당 하나의 제도를 가져야 한다면서 련방제에 의한 통일은 불완전하고 미완성된것이기때문에 통일이라면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선 국가는 계급과만 결부되어있다는 관념에 뿌리박고있으며 다음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해나가는데서 민족통일과 제도통일을 구별하는것이 필수적이라는것을 이해못하는것과 관련되어있습

니다.

지난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특정한 계급의 리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정치기관으로 해석하여왔습니다. 특히 막스-레닌주의에서는 정치를 『계급사이의 관계』, 『계급사이의 투쟁』으로, 국가를 『한 계급의 다른 계급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기구』(레닌)로 규정하면서 정치와 국가를 계급과만 결부시켰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견해를 사회주의자들의 공인되고 불변한 리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국가를 계급과만 결부시켜보는것은 일면적이고 부정확한 견해입니다.

원래 정치는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으로서 사회의 존립과 발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항구적인 요인으로 됩니다. 어떠한 사회집단의 리익에 맞게 정치가 실현되는가 하는 것은 누가 사회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착취사회에서는 주인의 지위를 차지한 특정한 지배계급의 리익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지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주인의 지위를 차지한 전체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정치가 실현됩니다.

정치를 실현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국가입니다. 국가는 사회를 통일적으로 지휘할 권한인 정치적지배권이며 그 관할하에 있는 땅토에서 생활하는 전체 주민들을 복종시키는 전사회적인 지휘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는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입니다.

민족안에 계급적으로 대립되는 두개의 제도와 정부가 있는 경우에서 서로 다른 계급적립장을 가진 사람들 모두에게 수용될수 있는 국가가 계급적정치조직으로 될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족공동의 리익을 구현한 정치적지배권으로 되여야 하며 민족적자주성을 옹호실현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전사회적인 지휘권으로 되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러한 국가는 특정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계급독재국가가 아니라 민족공동의 리해관계를 실현하는 민족적정치조직으로 되여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국가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면방국가입니다.

이러한 련방국가는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토피아나 넌센스인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째로, 민족적 정치조직인 련방국가와 계급적인 사회제도가 민족적 자주성을 공통기반으로 하여 병존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사회제도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사회관계의 공고한 체계입니다.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이러한 규제가 착취사회에서는 특정계급의 리익에 따라 그리고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공동의 리익에 맞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이 사회생활의 단위로 되고있는 오늘의 시대에 어떠한 사회제도도 민족적기반우에 서있습니다.

민족관계는 사회관계의 중요한 측면이며 민족관계와 동떨어진 계급 관계란 있을수 없습니다. 민족의 자주성이 옹호실현되어야 계급들의 리익도 실현될수 있기때문에 어떠한 계급적인 제도도 민족적자주성의 실현과 결부되어있습니다.

때문에 북과 남에 있는 계급적인 사회제도가 민족적자주성을 옹호 실현하기 위한 련방국가와 결코 상충될수 없습니다. 민족적자주성을 공통기반으로 한다면 범민족적인 정치조직인 련방국가와 북과 남에 있는 서로 다른 제도가 얼마든지 병존할수 있습니다.

둘째로, 련방국가의 중앙정부와 두개의 지역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상치되지 않고 통일될수 있기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계급적정치단위를 하나의 민족적정치단위로 통일시킬 련방국가는 필수적으로 자기의 민족적성격에 상응한 중앙정부를 가지게 됩니다. 이 민족통일정부는 나라의 전령토와 모든 주민에 대한 민족적인 정치적지휘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되게 됩니다.

민족의 전반적리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인 발전과 번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북남사이의 민족적단결과 합작을 실현하는것이 련방정부의 기능으로 되여야 할것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민족적자주성을 옹호실현하는데서 원칙적의의를 가지

는 국가활동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 문제, 외래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보위하는 문제, 대외적으로 민족적자주권을 행사하는 문제 등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것입니다.

지역정부들은 자기의 계급적제도에 상응한 계급적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제도와 마찬가지로 정부도 민족적토양에 뿌리박아야 하기때문에 그 기능에는 민족적요구가 구현되게 됩니다.

하나의 민족안에 사회주의정부와 자본주의적정부가 있는 경우에 정치분야에서 두 정부의 계급적기능은 대립되어도 민족적자주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질수 있습니다. 경제분야에서도 계획경제에 복무한다는 점과 시장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는 두 정부는 기능상 대립이 있지만 다같이 민족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북의 사회주의문화와 남의 자본주의문화가 계급적으로 대립되어여도 조선민족문화로서의 공통성을 가지는것처럼 문화령역에서도 두 정부의 기능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민족적자주성을 옹호실현해나가는 면에서 련방국가의 중앙정부와 두개의 지역정부의 기능은 통일되고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게 련방정부와 지역정부의 기능상 통일을 강화해나가면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있어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공동의 삶이 꽂펴날수 있습니다.

셋째로, 련방국가의 주권이 전체 민족에게 속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제도와 정부를 지지하는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이 국가를 받아들이고 그 공고발전을 위하여 투쟁하게 되기때문입니다.

주권에 관한 문제는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입니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실현하는 련방국가의 주권은 그 어떤 특정계급이나 계층이 아니라 민족전체에 속합니다. 다시말하면 련방국가의 정치적지휘권의 실체는 전체 민족입니다.

련방국가의 주권이 전체 민족에 속한다는것은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련방국가의 주인이며 그들이 련방국가를 좌우한다는것입니다. 때문에 련방국가는 그 주인인 민족을 위하여 복무하게 되며 민족성원들자신에

의하여 운영되게 됩니다. 여기에 북과 남의 어느 제도와 정부를 찬동하는가에 관계없이 우리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련방국가의 창립을 지지하고 그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는 리유가 있습니다.

북과 남에 대립되는 제도와 정부가 있어도 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할 수 있기 때문에 북과 남이 독립적인 국가적 실체로 되여 국가연합을 이루는 것보다 련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민족을 위하여 훨씬 더 리롭고 합리적인 길이라고 봅니다. 련방국가를 창설하여야 우선 하나의 집단적 생명체인 민족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공동의 생명활동, 공동의 삶을 영위 하려는 전민족적인 숙원을 빨리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내부의 접촉과 교류, 협작을 통하여 민족의 통일적인 빌전과 번영을 전면적으로 다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국가를 창립하는 것은 오랜 역사에 걸쳐 단일국가를 이루고 살아온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전통과 그와 결부되어 형성된 강렬한 민족적 일체감을 특성으로 하는 우리의 고유한 민족심리에도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련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은 앞으로 일정한 역사적 기간이 지난 다음에 민족내부의 제도상 차이까지 없애고 단합과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숙망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됩니다.

우리 민족이 앞으로도 영원히 서로 다른 두 제도의 대립속에서 살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나라의 통일을 논하는데서 민족적 통일과 제도상 통일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족적 통일은 민족적인 공통성과 자주성에 기초한 조국통일이며 제도상 통일은 하나의 사회정치제도에 의한 나라의 통일입니다. 전자에서는 북과 남에 있는 서로 다른 사회제도를 그대로 두고 민족적 동질성에 기초하여 련방제 방식의 조국통일이 이루어지며 후자에서는 전체 조선민족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사회제도를 세우는 방식으로 나라의 통일이 실현되게 됩니다.

그러면 민족적 통일과 제도상 통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겠습니까?

먼저 민족적 통일을 실현하고 일정한 역사적 기간이 지난 후에 제도상

통일을 이룩하는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에 대하여 네가지 론거를 들어 설명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먼저 그것은 사회제도가 개조되는 일반적합법칙성에 맞기때문입니다.

사회의 발전은 자연을 정복하는 자연개조운동과 사람들을 문화적으로 발전시키는 인간개조운동과 사회관계를 합리적으로 개변하는 사회개조운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발생적견지에서 볼때 인간이 에너르기를 가져올수 있는 원천은 자연밖에 없으므로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연개조운동을 벌려 물질적부를 창조하여야 합니다. 일정한 물질적부에 기초해서만 인간은 자신을 문화적으로 발전된 보다 힘있는 존재로 만들수 있습니다. 생산력과 사람들의 문화수준이 일정한 높이에 이를 때 사회관계의 공고한 체계인 사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발생적견지에서 본 사회발전의 중요한 합법칙성입니다. 따라서 정치제도를 비롯한 사회제도를 개조하는 사업은 자연개조사업인 경제의 발전과 인간개조사업인 문화의 발전에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근 반세기에 걸친 나라의 분렬로 하여 북과 남사이에 조성된 문화와 경제발전에서의 차이를 줄이며 그 통일성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앞세우지 않고 사회제도부터 먼저 통합하려하는것은 사회발전법칙에 어긋납니다. 먼저 민족적 통일을 실현하고 그 테두리안에서 북과 남사이에 경제와 문화의 교류협력을 활발히 벌려 제도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주객관적조건을 성숙시킨후에 하나의 사회제도에 의한 통일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것은 분렬된 민족에서 온 나라에 대한 통일적인 정치적 지휘권을 확립해나가는 합리적인 순차에 맞기때문입니다.

조국의 통일은 나라의 전령토와 모든 주민에 대한 통일적인 정치적 지휘권이 확립되어야 실현됩니다. 그런데 현재 북과 남에 서로 다른 계급적리익을 구현한 정부가 서있고 쌍방이 다 그것을 포기하려하지 않는 조건에서 온 나라에 대한 정치적지휘권을 확립하려면 민족공동의 리익을 옹호하는 련방국가를 세우고 그 정치적권한을 온 나라에 확

립하는 길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적인 정치적지휘권을 온 나라에 통일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우선적인 순차로 됩니다.

현방국가안에서 민족적인 뉴대와 협력을 확대하고 민족주체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치력량을 강화해나가면 북과 남의 제도상차이를 혼자 히 줄이고 극복해나갈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가 마련되면 전체 조선인민이 민주주의적의사에 따라 하나의 사회제도와 그에 상응한 정권을 선택하고 그 정치적권한을 확립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것은 사회적운동이 발전하는 역사적단계에 맞기때문입니다.

민족통일은 민족적모순을 풀기 위한 사회적운동이며 제도상통일은 계급적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운동입니다. 리론적견지에서 볼때 외래제국주의의 예속밑에 있는 나라들에서 계급적모순을 해결하는것은 민족적모순을 해결하는데 비하여 보다 높은 단계의 사회적운동으로 됩니다. 실천적경험으로 보아도 식민지나라들에서는 먼저 민족해방을 실현하고 다음에 계급해방을 이루하였습니다.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에로 나아가는 사회적운동의 상승적성격에 맞게 사회적변혁의 주되는 과제를 내세우고 그것을 해결하는것이 현실적인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우여곡절과 편향이 없이 조국통일의 종국적목표를 향하여 착실하게 전진해나갈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사회적운동의 동력을 극대화하고 그 투쟁대상을 극소화하는 전략전술적원칙에도 맞기때문입니다.

사회적운동에서 낮은 단계의 과업보다 높은 단계의 과업을 먼저 실현하려고 하게 되면 한편으로 낮은 단계에서 운동의 동력으로 되는 세력을 투쟁대상으로 만들어 동력을 약화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낮은 단계에서 극복되게 되는 세력까지 투쟁대상에 합쳐서 대상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민족적통일을 제도상통일보다 앞세워야 광범한 통일애국세력을 동력으로 하여 한줌도 못되는 분렬매국세력을 타승하고 통일조국을 일떠세울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민족사발전의 현단계에서는 민족적통일을 기본과 제로 내세우고 투쟁하며 제도상 통일은 다음 세대에 넘기는것이 합리적이라는것을 보여줍니다. 민족적통일을 이루기전에 제도상통일을 실현할 때 민족이 어떤 진통과 불행을 겪게 되는가 하는것은 오늘 독일의 심각한 통일후유증과 엄혹한 현실이 웅변으로 말해주고있습니다.

통일에로 나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보적민족주의의 철학을 공통한 리념으로 삼고 민족대단결의 가치밑에 민족의 자주적주체를 형성하고 강화해나가면 조국통일의 대업은 반드시 성취될것입니다.

민족적주체에 대한 철학적고찰

최 상 현

우리들의 사랑하는 조국과 민족이 외세의 강요에 의하여 분렬된지도
벌써 반세기가 되여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두고 하나의 강토우에서 한피줄을
이어받으며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꽂피워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탄을 금할수 없는 최대의 비극적사태이며 세계의
면전에서 더없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오늘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고서는 그 누구도 민족의 한 구성
원으로서의 자기의 책무를 다했다고 말할수 없으며 세계에 널리 알려
진 고려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떨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민족의 모든 구성원들은 랭전의 종식과 민족자주화의 시대
적요구에 맞게 우선 하나의 같은 민족으로서 대단결을 이룩하고 나라
의 통일을 실현하는데 헌신하여야 할것입니다.

오늘 전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 민족적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
이는것은 조국통일운동의 절박한 과제로 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일찌기 어떤 운동에서든지 주체를 강
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승리할수 있다는 독창적인 철학을 내놓으시
고 민족적주체에 대한 심오한 해명을 주시였습니다.

× × ×

저는 먼저 민족적주체의 본질과 그 특성에 대한 주체철학의 리해에
대하여 고찰하려고 합니다.

현대과학이 증명해주고있는바와 같이 세계는 끊임없는 운동속에 존
재합니다. 자연도 운동하고 사회도 운동합니다.

민족적주체문제는 사회적운동의 중요한 형태의 하나인 민족운동의

담당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든 운동에는 그것을 일으키고 떠밀어나가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운동에도 있고 자연의 운동에도 있습니다.

자연의 운동의 담당자와 사회적운동의 담당자는 다같이 물질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가지지만 량자는 본질적인 차이성도 띠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운동의 담당자는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본질적속성으로 하고 있지만 자연운동의 담당자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자주성은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과 예속을 반대하고 자유롭게 살며 발전하려는 성질이며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하려는 성질입니다.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자신에 대한 인식과 개조활동을 규제하는 성질입니다.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오직 사회적운동의 담당자인 사람, 인민대중에게만 고유한 속성입니다. 사람, 인민대중이외의 모든 존재는 아무리 발달되고 고급한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또한 사회적운동의 담당자는 목적의식적으로 운동에 작용하지만 자연운동의 담당자는 운동에 자연발생적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운동의 담당자와 자연의 운동의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속성의 차이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운동의 담당자의 이러한 본질적차이성으로부터 우리는 사회적운동에는 이 운동을 목적의식적으로 일으키고 떠밀어나가는 주체가 있지만 자연의 운동에는 그것이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운동의 주체는 한마디로 말하여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지니고 목적의식적으로 작용하며 활동하는 사람, 인민대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의하여 일어나며 그들의 창조적힘에 의하여 추동됩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은 사회적운동의

주체로, 다시 말하여 그 주인으로, 추동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인민대중은 사회적운동의 주체이지만 그들이 언제나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적인 주체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민대중이 사회적운동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자각하고 하나와 같이 굳게 뭉쳐야 합니다.

자기를 자각하지 못하고 개개로 분산되어 있는 인민대중은 수적으로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마치도 흩어진 모래알과 같아서 사회적운동의 주체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다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운동은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만큼 일명 주체의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운동이 주체의 운동이라고 하면 그것이 마치도 물질세계발전의 일반적법칙의 작용과 사회적운동의 객관적성격을 부인하는 주장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주체의 운동으로서의 사회적운동도 어디까지나 물질의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자연의 운동에서와 마찬가지로 낡은 것과 새 것의 투쟁을 통하여 새것이 승리하고 발전하는 법칙, 량적변화로부터 질적변화에로 넘어가는 법칙 등이 그대로 작용합니다.

또한 주체의 운동으로서의 사회적운동은 개별적사람들의 주관적의사에 좌우되지 않는 객관적법칙에 따라 발생발전합니다.

사회적운동의 담당자는 운동의 성격에 맞게 구체화되게 됩니다. 자주성을 위한 매개 나라 인민들의 사회적운동은 크게 민족해방운동과 계급해방운동으로 나뉘여질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운동의 주체는 민족적주체와 계급적주체로 구체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족적주체는 민족자주를 위한 사회적운동의 주체를 의미하며 계급적주체는 계급적자주를 위한 사회적운동의 주체를 의미합니다.

민족적주체와 계급적주체는 그 결합의 기초와 구조에 있어서 서로 구별됩니다.

민족적주체가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합된 민족구성원들의 전일체라면 계급적주체는 근로대중의 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합

된 근로인민대중의 전일체입니다.

구조상으로 볼 때 민족적주체가 민족의 기본력양인 로동자, 농민들과 청년학생, 인테리들을 기본구성으로 하고 여기에 민족을 사랑하며 민족자주를 지향하는 모든 동포들을 결합시킨 구조적인 통일체라면 계급적주체는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피압박, 피착취 계급을 기본구성으로 하고 여기에 근로자들을 사랑하며 근로대중의 자주를 지지해나서는 광범한 중간층을 결합시킨 구조적인 통일체입니다.

민족적주체는 계급적주체와 구별될뿐아니라 그에 비한 일련의 특성을 띠고있습니다.

민족적주체의 특성은 첫째로, 그것이 자주성을 위한 사회적운동에서 계급적주체보다 우위에 놓이는 존재라는데 있습니다.

민족적주체가 계급적주체보다 우위에 놓이게 되는것은 무엇보다 먼저 민족운동속에 계급운동이 있고 민족공동의 리익이 보장되어야 개별적 계급과 계층의 리익도 제대로 실현될수 있다는 사정과 관련되어있습니다.

개별적인 계급과 계층은 민족의 한부분을 이룹니다.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도 있을수 있으며 민족의 리익이 보장되어야 계급의 리익도 실현될수 있습니다.

민족적주체의 특성은 둘째로, 그것이 계급적주체에 비하여 보다 포괄적인 존재라는데 있습니다.

민족적주체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극소수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민족구성원 전체를 망라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민족자주를 지향하는 애국적인 일부 자본가, 지주들과 지배계층까지도 폭넓게 포괄되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계급적주체는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피압박, 피착취 계급들과 근로자들을 사랑하고 근로대중의 자주를 지지해나서는 광범한 중간층을 망라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계급으로서의 자본가, 지주들과 지배계층은 포괄될수 없는것입니다.

현시기 민족적주체에 대한 고찰에서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민족적주체가 조국통일운동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바로 해명하는것입니다.

다.

민족적주체는 우리의 조국통일운동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합니다. 민족적주체가 주인이라는 것은 그것이 조국통일운동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하는 담당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족적주체는 자기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에 맞게 조국통일의 목표와 방향을 규정하며 이 운동의 전반적 행정을 틀어쥐고 직접 수행하여 나갑니다.

민족적주체가 조국통일운동의 주인으로 되는 것은 무엇보다 조국통일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라는데 있습니다.

외세에 의한 분렬로 인하여 모진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조국의 통일을 사활적인 요구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적주체가 조국통일운동의 주인으로 되는 것은 다음으로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운동수행의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국통일위업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우리 민족 자신의 위업입니다. 누구도 우리 민족의 운명개척사업을 대신하여 줄 수 없습니다.

민족적주체가 조국통일운동의 주인으로 되는 것은 또한 나라의 통일 문제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것도 우리 민족이라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문제의 본질과 근원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해결 방도에 이르기까지 조국통일운동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 실천적 문제들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 민족이고 그 수행의 직접적 담당자도 우리 민족이며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것도 우리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적주체는 마땅히 조국통일운동에서 그 주인으로 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적주체는 우리의 조국통일운동에서 주인으로 될 뿐 아니라 이 운동을 승리에로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됩니다.

민족적주체가 조국통일운동의 결정적요인이라는것은 그것이 이 운동을 일으키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 기본추동력이라는것을 의미합니다.

조국통일운동에 작용하는 요인에는 주체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북과 남의 사회적환경과 조건은 객관적 요인을 이루며 이 요인은 조국통일운동에 중요한 작용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조국통일운동을 추동하는 결정적인 힘은 어디까지나 객관적 요인이 아니라 주체적 요인, 다시말하여 민족적 주체에게 있습니다.

민족적주체는 조국통일에 불리한 객관적 환경과 조건을 유리하게 전환시키며 필요한 환경과 조건을 주동적으로 조성하고 리용합니다. 객관적 요인이 통일운동에 작용을 미치는것도 어디까지나 민족구성원들의 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민족적주체가 조국통일운동의 결정적요인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가지고있는데 있습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물질적부를 창조하여 민족의 복리를 도모하는것도 민족적주체이며 민족의 자주성을 억제하는 낡은 사회를 부정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여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도모하는것도 민족적주체입니다.

민족적주체는 높은 민족자주의식에 기초한 위력한 사상정신적 힘과 조직적 단결의 힘을 지니고있으며 자연과 사회개조의 풍부한 실천적 경험을 가지고있습니다.

민족적주체의 이상과 같은 지위와 역할로부터 민족적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그 창조력을 최대한 발양시키는것이 조국통일운동의 승리를 위한 기본담보로 된다는 리치가 훌려나옵니다.

민족적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이 조국통일운동의 승리를 위한 기본담보로 되는것은 우선 운동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이 사회적운동의 승리를 위한 기본법칙이라는데 있습니다.

사회적운동이 주체의 운동인것만큼 주체가 강회되고 그 역할이 높아지게 될 때 그것이 반드시 승리하는것은 완전히 필연적입니다.

민족적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이 조국통일운동의 승리를 위한 기본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우리 나라의 조국통일운동이 매우 어렵고 복잡한 속에서 진행된다는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은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악용하여 분렬과 리간을 조장하기 위한 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 수행되고있습니다.

최근 남조선에서 사태의 진상이 밝혀지고있는 《평화의 맴건설》과 《5. 18광주진압작전》등은 남조선의 력대집권배들이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저들의 《정권안보》와 민족내부를 분렬리 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나 간교하게 써먹어왔는가 하는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있습니다.

통일운동의 환경과 조건이 이처럼 어렵고 복잡한 실정에서 민족적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가 높이지 못하는가 하는것이 조국통일운동의 운명과 관계되는 근본문제로 된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리치가 아닐수 없습니다.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의 민족적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민족적주체에 대한 고찰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옳바로 밝히는것입니다.

민족적주체가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존재로 되게 하자면 그것을 목적의식적으로 꾸리고 키워야 합니다.

민족적주체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조국통일 문제의 본질에 대한 리해부터 바로 확립하는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조선에서 발행되는 출판물들을 보면 적지 않게 우리의 조국통일문제를 마치도 북과 남에 있는 서로 다른 두제도를 단일화하는 문제인것처럼 잘못리해하고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의 단합을 제대로 실현할수 없으며 민족적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없습니다.

우리의 조국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가시고 민족적단합을 이루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는 결코 북과 남의 서로 다른 두개의 제도를 단일화하는 문제로 될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조국과 사회제도가 개념상 서로 구별되는 내용을 담고있는데 근거합니다.

조국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나서자란 나라를 의미하며 사회제도는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공고한 질서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조국통일문제는 사회제도의 단일화문제에 앞서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나서자란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문제로 되지 않을수 없는것입니다.

다음으로 그것은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두 제도는 8·15이후 외세에 의하여 조국이 량단된 결과에 생겨난 하나의 파생물이라는 근거합니다.

본래 우리 조국은 하나였으며 그것은 하나의 제도에 기초하여왔습니다. 북과 남에 혼존하는 서로 다른 두 제도는 철저하게 외세에 의한 조국분단의 결과에 산생된것입니다.

조국과 민족이 량단된 결과에 생겨난 파생물이 조국통일문제의 본질로 될수 없다는것은 당연한 리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단일화를 조국통일문제의 본질로 보려는 것은 사실상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거나 무서운 재난속에 몰아넣으려는 매우 위험한 견해입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에서 제도의 단일화를 통일문제의 본질로 내세우는것은 분별을 무한정 지속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두개 민족으로 갈라놓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북과 남의 어느 일방이 타방을 먹는 방법을 택할수도 없습니다. 먹고 먹히우는 방법은 불피코 전쟁을 야기시키며 우리의 현실적조건에서 전쟁은 곧 민족의 멸망을 가져오게 할수 있습니다.

민족내부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는 강제적방법으로가 아니라 민족공동의 리익에 기초하여 민족적단결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점차 극복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제도의 단일화문제는 조국통일이 실현된 다음 천천히 민족적단합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민족적주체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적단합을 위한 목적과 리념적기초, 그 원칙과 방도문제를 바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옳바른 해명이 주어져야 민족적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편차없이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지난 4월 6일에 소집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9기 제5차회의에서 봄소작성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발표하심으로써 이 중대한 근본문제에 전면적인 과학적해명을 주시였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제1조는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를 밝혀주고있으며 제2조는 민족대단결을 위한 리념적기초를 밝혀주고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민족대단결을 위한 원칙을 밝혀주고있으며 제4조로부터 제10조까지는 민족대단결을 위한 방도문제를 심오히 밝혀주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10개조항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협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범민족통일국가는 북과 남의 두 지역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련방국가로 되여야 하며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뛰어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여야 한다.

2.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전민족은 각자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연결시켜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지키려는 하나의 뜻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존엄과 궁지를 가지고 민족의 주체의식을 좀먹는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

3.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말고 함께 진보와 변영을 누려가야 한다. 지역적, 계급적 리익에 앞서 전민족의 리익을 도모하여야 하며 모든 노력을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는데 기울여야 한다.

4. 동족사이에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대결을 추구하거나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형태의 정쟁을 중지하고 비방중상을 그만두어야 한다. 동족끼리 적대시하지 말고 민족의 힘을 합쳐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5.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지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말아야 하며 침략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상대방에 자기의 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을 흡수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6.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통일론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정치적 반대파라고 하여 탄압, 보복, 박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친북, 친남을 시비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정치범을 석방, 복권시켜 조국통일위업에 함께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7.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리용하는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통일되기전에는 물론 통일된 후에도 국가적소유, 협동적소유, 사적소유를 인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 외국자본과의 공동리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과학, 교육, 문학, 예술, 언론, 출판, 보건,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각자가 가지고있는 사회적 명예와 자격을 인정하며 공로자가 받고있는 혜택을 계속 보장하여야 한다.

8. 접촉, 래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

접촉과 래왕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고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래왕의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각당, 각파, 각계각층에게 동등한 대화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쌍무적, 다무적 대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9.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에서 조국통일에 유익한것은 편견없이 지지성원하고 해로운것은 함께 배격하여야 하며 각자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서로 보조를 같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와 각계각층 동포들이 조직적으로 련합하여야 한다.

10.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 애국렬사들과 그 후대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야 한다. 지난날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들도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여 조국통일에 이바지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7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조국통일 지향과 널원을 담아 한조항 한조항 친히 작성하여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10개조항의 원문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지난 반세기의 분렬과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고 전민족의 대단결로써 조국통일의 대업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강령으로, 민족적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사업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민족의 대현장으로 된다고 우리는 굳게 믿고있습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그에 담겨져있는 애국애족사상과 폭넓은 도량, 그 공명정대성과 현실성으로 하여 북과 남, 해외동포들속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광범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민족적주체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민족적단합을 위한 상설적인 조직체를 가지는것이 중요합니다.

민족적단합은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에 기초한 단합인 동시에 조직적인 단합입니다. 상설적인 조직체가 없이는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에 기초한 민족적단합을 현실화할수 없습니다.

민족적단합을 위한 조직체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가지 요구조건을 충족시킬수 있는것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민족적단합을 위한 조직체는 반드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 해외의 애국적 단체와 조직들, 각계각층 인사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마련되는 련합체로 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그 다른 하나는 민족적단합을 위한 조직체는 반드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 북과 남, 해외 동포들의 공동의 의사를 대변하는 애국적인 통일운동조직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민족적주체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이상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수 있는 상설적인 조직체를 내오고 거기에 공존, 공영, 공리의 원칙에서 민족애와 민족자주를 지향하는 모든 동포들을 튼튼히 묶어세워야 할것입니다.

민족적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사업은 말로써가 아니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뜻을 같이하고 힘을 합쳐 공동행동을 벌리는 과정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을 각각 자기가 처한 조건과 특성에 맞게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적인 련대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분렬영구화책동과 새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남조선에서 미국군대와 핵무기를 철거시키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리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것은 북과 남이 민족앞에 공동으로 서약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북남합의서와 비핵공동선언을 성실히 리행하기 위한 범민족적인 투쟁을 벌리는것입니다.

민족적주체에 대한 고찰에서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민족적주체가 자기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바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민족적주체를 강화하는것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데 있습니다. 민족적주체가 조국통일운동에서 제구실을 참답게 다하기 위하여서는 자기활동에서 옳바른 립장과 방법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민족적주체가 조국통일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으로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적립장은 민족적주체가 조국통일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으로 됩니다.

민족적주체가 자주적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은 조국통일운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기 민족의 리익에 맞게 처리하며 조국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는 원칙을 지킨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자주적립장은 크게 두가지 원칙적요구를 본질적내용으로 담고있습니다.

자주적립장은 무엇보다도 민족적주체가 사고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요구를 담고있습니다. 그 요구는 민족적주체가 조국통일운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머리로 생각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기 민족의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가야 한다는것입니다.

자주적립장은 또한 민족적주체가 실천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요구를 담고있습니다. 그 요구는 민족적주체가 조국통일문제를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족적주체가 자주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하여야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철저히 반대하고 조국통일운동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 책임을 훌륭히 다할수 있습니다.

창조적립장은 민족적주체가 조국통일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방법으로 됩니다.

민족적주체가 조국통일운동에서 창조적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의거하여 우리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원칙을 지킨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적립장은 크게 두가지 요구를 본질적내용으로 담고있습니다.

그 하나는 조국통일문제를 그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동하고 그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국통일문제를 남의 본을 따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입니다.

민족적주체가 조국통일운동에서 창조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하여야 교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조국통일운동에서 그 기본추동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훌륭히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적주체는 조국통일을 위한 모든 활동에서 반드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바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7천만 겨레가 통일된 3천리 금수강산에서 행복하게 살 그날을 1990년대에 기어이 안아올수 있습니다.

민족적주체문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처음으로 해명되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량심있는 지성인들은 주체사상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로 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토론을 끝까지 들어주신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교육의 실천철학적 의의*

김 도 종

서 론

교육은 개개인에 대한 자기계발을 도와주는 뜻도 있으며 사회의 진화와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교육의 개인에 대한 기능과 사회에 대한 기능은 또한 서로 떨어진 채로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유럽의 계몽주의 시기 이후의 사회발전과 교육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많은 견해가 여러 사상가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¹⁾.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통일교육은 우선 정치교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적 대립을 해소하자고 하는 목적을 가졌다는 점에서 특정한 체제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반적인 의미의 정치교육이 특정한 체제의 내부에서 행해진다는 것에 비교할 때 통일교육은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정치교육의 내용과는 다른 광범한 내용을 포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단순한 정치교육이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지도하거나 사회윤리적 차원의 교육이라고 한다면, 통일교육은 분단된 단일민족의 연대적 의식을 확립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와 사회변화, 민족의 역사적 유래와 또 그의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철학적 기초를 연관지어서 시행하는 실천(Praxis)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통일교육은 문명비판을 통한 실천철학이라는 의의를 가졌다고 보는 것이다.

1. 통일교육의 말 뜻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던 민족이 통합되었을 경우에 동일한 공동체 의식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민족 구성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모든 개인이 “자기완성”을 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만드는데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룬 분단 민족이 통일된 국가를 유지하면서 동료애적인 연대의식을 갖지 않거나 정서적으로 갈등을 빚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 통일은 삶의 발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기능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민족공동체에 대한 연대감은 사람이 자기를 확인하고 자기를 형성하는 주요한 고리가 된다²⁾. 사람의 뿌리는 두 방면의 통로를 가지는데 하나는 정신적인 것이요, 다른 하나는 물질적인 것이다. 그런데 “민족”이라는 공동체는 생물학적 보편성을 가짐과 동시에 생각하는 방식과 문화의 양식을 공유하는 하나의 단위가 된다. 개인의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활동은 무한한 자유의 여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민족공동체적 보편성의 기초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일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환경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민족적 동질성은 정치적 충돌이 제거된 상태에서만이 정상적으로 키워질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정치적으로 왜곡된 폐쇄적 민족주의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³⁾. 다시 말하면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일을 정치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해서 민족문제를 정치적으로 교조화하거나 이념화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또 민족주의가 전투적인 형태를 가져서도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민족”은 민족분단으로 말미암아 민족 개개인의 자기다움을 완성하려는데 있어서 그 기초의 불안정성을 체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민족의 동질성을 지키는 일은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일이기도 하다. 즉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자연법의 이념을 현실화 시키는 일이라

는 말이다⁴⁾.

이런 뜻에서 볼 때 민족의 통일은 자연법을 현실화한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민족의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요청이 아니며, 또 “민족의 비원”이라는 식의 감정적 차원의 요구가 아니라 실천 철학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민족의 정치적 통일을 앞뒤로 하여 민족적 동질성에 대한 연대적 의식을 갖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앞선 현실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을 수행하는 것을 “통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통일교육의 과정은 분단민족일 경우에만 가지는 매우 특수한 교육이다. 이 분단이 정치적 현상이니 만큼, 통일교육은 이러한 정치적 특수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교육은 우선 정치교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통일교육이 정치교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 때의 정치교육은 정치권력가들이 수행하는 이데올로기교육이나 체제교육과는 구별된다. 종래에 남과 북의 두 지역에서 행해진 정치교육은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것 보다는 이데올로기나 체제교육의 편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종래의 이데올로기나 체제교육은 민족의 동질성을 되찾기 보다는 오히려 동질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통일교육이 정치교육적 성격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상적인 시민윤리에 관한 교육과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통일교육은 정치적으로 평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긴장의 해소를 위한 특별한 교육내용이 중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2. 통일교육의 내용

① 같은 자연환경과 지리적 기초

통일교육은 민족의 연대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민족의 연대성이란 우선 생물학적 기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혈통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일이다. 물론 남북한의 민족이 생물학적 동질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이질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이것은 통일교육을 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는 무의미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문화교류가 없이 오래 시간을 경과하다가 보면 심각한 이질화를 결과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타일랜드 산악지역에 사는 라후족, 리수족, 아키족은 고구려 유민으로 추정되는데⁶⁾ 이들처럼 현저하게 이질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류학적인 면밀한 연구를 통해 혈통의 동질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통일교육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민족적 생활의 지리적 기초에 대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다. 이것은 사람다운 삶에 대한 물질적 기초의 주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⁶⁾. 이 때의 지리적 기초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연환경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 측면이다. 이것을 한민족의 통일교육의 내용에서 다룬다면, 첫째로 한민족이 주된 생활근거지로 삼고 있는 한반도의 자연적 성질을 전제하고 난 다음에 같은 자연환경 속에서 같은 문명을 건설해 온 내력을 확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동일한 언어의 뿌리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종류의 문명을 건설해 온 내력을 확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종류의 문명을 건설한 한민족이 옛날의 한 시기에 지역별로 서로 다른 정부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문명의 내용은 같은 것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두번째의 것인데, 한민족의 생활근거지를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의 반도라는 것이 아니라 중국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이었다는 역사적 사실⁷⁾을 통일교육의 내용에 편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백두산이 한민족 생활근거지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20세기 후반에 겪게 된 분단 40년의 시기는 그 의미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민족적 의식의 연대성을 확보할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

②같은 풍습

다음으로 통일교육의 내용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것은 의, 식, 주 생활의 민족적 동질성을 역사적으로 확인하는 일이다. 한민족은 지방마다 양식은 조금씩 다른 점이 있었을 지라도 벼농사와 온돌 등 여러가지

의, 식, 주 생활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동질적인 것이었다. 의, 식, 주 생활의 풍속은 시대의 변천과 함께 변화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남북분단의 상황에서도 전통적 풍습이 어떤 연속성을 지닌 채 남아 있는 것을 드러내어 정서와 의식의 연대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③같은 도덕규범의식과 예절

또 도덕관념의 동질성을 통일교육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족윤리는 분단상태의 남북이 서로 다르지 않다. 웃어른에 대한 태도를 비롯하여 사회생활의 예절에 있어서도 남과 북은 동질적이다. 어떠한 경우에 죄의식을 갖는가 하는 것과, 또 어떠한 경우의 행위를 도덕적 선이라고 하는가 등의 도덕관념은 현재 체제를 달리하고 있을 지라도 그 내면의식에 있어서는 일관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도덕적 관념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일도 연대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④이데올로기의 수렴과 새로운 사회

남과 북의 분단상황 아래서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남과 북의 시민이나 정치가들이 여전히 전투적인 태도를 가진다면 말이다. 그런데 이데올로기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의 틀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훼손시킨다면 그 순서는 거꾸로 된 것이다. 그것은 윤리적 규범과 삶의 관계와 같다. 즉 윤리적 규범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윤리적 규범을 위해서 삶을 희생시키는 사람을 우리는 가치편향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가? 같은 식으로 오직 이데올로기의 틀만을 지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데올로기 편향적인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사회적 조건이나 역사적 환경은 항상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에 따른 이데올로기의 변화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특정한 이데올로기의 틀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정치적 권력가나 독선적 지식인들이며 종교적 광신자들

인 경우가 많다. 특히 권력가들은 그들의 효율적 지배를 위하여 인민들에게 이데올로기의 일정한 틀을 강요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통일을 완성하자는 것도 민족적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데올로기의 틀을 고수하기 위해 통일을 유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⁸⁾

그러나 모든 유형의 이데올로기는 사람의 삶에 대해 궁극적 이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역사를 통해서 보았을 때 일정한 정도에서 궁정적 기능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유형의 이데올로기의 틀이 역기능적으로 작용한 점을 적발하여 비판의 소재로 사용하기보다는 그 이데올로기의 유형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의미의 도덕적 이상을 드러내어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교조화, 또는 절대화를 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도덕적 이상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어떤 이데올로기의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치체제, 사회체제, 법률과 제도의 효용성이 있는 부분을 수렴하는 일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같은 체제수렴현상은 20세기 중반 이후에 계속되어 온 일이지만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일종의 시대정신으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남과 북 사이에서도 체제의 선전적 경쟁보다는 상대체제의 장점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일기도 하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의 내용에서는 이데올로기와 체제를 수렴하는 시대정신을 수용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일은 이데올로기나 체제를 수렴하는 목표는 인민들의 삶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풍요롭게 완성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렴을 위한 수렴”은 허구적인 정치행위일 뿐, 민생을 위한 현실적 실천과는 거리가 있는 일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데올로기교육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두 체제가 현대의 민족적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이상과 기능을 실천적으로 발굴하여, 모든 민족이 이데올로기의 독선에 흐르지 않고 시대의 변화된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혁하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정한 이데올로기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연구하고 그것을 고쳐 보고자 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데올로기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연구, 조사하는 일은 전문적인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통일교육에 있어서는 이데올로기들의 순기능을 서로 발견하게 하므로써 이데올로기보다 삶, 또는 민족이 앞선다는 생각을 갖게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⑤같은 예술의 향유

통일교육이 민족의 동질적 연대의식과 동료애적인 “이웃사랑”을 길러야 한다고 볼 때, 그 교육내용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사람의 감성에 호소하는 교육이다. 앞에서 말한 몇 가지의 교육내용이 사람의 이성에 호소하는 지적인 교육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교육은 완전한 교육에 이르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감성에 호소하는 교육은 무엇을 내용으로 할 것인가? 그것은 우선 예술의 여러 형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특히 통일교육의 과정에서는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많이 만들어 보급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의 노래주제는 정치적인 것을 피하고 자연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나라의 땅에 대한 찬미, 혹은 앞서 말한 바의 옛날 우리 민족의 영토에 대한 향수 등을 주제로 삼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함께 부르고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이 있다면 의식의 연대는 훨씬 빨리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같은 도안으로 만들어진 문구류나 의상을 교육과정 중에 사용하므로써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연대의식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⑥생각바꾸기 훈련

특별한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은 결국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게 하는데 있다. 사람이 지식을 쌓아가는 일과 생각을 바꾸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을 쌓은 만큼에 비례해서 그만큼 좋은 행동을 하

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것은 사람의 행동과 생각의 연관을 통제하는 정신의 기능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는 만큼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지식을 통제하는 정신의 기능이 “이성”이라고 한다면 행동을 통제하는 정신의 기능은 “덕성(德性)”이라고 할 수 있다⁹⁾.

그러므로 교육의 궁극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덕성을 함양하는 교육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덕성을 함양하는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각바꾸기”의 훈련이다. 여태까지의 모든 교육과정 가운데 “생각바꾸기의 훈련”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교육자가 피교육자와 상담하므로써 피교육자가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적으로 피교육자 개인의 우연적인 자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생각바꾸기 훈련의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판단을 요구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그 사태를 해결하려는 여러가지 방안을 스스로 제출하게 한 다음 그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판단을 그 때 그 때마다 학생(피교육자)들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의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다¹⁰⁾. 이 때 피교육자에게 제시되는 사례는 실제적이거나 역사적인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허구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로 사례가 제시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¹¹⁾. 실지의 사실을 놓고 학생들이 판단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생한 사례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통해 관련되는 생각의 방법이야말로 참으로 사람을 사람다웁게 하고,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3. 통일교육의 주체와 대상

통일교육은 민족적 의식과 정서의 연대성을 높이려는 한시적인 교육이다. 또한 통일교육은 사람의 이성, 감성, 덕성의 모든 부분을 움직여 한민족 통일국가의 화합된 국민을 양성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은 한민족이 통일되기 이전인 지금부터 통일 이후의 필요

한 기간 동안 지속될 수가 있을 것이다.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전지역과 국외의 교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국내외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에게 통일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남북한의 통일은 전세계의 여러 곳에 살고 있는 한민족 모두의 문화와 역사에 하나의 큰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남과 북의 정부가 합의하여 별도의 통일교육기관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통일교육기관은 앞서 제2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통일교육의 교과과정을 우선 마련한다. 이 때 남과 북의 정부는 같은 수로 위원을 파견하여 통일교육을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구에서 마련한 통일교육의 교과과정은 남과 북의 학교교육을 통해서 일정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유치원에서 대학과정에 이르는 각 단계에 알맞는 교육과정이 서로 짚이를 달리한 것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여러가지 사회교육기관을 통해서 통일교육을 보급 할 수 있다. 학생이 아닌 전체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기관을 남과 북, 그리고 국외 교포 거주지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나아가서 통일교육의 교과과정을 기초로 편성한 별도의 제작물을 신문, 텔레비전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급할 수 있다.

물론 학교교육, 사회교육, 대중매체를 통해 보급되는 통일교육의 내용은 남과 북 어느 지역에서나 같은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남과 북, 양측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통일교육의 예산은 양측 정부의 공동부담으로 하되 인구 등 여러가지의 기준을 세워 부담의 비율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통일교육의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남과 북의 두 정부가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일을 요하는 경우에는 남, 북 이외 지역의 민족적 단체들이 우선 부분적으로라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고려학회와 같은 기구는 통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단체라고 할 것이다.

4. 통일교육의 정신

통일교육이 한민족의 통일을 전후한 한시적인 교육이라 하더라도 그 것의 정신이 한시적인 전략의 차원에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것은 세계사적인 문제의식을 안에 품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민족의 통일을 단순히 지역문제의 해결의 측면에서 이해하지 않고, 세계사의 진일보한 상황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개념정립의 단계에서부터, 한민족의 통일이 세계문제의 해결이라는 의미와 연관시키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러가지 영역에서 세계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한민족의 통일이 그 영역에서 세계문제 해결과 연관된다는 점을 정립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철학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면, 한민족의 철학적 자유를 적극적으로 거듭 생각해 보아 철학개혁의 근본원칙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¹²⁾. 이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면 한민족의 문제해결은 세계문제의 해결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한민족의 통일이 폐쇄적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를 탄생시켜 세계불안의 한 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¹³⁾.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한민족의 통일이 세계문제 해결에 공헌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결 론

한민족의 통일교육을 위한 남북한 정부의 합의는 여러가지 정치적 현안문제의 장애로 인하여 그 실현가능성이 당장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 또는 통일과정에 있어서 민족의 삶이 실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민족의 통일이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양자택일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한다면, 그것은 폭력적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양자택일의 문제제기 형식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대사회가 다원화된¹⁴⁾ 상황에서 그러한 문제제기 형식은 이미 적절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말았다. 양자택일 형식의 질문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철학적으로도 논의된 바 있다¹⁵⁾. 즉 사람은 정신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물질적인 존재이며, 물질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철학적으로 보거나 사회적으로 보거나 간에 양자택일의 형식은 그르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통일교육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교육은 단순한 정치적 협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고 보면 남북의 정치적 당국이 통일에 관한 여러가지 협상절차의 맨 처음에 통일교육문제를 포함시켜야만 실질적인 평화통일의 의지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나아가서 통일의 문제를 개혁적이고 발전적인 역사의 과정 위에 놓고 접근하는 것이야 말로 철학적 실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통일에 대한 남북간의 협상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주고 받기식의 토론이 아니라 민족적 삶의 역사적 위상을 높히는 성찰을 밑바닥에 깔고 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철학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한 구체적인 역사행위는 남북한 당국이 통일 교육에 대한 합의로 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학회에 참가하고 있는 남북의 학자들이 남북의 정부에 대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철학교육을 위한 기구를 만들자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제출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러한 건의도 통일을 위한 우리들의 실천적 노력이 될 것이다.

〈주〉

- 1) 특히 렛싱이나 엘베슈스의 견해를 유의할 수 있다.
- 2) 김도종, 역사철학의 견지에서 본 민족과 통일(한민족철학자대회 보, 1991, 한국철학회, 38-40쪽 참조).
- 3) 김도종, 같은 논문, 41-42쪽 참조.

- 4) 김도종, 같은 논문, 45-47쪽 참조.
- 5) 한겨레신문, 93.1/21, 1/27, 2/3일자, 인병선의 보고.
- 6) 오늘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지역을 달리하고서도 같은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으나 민족의 성립은 동일한 거주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7) 이 문제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연구가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다.
- 8) 필자는 한민족을 갈라놓은 두 체제가 민족의 자연스러운 역사적 성장을 통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 시대로부터 비롯된 외국세력의 영향 아래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민족사의 견지에서 이데올로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김도종, 정치가와 기업가의 사회적 역할. (현대의 윤리적 상황과 철학적 대응, 제5회 한국철학자 연합대회보, 1992), 610-613쪽.
- 9) 김도종, 기론(氣論)적 역사철학. (한국사상사학 2집, 한국사상사학회, 1988), 121-122쪽 참조.
- 10) 철학교육에서도 요구되는 “사고훈련”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 11) 마오쩌뚱도 사회의 실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하므로써만 사회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모택동선집(조선문), 제3권, 민족출판사, 베이징, 1992판, 1001쪽 참조.
- 12) 김도종, 한민족의 사유방법과 철학개혁의 근본원칙. (국제고려학회 소장학자 대회 발표문, 1991)참조.
- 13) 도이칠란드가 통일된 후 극우적 민족주의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 14) P.F.Druker(김용국 역), 새로운 현실, 시사영어사, 1989, 93-128쪽 참조
- 15) 전원배, 역사철학, 원광대 출판국, 1983, 서론

*이 글은 1993년 8월 28일-31일, 베이징에서 국제고려학회가 주최하는 『통일을 지향하는 언어와 철학』학술회의에서 발표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고이다.

민족자주의 원칙과 조국통일

김 현 철

저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분별된 조국을 넘겨준다면 역사와 후대들 앞에 죄를 짓게 될것입니다.》라고 하시며 《조국통일문제때문에 나는 늙소. 통일만 되면 나는 10년은 더 짊어질것같소.》라고 하신 말씀에 강렬한 충격을 받고있는 학자로서 남조선학자선생들과 허심탄회하게 통일문제를 논의하고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생각으로부터 《민족자주의 원칙과 조국통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려고 한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이며 더는 지체할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수천년동안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우리대에 와서 둘로 갈라져 민족적고통을 당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외부세력에 의하여 빚어진것이다. 외세는 우리 민족의 분단과 그 고착화의 주되는 요인이다.

민족의 분별을 극복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자체의 주권에 따라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떠나서는 조국통일에서 나서는 그 어떤 문제도 우리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해결할수 없다.

1. 민족자주의 원칙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

민족자주의 원칙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1993년 신년사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은 양보할수 없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입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옹호하며 민족의 운명을 민족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원칙이다. 다시 말하여 민족자주의 원칙은 온갖 민족적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이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기 위한 행동원칙이다.

민족지상의 과제인 조국통일은 반드시 민족자주의 원칙을 근본원칙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원칙을 떠나서 조국통일에 대하여론의 하는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우롱하는것으로 된다.

민족자주의 원칙이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

첫째로, 그것이 조국통일문제의 본질과 성격을 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조국통일은 본질에 있어서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이며 북과 남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것이다.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한측면으로는 민족외적요소와 관련된것으로서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것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민족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문제이다.

현시기 민족적자주권이 짓밟히는 주되는 사회적근원은 외래제국주의에 의한 민족적역압이다. 이로부터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에 의하여 산생된 모든 민족문제는 본질상 민족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민족의 자주권은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고 령토가 완정되어있는 조건에서 보장될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분렬되어있다.

이로부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는 우리 나라 통일문제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내용으로 되는것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다른 한측면으로 민족내적인 문제로서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 단합을 이루하는 문제이다.

민족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전일체인 것 만큼 단합되고 단결되어야 창조적 위력을 가질 수 있으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있다.

하나로 단합된 민족만이 그 무엇으로 써도 건드릴 수 없는 커다란 힘을 가진 강한 민족으로 될 수 있다.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단합시키는 사업이다. 조국통일이자 그것은 민족적 단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통일 국가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에 있어서 국토량단과 민족분열은 민족적 재난과 고통의 근원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민족적 단합을 이루는 것은 민족적 생명의 전일성을 회복하고 자주독립국가의 체모를 완전히 갖추기 위한 것으로서 민족의 사활적 요구로, 조국통일 문제의 본질적 내용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조국통일 문제의 이러한 본질로부터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으로 된다는 것이다.

조국통일 문제는 그 성격으로 볼 때 민족내부문제, 민족의 내정 문제이다.

조국통일 문제가 민족내부문제로, 민족의 내정 문제로 되는 것은 그것이 민족분열의 역사적 근원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분열의 역사는 분열된 다른 나라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난날 독일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나라로서 전쟁의 종결과 함께 전승국들의 통제 밑에 놓이게 되었으며 국제협정에 따라 영토와 민족의 분열이 불가피한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지난날 남을 침략한 나라도 아니고 전패국도 아니다.

우리 나라가 분열된 것은 전적으로 분열을 조장하고利用하려는 외부 세력의 간섭으로 초래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통일 문제는 그 어떤 외세의 간섭을 받아

야 할 아무런 리유와 근거가 없으며 또 외세의 간섭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국제적협정에 따라 분렬된 나라들의 통일문제와 그 성격이 다를뿐아니라 다민족국가들에서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문제와도 그 성격이 다르다.

다민족국가들에서의 국가적통합에 관한 문제는 각이한 민족들이 하나의 통일국가으로 련합하는 문제로 제기된다. 다민족으로 구성되어있는 나라들에서의 국가적통일은 민족의 통일이 아니라 각이한 민족의 련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렇기때문에 다민족국가들에서의 나라의 통일문제는 특정한 민족의 내부문제로 되는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민족호상간의 문제로 제기된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래부터 하나이던 민족과 하나의 국가였던 것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민족간의 문제나 국가간의 문제가 아니다.

조국통일문제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의 태두리안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로서 우리 민족의 리익과 번영을 위한 순수 민족적성격의 문제이다.

이와 같이 민족자주의 원칙은 조국통일문제의 본질과 성격으로 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이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둘째로, 그것이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의 리익에 맞게 민족자신의 힘으로 할데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조국통일을 민족의 리익에 맞게 민족자신의 힘으로 하는것은 민족의 자주적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다.

우리 민족이 자기의 자주적리익에 맞게 그리고 자신의 독자적인 힘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여야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다하는것으로 된다.

민족의 분단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오직 통일의 주인인 우리 민족의 요구와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이것은 우리 민족의 권리에 관한 문제이다.

조국통일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처리해야 조국통일을 가장 빠르게 철저히 실현할수 있다.

매개 나라와 민족은 언제나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자기문제를 자신의 요구대로 하지 못하는것은 주인으로서의 권리 를 빼앗기는것이다.

조국통일위업은 우리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실현되어야 할뿐아 니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는것은 조국통일의 주인으로서 의 민족의 책임을 다하는 문제이다.

사람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를 가지고있을뿐 아니라 그것을 자체로 실현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있는것처럼 민족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와 그것을 자체로 실현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있다.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남의 도움을 받을수 있지만 기본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의 힘이다. 조국통일의 주인인 우리 민족이 일떠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의 지지성원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남의 강요에 의하여 하는것은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것이며 이것은 부끄럽고 수치 스러운 일로 된다.

그러므로 남의 힘에 의존하여 가지고서는 언제가도 조국통일을 실현 할수 없으며 결국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애국렬사 리준은 외세에 의존하는것은 망국의 길이며 오직 자주성을 지키는것만이 민족의 독립과 번영을 이룩하는 길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남겨놓았다.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한 애국지사인 리준은 일제놈들의 침략책 동으로 날을 따라 더욱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해서나 건져보려고 무진 애를 써가며 맹렬히 활약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거기에 의거해야 일제놈들과 싸워이길수 있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킬수 있다는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헤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여 큰 나라들의 지지를 받는것이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고 유일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황제의 밀사로 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그랬으나 그는 이국땅에 애국충정으로 끓어번지던 뜨거운 피를 뿐 려 잊을수 없는 역사의 교훈을 남겼을뿐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이것은 나라의 독립도, 민족의 자주성도 남의 힘이 아니라 오직 제힘으로만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이처럼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데 따라 조국통일의 실현이 결정되며 민족의 운명과 번영이 좌우된다.

2. 민족자주의 원칙의 리론적기초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인 민족자주의 원칙은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에 리론적기초를 두고있다.

주체의 사회력사원리는 민족의 생존과 그 발전에 관한 원리에 대하여서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첫째로, 자주성이 민족의 생명이라는 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주체철학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인것처럼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인 민족에게 있어서도 자주성이 생명으로 된다는 것을 밝혀주고있다.

자주성이 없으면 민족은 독자적인 사회적집단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을 가지고 존재하고 발전 할수 없다.

민족이 자주성을 잃으면 독자적인 신념과 주견이 없이 남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되며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면할 수 없다.

민족은 자주성이 있어야 민족적예속과 억압을 받지 않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지켜낼수 있으며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과 무궁한 번영을 이루어나갈수 있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바로 자주성이 민족의 존재와 발전을 규제하는 생명이라는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둘째로, 인민대중의 자주적 활동이 민족집단의 생존과 그 발전의 기본방식이라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민족은 자기의 고유한 방식으로 활동하면서 민족의 생존을 보장하며 사회를 발전시켜나간다.

자주적 활동이 민족집단의 생존과 발전의 기본방식이라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족의 자주적인 활동방식이 발전해나가는 과정은 곧 민족의 자주성이 증대되고 실현되여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자주적 활동을 떠난 민족의 생존과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민족은 자주적 활동을 민족생존의 기본방식으로 하고 있다.

민족은 자주적으로 활동하여야 다른 민족에 예속되거나 동화되지 않고 자기의 고유성을 유지보존할 수 있으며 독자적인 생활의 공동체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빛내여나갈 수 있다.

민족의 자주적 활동은 민족의 동질성을 보존하게 하며 그 공고성을 담보한다.

자주적 활동은 민족의 생존과 함께 그 발전의 기본방식으로 되고 있다.

민족이 발전한다는 것은 민족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민족이 발전한다는 것은 민족의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민족의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은 민족의 자주적 활동과정에서 발전하게 된다.

민족은 독자적인 사고력을 발양하고 자기의 주견과 신념에 따라 모든 문제를 처리해나가며 자신의 힘에 의거하여 투쟁해나갈 때 자주적인 사상과 주체적인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자주적인 정치를 실시하고 자립적인 경제를 건설해나갈 수 있다. 민족성원들의 존엄 있는 정

치생활, 행복한 경제생활, 건전한 문화생활은 민족의 자주적활동에 의하여 담보된다.

자주적활동이 민족집단의 생존과 발전의 기본방식이라는 주체철학의 리해로부터 민족자주의 원칙이 흘러나오는것이다.

이러한 민족자주의 원칙은 우리 나라에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진보적인 사상인 민족주의로, 애국주의로 표현되게 된것이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민족자주의 립장을 확고히 지나셨기에 자신을 《나는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이고 국제주의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늘 참다운 애국자만이 참다운 민족주의자가 될수 있다고 강조하신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이러한 위대한 주체적민족관은 1948년 4월 남북련설회의때 김구, 김규식선생에 대한 잊을수 없는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주신데서 표현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련락원을 통하여 김구, 김규식선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였다.

나라를 잃었던 과거사는 실로 가슴아픈 사연들을 한두가지만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김구, 김규식선생들이 애국의 길로 나가려는 지금에 와서 누가 그분들의 과거를 물으려 하겠습니까. 우리도 물으려 하지 않거니와 먼 후대들도 물으려 하지 않을것입니다.

남북련설회의는 원래 4월 14일에 열릴 예정이였는데 며칠간 연기해 달라는 김구, 김규식선생들의 요청을 고려하여 4월 19일에 열리였다.

그리하여 남북련설회의는 북과 남의 애국적,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 할데 대한 구국대책을 강구한 역사적인 민족단합의 대회합으로 되었다.

3.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학자들의 과업

우리는 근 반세기에 걸치는 민족분단과 대결의 혁사를 끝장내고 온

민족의 한결같은 넘원인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민족자주의 원칙을 구현해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과학연구활동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사회의 정신생활에서 선도적역할을 하는 학자, 지성인들의 책임이 특별히 크다.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학자들이 무엇보다도 민족의 모든 성원들을 민족자주정신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민족자주정신으로 무장될 때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조국통일의 주인으로서의 자각과 조국통일을 자신의 힘으로 실현하는 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테리로서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우리 지식인들은 통일을 갈망하는 민족성원들의 신임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자신들을 민족자주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함으로써 조국통일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사고하고 실천하며 모든 것을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 지식인들은 민족자주정신으로 자신을 무장할뿐아니라 광범한 민족성원들을 민족자주정신으로 교육교양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저작 및 여러가지 학술활동과 교육 및 여러 형태의 상담 등 다양한 형식과 활동으로 민족의 모든 성원들에게 민족자주정신을 심어 주어 온 민족이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해야 한다.

이러한 영예롭고 책임적인 사업은 오직 우리 지식인들만이 할 수 있다.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학자들이 다음으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반대하고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긍지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큰 나라, 발전된 나라를 섬기고 숭배하는 사대주의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스스로 낮추보고 멸시하는 민족허무주의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존엄을 지켜낼 수 없게 하므로 결국 나라와 민족을

망하게 한다.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다는 것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명언이다.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에 물젖으면 남을 떠받들고 남에게 추종하게 되며 독자적인 사고력이 마비되어 옳고 그른것도 가려보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바람부는대로 움직이면서 남이 수정주의를 하면 자기도 수정주의를 하고 남이 교조주의를 하면 자기도 교조주의를 한다.

우리는 지난날 우리 나라의 역사와 최근 여러 나라들에서 사대주의에 물젖어 남이 하는대로, 남이 시키는대로 머저리처럼 행동하다가 나라를 망하게 한 폐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사상을 뿌리빼고 민족자주의식으로 철저히 무장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우리 지식인들은 후대들을 위한 교육과 여러가지 문필활동을 통하여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의 해독성을 역사적인 사실자료를 가지고 꼭로해야 하며 특히 민족성원들에게 공미승미사상으로 나타나고있는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조국통일위업수행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있다는것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에는 공백이 있을수 없다.

우리 지식인들이 사람들속에서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뿌리빼주면 그만큼 사람들은 민족자주의식으로 무장될수 있다.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없애자면 민족성원들로 하여금 민족적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지식인들은 모든 민족성원들이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못지 않으며 우리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수한 민족이라는 자존심과 긍지를 갖게 하여 그들을 열렬한 민족애로 충만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조국통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구현하여나갈수 있다.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학자들이 또한 모든 민족성원들로 하여금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자기의 것에 정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옮겨놓는 교조주의는 사물현상에 대한 창조적 립장이 결여된데로부터 그것을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고립되고 고정불변한것으로 고찰하고 처리하는 비과학적인 사고방식이다.

교조주의에 물젖으면 독자성과 창발성이 마비되어 조국통일위업에서도 주인다운 태도를 발휘할수 없고 민족자주의 원칙을 실현할수 없게 된다.

교조주의를 극복하자면 무엇보다도 자기의것에 정통하여야 한다.

자기의것에 정통한다고 할 때 그것은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에 대하여 잘 알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자기 민족과 인민의 자랑찬 역사와 찬란한 민족문화, 자기 민족이 이룩한 창조물들을 잘 알아야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조국통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민족의 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또한 자기 나라의것을 잘 알아야 민족의 지향과 요구,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조국통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옳게 세우고 그것을 구현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지식인들은 조국통일의 담당자인 민족의 모든 성원들에게 조선의 역사와 지리, 경제와 문화, 조선인민의 풍습을 잘 알려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자신들이 조선의 애국자, 조선의 참다운 민족주의자가 되여야 한다.

자기의것을 모른다는것은 곧 자기의 힘을 모른다는것이며 자기의것을 모르면 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통일할 생각도 가질수 없다.

물론 남의것을 아는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남의것을 연구하는것도 우리 민족의 문제를 잘 해결하자는목적이 있다.

자기의것을 모르면 남의것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그것이 우한거리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지식인들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민족성원들이 교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우리 나라의 것, 조선의것을 잘 알고 조국 통일문제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환경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풀어나가도록 그들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우리 민족의 모든 지식인들은 주체적민족관에 확고히 서서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조국통일위업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족성원들을 자주의식화하는데서 교육교양자, 선전선동자, 기수가 됨으로써 인민의 사랑을 받는 과학자, 인테리가 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지식인들이 전체 조선민족의 최대의 소원이며 절박한 과업인 조국을 통일하는 위대한 성업에서 한몫을 담당함으로써 역사와 민족앞에 공헌하여 자기의 삶을 영원히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統一의 哲學과 哲學의 統一

이 삼 열

우리가 말하는 統一이라는 것이 1945년 이래로 분단된 한반도의 민족과 국가를 재결합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과연 통일의 철학이 필요하며 또 가능할 것인가? 미·소 양대국의 분할 점령으로 시작된 38도선의 분단과 6. 25전쟁으로 고착된 남북의 분단을 통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강대국들과의 국제정치적인 협상이나, 남북의 정권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합의를 하면 될 것이므로 통일의 정치학이 우선 필요하지 무슨 통일의 철학까지 요구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사실상 이제까지 통일문제는 정치학도들의 전유물이었으며, 기타의 학문들은 통일 이후의 경제를 어떻게 할것이냐를 논의하는 정도의 고찰로 부수적인 학문 연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특히 철학은 현실정치적인 문제보다는 과학의 논리나, 인식의 방법 같은 순수이론적인 문제에 몰두해 왔었기 때문에 통일 문제 같은 것을 철학이 연구대상으로 논의해 볼 여지는 거의 없었다. 현실정치에 관여했던 철학도 反共이데올로기에 지배되어 왜 공산주의를 물리쳐야 하는가에 정치이념을 제공하기에 바빠지 진정 쿄 남북이 함께 살며 통일을 이루는 가능성과 원리에 관한 철학적 모색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별로 눈에 띄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상 1945년의 민족분단은, 그것이 外生的 要因(exogene)에 의한 것이었든지, 혹은 內生的 요인(endogene)에 더 뿌리를 박은 분단이었든지 간에, 강대국의 힘에 의한 분단만이 아니었으며, 그 강대국과 우리민족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 이데올로기들이 나눈 분단이었고, 나아가서는 정치이념들을 밀반침해주고 있었던 철학의 분단에서 연유한 결과였음을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해방당시에 자

유민주주의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우리 학계의 인식수준은 보잘것이 없었고, 그것도 이념과 철학에 관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나라를 가른 것이 아니고, 정치권력에 의해 강제로 쪘워진 분단이었기 때문에 철학이나 사상계가 책임져야 할 분단은 아니였지만, 적어도 남북의 분단이 이데올로기의 가치관에 근거를 둔 분단이었다는 점에서 철학이나 사회사상이 전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철학과 사회과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한반도의 분단과 분단유지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정치적 권력에 의한 분단이 이념과 사상을 명분으로 강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 이데올로기들을 철학적으로 비판함으로써 분단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한다. 둘째는 분단이 강행된 이후 국토와 민족이 반쪽으로 나뉘었을 뿐아니라 사상과 철학도 반쪽으로 나뉘어 불구하고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단체제속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정치권을 비호하는 데 이바지했으며, 이를 극복하거나, 반쪽이 된 사상과 철학을 온전하게 복원시킴으로써 민족분단의 고통과 상처를 아물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러한 분단극복의 노력은 분단시대의 반쪽이된 분단철학으로부터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사실상 통일이라는 것이 비합리적이며, 절대적이고 비인도적인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며, 남북과 좌우로 갈라진 것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과정이라면, 통일을 이루하는 원리와 방법을 주는 통일의 철학도, 분단을 유지시키고 심화시켜온 철학을 극복하고 지향함으로써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0여년동안 남북양쪽에서 가르쳐지고 연구되어 온 철학이 분단시대의 산물이며 분단이데올로기에 종속되거나 영향을 받은 분단의 철학(devided philosophy)이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얼마만큼 반성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향하는 진로로서의 철학은 그런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남북에서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철학은 그렇게 제한된 것이었으며, 반쪽만을 갖도록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왜곡될 수 밖에 없었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자인해야 할 것이다. 철학의 분단성은 우선 철학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북쪽에서 Kant나 Kierkegaard,

Wittgenstein이나 Heidegger가 얼마만큼 자세히 객관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남쪽에서의 철학사 교육을 보면 Marx나 Lenin, 유물론이나 사회주의 사상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혹은 왜곡되어서 소개되어 있는 경우를 너무나 흔하게 본다. 북쪽이나 사회주의권에서 보는 관념론 철학에 대한 견해나 비판을 알려고 해도, 책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오히려 호기심만 확대되어 판단을 흐리게 하며 우리의 철학적 연구를 멍들게 하거나 불구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철학은 토론과 비판의 자유 없이는 발전할 수 없는 학문으로, 분단체제의 이념적 억압과 통제가 자행되는 상황에서는 철학이 온전하게, 객관적으로 발전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철학의 상당한 부분이 다른쪽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적대하는 무기로서 이용되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철학의 발전을 기대해 보기 어렵운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것은 오늘날 통일이 된 독일에서 분단시대의 철학이 얼마만큼 지배 이데올로기에 종사했으며 반쪽으로 불구의 철학이 될수 밖에 없었던가를 반성하는 연구에서도 잘 나타내고 있다". 우리 남북관계보다는 훨씬 비적대적이었고, 정치적 억압도 적었다고 생각되는 동서독에 있어서도, 양쪽의 철학 교과서는 많은 편견과 왜곡과 적대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세계관과 이데올로기 전쟁의 주무대가 된 동·서의 철학들은 서로를 "부르조아철학" "빨갱이 철학"으로 매도하며 정치적인 분단과 대결을 합리화시켜주는 도구의 역할을 했던것이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따라서 통일이 갈라진 민족과 국토의 통합만이 아니라, 갈라지고 적대시 되었던 사상과 이념과 철학의 화해와 통합을 의미한다고 할때에 통일의 철학은 먼저 왜곡되고 불구가 된 분단의 철학을 비판, 극복하고 온전하게 복원시켜야 하며, 그리고 남북 양쪽의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와 함께 대립된것으로 나뉘어져 있는 남북의 철학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통해서라야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과 철학의 대립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와 민족의 통일은 곧 이념과 철학의 통일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

며, 통일의 철학은 철학의 통일 없이 성립될수 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갈라지고 적대시되던 철학과 이념들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함께 포용할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철학과 이념이 있어야 한다. 이점에서 통일의 철학은 분단의 철학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이며 적어도 양쪽의 대립된 철학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철학이어야 한다. 자유와 평등이 갈라져 있는 분단상황에서 통일의 철학은 양자를 함께 수용하여 결합시키는 것이어야 하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된 남북의 체제를 통일하는 이념과 철학은 양쪽 이데올로기의 차이와 대립을 지양시키며 통합해가는 변증법적 통일의 철학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과연 이런 통합이 가능하며,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불확실성과 혼란으로 가득찬 통일을 구태여 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과 반론에 부딪친다. 차라리 분단된 두개의 국가와 체제속에서 공존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굳이 모든 민족이 하나의 국가와 체제속에 살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상당히 있다. 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물과 기름과 같아서 양자를 같이 살리며 통일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고, 통일이 된다면 베트남이나 독일에서 보듯이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 통합하는 방법 밖엔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

바로 이와같이 통일에 관한 여러가지 다양한 견해와 방법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에 관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의 철학은 바로 왜 한반도에서 분단된 양쪽은 통일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어떠한 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라는 전망(Vision)을 보여줄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의 철학은 단시일에 급조될수 없는 것이며, 또 몇 사람의 지혜로서만 만들어질 수도 없는 것이다. 통일을 갈망하는 민족전체의 염원과 이상들을 담아내면서, 현실적으로 실천해갈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도여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남북한 정부당국에서 내놓은 통일 방안들을 보면,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 민족 구성원들이 함께 토론하여 만든 방안이며 설계도냐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철학적 문제들을 설명하며 해답해 주기에는 너무나 막연

하며 불충분한 내용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그것이 민족 공동체 방식의 통일이든,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든 간에 통일된 나라에서의 민주주의는 어떤 원칙과 구조를 갖는 것이며, 경제제도는 어떻게 사회정의와 민중의 복지를 실현하며, 문화적 전통과 종교, 교육, 언론 노조와 정당 그리고 여성의 문제는 어떠한 이념과 원칙 하에 재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논의와 방향정립(Orientierung)이 없이는 통일의 당위성과 목적을 설득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과연 원칙이 없이 타당한 방법과 방안이 나올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비록 통일의 방안과 개념들은 갈라져 있고, 당장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방향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불가능하다든가, 언제까지 통일을 이루겠다든가의 통일 기피론이나 연기론에는 동의를 할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의 분단 상태나 분단의 채제는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것이며, 보다 큰 모순과 전쟁을 낳을 수 있고 하루 속히 이 적대적이고 반평화적인 분단이 극복되지 않으면, 남북 양쪽에 민주적이고, 정의로우며,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세울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이 우리민족에게 가장 급선무로 요청되는 과제라고 주장하는데는 막연한 민족주의적 감상주의 때문에서나, 민족지상주의에서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해야 할 당위적 근거를 철학적으로 갖고 있기때문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통일을 외치면서 김유신의 삼국통일을 염두에 둔 것도 아니며 비스마르크의 독일제국 통일을 연상하는 것도 아니다. 전쟁을 통해 공산주의가 승리한 베트남식 통일도 아니며, 경제력을 통해 자본주의가 승리한 독일식 통일을 실현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통일을 지향하며,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당위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필자는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통일의 근거와 방향을 평화의 철학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왔다²⁾. 여기서 평화는 전쟁의 부재라는 소극적 의미에서만이 아니다. 갈등과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억압과 차별과 소외와 같은 구조적 폭력이 제거되는 적극적이며 포괄적인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화는 통일의 방법으로서도 중요한 것일뿐 아니라, 통일의 목적과 목표로서도 필수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철학이

다. 한 민족은 때로 갈라져 살 수도 있고, 통일되어 살 수도 있다. 그러나 평화가 없이 살 수는 없다. 분단되어서도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면 굳이 어려운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분단은 결코, 민족의 삶을 온전히 유지시키지 못하고, 갈등과 대립과 전쟁위협을 제거할 수 없으며, 정의롭고 인간적인 사회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즉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바로 통일의 근거와 목적을 평화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평화를 실현하거나 보장해주지 못하는 통일을 추구할 수가 없으며, 무조건 통일해 놓고 보면 된다는 통일만능주의도 찬성할 수가 없다. 통일해서도 온전한 민족의 삶이 보장되지 못하고, 갈등과 투쟁과 살상이 계속되며, 억압과, 좌취와 예속이 그대로 있는 통일이라면 구태이 통일을 지상의 과제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통일은 바로 평화를 실현하는 통일이어야 바람직한 통일이 되기 때문에 통일의 철학은 평화의 철학에 기초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2

그리면 이젠 평화가 실현되는 통일은 어떠한 통일이며 이러한 통일은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평화는 고대로부터 모든 민족의 언어와 문화, 종교속에 최고의 가치로서 모든 인간의 소망과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개념으로서 존재해 왔다. 그것이 Eirene 든지, Shalome이든지 Pax였던지 동양의 和의 사상이었든지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사이에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 즉 건강, 안정, 복지, 질서, 자유, 정의, 평등, 화해, 생명, 구원과 같은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거의 유토피아적인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토피아적인 평화는 인삿말이나 기도의 내용일 뿐 현실적으로 완전히 실현된 역사는 없었으며, 인간사회에서는 실현이 기대되기 어려운 내세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소망일 뿐이었다. 그렇지만 평화는 오랫동안 윤리적인 종교적 개념으로서 현실세계에의 반평화적인 요소들을 비판하며 제거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근세

에 와서 합리주의적 철학에 의해 평화문제가 다루어지면서 평화는 사회와 국가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사회철학적 역사적철학적 목표로서 정립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Hobbes와 Locke, Rousseau 등의 공적이 컸으며 특히 Kant의 영구평화론 (Zum ewigen Frieden)이 평화의 철학을 수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평화문제에 관한 사상사적 발전이나 19세기로부터의 사회적 평화운동,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과학적 평화연구가들의 이론을 빌려서³⁾. 평화를 실현해가는 구체적인 과정을 다음의 세가지 단계로 요약해보고자 한다. 1)먼저 평화는 인간의 삶과 발전을 해치는 물리적이며 현재적인 폭력과 전쟁을 없앨 때에 보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present violence). 2)다음으로 인간사회속의 갈등과 대립과 적대관계, 공격성과 같이 실제적 폭력과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폭력의 요소를 제거해야 보다 평화로워 질 수 있다(latent violence). 3)마지막으로 잠재적 폭력과 물리적 폭력의 원인이 되는 차별과 억압과 착취와 소외와 이로 인한 가난과 질병, 결핍과 같은 구조적인 폭력을 제거해야만 보다 완전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structural violence). 따라서 평화는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인권을 실천할 때 가장 잘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와같은 평화의 철학에 입각하여 우리의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 방법과 전략은 어떻게 세울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는 윤리적 개념이나 철학적(순수) 반성만으로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치학이나 사회학, 경제학, 군사학 등과 같은 여러 사회과학들의 도움을 얻어 함께 모색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의 철학이 홀로 대답할 수는 없다. 아마도 보다 실천적인 통일의 철학은 통일의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등과 결합된 종합적인 인식과 반성으로서의 철학이 이루어 질 때만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한반도에서 전쟁과 폭력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남북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며, 자유와 평등이 골고루 실현되는 민주적이며 사회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철학자나 사회과학자들간의 관심이나 과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성원 전체의 과제며 사명이다. 지식인이나

정치인들 뿐 아니라 통일의 문제는 노동자와 농민과 기업가와 상인들 노인과 청년 여성들, 모두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화를 실현해가는 세 가지 단계의 과제들을 놓고 전 민족적 차원에서 논의하며 합의해가는 토론과 협의의 장이 있어야 통일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해주는 실천적 통일의 철학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오늘의 남북관계의 실현과 주변정세의 변화들을 감지하면서 평화의 철학을 실현하는 통일의 방향과 실천의 과제들을 대략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 민족의 남북분단은 가장 기초적인 평화의 조건인 전쟁과 물리적 폭력의 가능성 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가장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대결과 긴장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핵전쟁의 가능성 까지 배태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관계는 주변 강대국들의 전쟁 뿐 아니라 세계대전을 유발할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것이다. 민족전체의 파멸을 자초할지도 모를 전쟁과 군사적 대결을 제거하는 일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시급한 우선적 과제여야 한다. 따라서 남북대화나 통일방안에서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40년전의 6.25전쟁을 아직도 종식시키지 않고 있는 휴전체제를 평화의 체제로 전환시키는 일이며, 이를 위해 하루속히 평화협정과 불가침선언이 채택되어야 한다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외국군대를 어떻게 철수시키며, 핵무기를 어떤 단계로 철거하고, 어떤 나라들이 평화협정에 참여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남북군대의 숫자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문제와 함께 정치적 협상과 합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군사적 긴장과 현재의 대치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평화정착이 아니라, 이를 해체하면서 공동의 안보를 모색하는 평화체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평화체제는 군사적 대결문제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수립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음으로 평화실현의 다음 조건인 갈등과 적대감과 공격성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들어가야 한다. 민족이나 인종간에 종교나 지역, 계급간의 갈등과 적대관계는 흔히 대화와 상호이해, 교류협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

고 하나, 우리 남북간의 갈등과 대립은 이데올로기와 사상체제의 적대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념과 사상의 대립,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작업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난제로 남아있게 된다. 민족은 하나인데 이데올로기와 체제는 둘이어서 그것도 지나치게 적대적인 둘이어서 평화도 공존도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평화와 통일은 궁극적으로 남쪽의 자유주의와 북쪽의 사회주의, 남쪽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북쪽의 공산주의 통제경제, 남쪽의 시민적 의회민주주의와 북쪽의 인민 민주주의적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그리고 남쪽의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와 북쪽의 민족주체 혁명노선이 서로 공존과 대화, 화해와 타협, 통합을 모색할 수 있을 때만, 평화가 보장되며 통일의 가능성성이 열린다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어느 한 쪽의 이데올로기와 체제가 보다 우수하며 큰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이기거나 정복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그것은 우선 폭력과 전쟁을 수반해야 하며 남북의 적개심이나 대결 상황으로 보아서, 민족구성원의 상당수를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점에서는 결코 동서독의 분단상황과 같은 조건에 있지 않다. 민족 대부분이 죽거나 파멸되고 난 후에 자본주의가 이기면 뭘하고 공산주의가 승리하면 무엇에다 쓰는가? 다른 한편 우리는 남북의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비교해 볼 때 어느 한 쪽이 절대로 그릇된다는 판정을 할 수 없으며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상호 보완하며 교정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의 타율적인 분단은 우리의 사상과 철학도 반쪽으로 불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분단과 불구를 극복하면서, 양자를 변증법적으로 통합하면서 보다 완전하며 새로운 하나의 사상과 체제를 생산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아니 통일과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러한 변증법적 통일을 모색해야 하는 우리 민족은, 동서의 냉전체제가 해소되고, 이데올로기들의 경직성과 도그마가 해체되어 가는 오늘의 상황에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세계사적인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며 통일할 수 있는 위대한 창조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변증법적인 통합과 창조의 기회는 대화와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없이는 올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며 성급히 서두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페레스트로이카와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치적인 행운을 얻고 통일을 선사받은 동서독이 통일을 위한 준비와 토론을 하지 못하고 성급히 서둘러서 하게 된 것을 얼마나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뉘우치게 될 것인가? 흡수통합으로 자본주의식 통일이 되고 말았지만 동독의 국민들은 실업과 가난과 소외의 서러움을 당해야 하고 서독의 국민들은 고율의 세금과 인플레이션에 시달려야 하는 괴로운 짐을 상당히 오랫동안 져야 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독일은 제도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보다 새로운 것을 창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하겠다⁵⁾. 동서대결의 체제속에서 유럽의 평화를 위해서 분단을 감수해야 했고, 통일은 생각도 준비도 하지 못했던 독일이 준비없이 통일을 맞이한 것은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통일을 국시이자 최대의 과제로 40여년 동안 부르짖어온 남북한이 이토록 통일에 대한 준비와 토론을 빙약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이념적 통일을 모색해야 할 우리땅에서 남북의 사상계와 철학계는 얼마만큼 무슨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

이제와서 우리는 과거의 무관심과 무책임과 무능력을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라도 우리는 남북의 철학자와 사회과학자들 사상가들이 만나서 통일의 철학과 사상적 방향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연구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의 남북의 통일을 단계적으로 중간 과정을 거치면서 실천해가는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남북한 정부의 통일 방안들은, 그것이 남북연합의 단계든지, 고려연방제의 단계든지 간에 일단 양자를 공존 병행시키면서 통일을 추진하는 통일국가가 남쪽은 자유주의 민주국가여야 하고 북쪽은 인민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여야 한다고 고집하는데서 진정한 합의와 변증법적 통일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상계와 철학계는 이 중간단계를 거쳐 이룩해야 할 통일된 나라의 모습을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 발전과 대중복지가 함께 조화롭게 실현되는 방향에서 창

조직으로 모색해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평화의 철학의 세번째 단계인 구조적 폭력을 배제하며, 정의롭고 자유로운 평화의 체제, 인권과 사회정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성이 함께 실현되는 사회체제의 모색과 연결이 된다. 우리의 통일과업은 이 새로운 평화의 체제를 만들어 낼 때에 달성될 수 있으며, 통일의 철학은 바로 이 새로운 사회체제를 만들기 위한 이념과 철학들을 통일적으로 형성해 낼 수 있을 때에 그 사명을 다할 수가 있다고 본다.

3

그러면 과연 남북의 이질적인 이데올로기와 체제는 화해와 통합을 이룰 수 있으며 이를 밑받침하고 있는 남북의 철학은 통일이 가능할 것인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놓고 보면 서로가 너무나 적대적이며 경직되어 있고 비타협적인 도그마티즘에 지배되어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결코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허용하지 않으며, 사회주의 통제경제는 결코 사유재산제나 기업이윤의 자유화를 허락할 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서는 결코 프로레타리아의 계급혁명이나 독재를 용납할 수 없으며, 인민민주주의적 계급독재 국가에서는 부르조아 계급의 정치세력화나 복수 정당제를 인정하지 않는다⁶. 북쪽의 주체사상은 외국자본의 침투나 외국군대의 주둔을 허용하지 않으며, 남쪽의 개방사회는 민주집중제(democratic centralism)나 수령중심체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결국 남북의 현체제나 이데올로기가 변화 내지는 완화의 가능성이 없다면 양측의 타협이나 양보를 통한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사상도 이데올로기도 시대적 상황과 현실의 반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불변하는 것일 수는 없으며 시대의 변화와 함께 새롭게 변용될 수 있으며, 양적인 변화는 질적인 변화까지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대립물들이 상황과 조건의 변화와 함께 무수히 변증법적인 통일(Einheit)과 종합(Synthese)을 이루어 갔다고 Hegel과 Marx는 일찍이 역사철학을 통해 갈파하였다.

사실상 남과 북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정치철학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과연 남과 북은 각자가 표방하고 있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와 철학에 충실하고 있는가? 남과 북이 이념과 체제는 과연 소속된 국민들로부터 얼마만큼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얼마만큼 토론과 비판의 과정이 허용되고 있으며 개혁의 가능성이 있는가? 남과 북의 이념과 철학의 통일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부터 먼저 묻고 대답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철학과 이념이 무엇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기 전에는, 양자가 어떻게 통합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의 대답도 할 수 없겠기 때문이다.

원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19세기초 유럽에서 등장했을 때는 서로를 보완시키기 위한 것이었지 근본적으로 적대적인 가치관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 혁명의 구호였던 자유, 평등, 박애의 가치를 들고 나타난 자유주의가 시민계층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곧이어 나타난 노동자 계층의 권익을 똑같이 보호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대안적이면서 보완적인 이념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결코 자유주의는 자유 한 쪽만, 사회주의는 평등 한 쪽만을 택한 것이 아니고,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조화시키는 원칙과 방법이 계층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되었을 뿐이었던 것이다. 사회주의가 자유주의를 폐기하려 한 것이 아니고, 자유주의가 획득해 놓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개인의 자유권 위에 사회적인 권리, 작업과 경제적 혜택과 인간적 삶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해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재산의 공적인 통제를 부르짖고 나선 것이었다. 그안에 자유주의와 자유주의 철학에서 발전된 자본주의라는 경제제도는 사회주의의 비판과 제안들을 많이 수용하였으며 이미 19세기 후반에 와서는 사회적 자유주의(Sozialliberal), 사회민주주의(Sozialdemokratie) 등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자본주의도 분배의 균등을 국가가 통제하고 강력한 사회보장제도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하게 된 것이다⁷⁾. 오늘날 스칸디나비아식 사회민주주의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Sozialmarktwirtschaft), 영국의 사회복지제도등은 바로 사회주의의 비판과 제안을 수용하여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수정하여서 획득한 산물이

었다. 사회주의의 공헌이 없이는 이런 발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들은 복수정당제 속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공존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프로레타리아 계급의 독재를 통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소련과 동구의 나라들은 대체로 자유주의나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봉건적이며 전근대적인 나라에서 혁명을 통하지 않고는 시민적 자유도, 가난한 자들의 인권이나 평등도 사회보장도 획득할 수 없는 역사적 단계와 상황에 있는 나라들이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간 이들 나라들은 강력한 국가통제에 의해 어느정도 산업화와 평등 사회를 이루하였으나, 시민들의 자유나 인권을 신장시키거나 자유민주주의나 의회민주주의의 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오늘날 동구와 소련의 체제가 크게 변혁되고 난 이후 새롭게 등장한 페레스토이카나 사회주의 개혁정당들은, 한결같이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일당독재와 관료적 사회주의의 길로 나간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반성하며, 이것은 찌르지 배의 러시아가 가진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레닌과 스탈린이 불가피하게 택했던 길이었을 뿐이라고 술회하고 있다. 동독의 사회주의 연합당(SED)을 개혁하여 만든 민주적 사회주의당(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의 새로운 강령과 프로그램을 보면, “원래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유와 인권, 발전을 보장하는 사회 건설을 목표했었는데, 기존의 사회주의(Realsozialismus)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르게 결합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그 이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동구사회의 실패(Scheitern)의 원인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⁹⁾. 건전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발전이 없이는 중앙집권적 국가권력에 맡겨버린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사회주의는 효과적인 경제 발전도, 인민대중의 요구를 반영시키는 민주적 사회구조도 이루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60여년전에 이태리의 사회주의 사상가 Gramsci의 「시민사회와 해체모니」 논쟁에서 지적된 바였다¹⁰⁾. 오늘날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과감하게 민주화의 길과 복수정당제, 사회주의 체제내에서의 시장 경제 활성화, 그

리고 개인의 소유와 자유 확대 등을 시도하며 잊버렸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여 사회주의를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보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가 서로 수렴하면서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유럽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오늘날 이러한 변혁과 수렴을 시도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결합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한반도의 남북에 나뉘어 있는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왜 대결과 적대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대화와 공존과 화해된 통합을 시도하지 못하는가? 물론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특수한 상황이 있고, 남북은 각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서구의 원형(prototype)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그 역사와 발전 과정은 어쨌던 간에, 남과 북은 오늘날 현실적으로 사회체제가 가진 문제들과 민중들의 삶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이념과 체제를 수정하며 개혁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놓여있다. 남한사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삶의 권리를 골고루 보장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토지나 부동산과 생산수단과 금융자산을 무제한 독점소유케 하는 제도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고 북한사회는 인민대중의 생활향상을 위해서도 생산력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적 소유와 기업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시장경제의 조정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또 설불리 개혁을 서두른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다. 경제체제와 정치적 권력구조 그리고 사회구성체와 문화의식 또한 철학적 가치관이 함께 통합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깊이있게 체계적으로 검토하면서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통일을 지향하고 있고, 통일을 향해서 남북의 양체제와 이데올로기가 어느 정도 수정되면서 통합되지 않으면 안되는 당위성과 필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적 체제의 개혁을 통일의 과정과 단계와 변행시키면서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와같은 내부개혁을 남북이 오늘날처럼 군사적으로 대치하여, 핵전쟁이 공포와 위협속에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의 과제는 우선 전쟁과 침략의 가능성 을 배제하는 평화체제의 수립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이것은 남북이 유엔에 가입된 오늘의 상황에선 하루속히 추진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민족의 공동의 삶과 번영 평화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둔다면 남북의 체제나 이데올로기 그리고 철학의 적대관계는 극복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각자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면서 변증법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북쪽은 보다 더 민주적인 사회주의로, 남쪽은 보다 더 사회적인 민주주의로 변형 발전해 갈 때 우리 민족은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의 역사와 문화와 민족성에 맞는 하나의 새로운 이념과, 민주적인 사회체제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통일의 철학과 철학의 통일을 위해서 남북의 철학자들이 해야 할 과제와 사명은 至大한 것이며 또 偉大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주〉

- 1) Norbert kapferer, Das Feindbild der marxistisch-leninistischen pnilosophie in der DDR. 1945-1988, Darmstadt 1990.
- 2) 李三悅, 平和의 哲學과 統一의 實踐, 서울 헛빛출판사. 1991.
- 3) Johann Galtung, Dieter Senghaas, Lars Densik, Georg picht 등
- 4) 이삼열,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군축의 방향, 씨알의 소리, 1990년 5 월호
- 5) Jürgen Habermas, Die nachholende Revolution, Suhrkamp 1991
- 6)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정치이론,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5
- 7) Thomas Meyer(hrsg), Liberalismus und Sozialismus, Marburg 1987
- 8) Gregor Gysi, Wir brauchen einen dritten Weg. Programm der PDS, Hamburg. 1990
- 9) Antonio Gramsci, Utopie und Zivilgesellschaft, hrsg, von Uwe Hirschfeld, Berlin 1990
- 10) Norberto Bobbio, Which socialism? Cambridge 1988. Roberto Mangabeira Unger, Socialtheory, New York, 1987

집필자 소개

김진우
UNIV. OF ILLINOIS 교수(미국)

김철양
조선대학교 교수(일본)

김민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대한민국)

최기호
상명여자대학교 교수(대한민국)

박갑수
서울대학교 교수(대한민국)

김동찬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실장(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영근
서울대학교 교수(대한민국)

심재기
서울대학교 교수(대한민국)

심병호
국어사정위원회 서기장(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광
고려대학교 교수(대한민국)

김영두
원광대학교 교수(대한민국)

김삼용
원광대학교 교수(대한민국)

박승덕
민족문제연구회 회장(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상현
민족문제연구회 회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도종
원광대학교 교수(대한민국)

김현철
민족문제연구회 회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삼열
충실파당 교수(대한민국)

國際高麗學會學術叢書3
통일을 지향하는 언어와 철학

1995年3月20日 初版第1刷発行

編・発行所 国際高麗学会
〒581 大阪府八尾市樂音寺6-10
大阪経済法科大学
TEL 0729-41-8211

印刷 KBS(株)
© 1995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Printed in Japan

ISBN 4-906552-00-5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ISKS)

ISBN4-906552-00-5